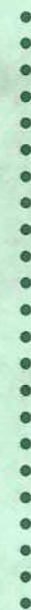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3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 호
(제201~300호)



1995. 4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 호 1995. 4

인권정보자료실
R1.1.3

민권운동사랑방



- 1면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대학원학력자, 89년 3월이전 토목자도 징집면제
- 2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원진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 원진직업병 판정 3백62명
- 3면 ·감옥에 양심수가 묶여 있습니다-민가협, 11.25.-12.9. 양심수 겨울나기 거리캠페인
·독자투고-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강영화)

제296호(94.11.29, 화) / 257

- 1면 ·일본군 위안부문제, PCA 한일변호인단 세미나
- 2면 ·간첩혐의 이화춘씨 법정서 사건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내란죄, 흉악범죄등에 사형제도 존속

제297호(94.11.30, 수) / 259

- 1면 ·'세계화'에 던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 2면 ·AI보고서 허가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났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법무연수원 『법무연구』 발간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
·여성법정, ARRC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제298호(94.12.1, 목) / 263

- 1면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의결 회기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재소권등 유보
·안재구씨 무기징역
·안재구씨 가족, 24시간 수감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 2면 ·11월분 총독차

제299호(94.12.2, 금) / 266

- 1면 ·동티모르 독립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게 인권단체 압력필요
·일본의 이씨 구원회, 이화춘씨 사건 조작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최태교이교 구타자 처벌
·AI즉각 석방 요구, 안재구씨 사건 조작의혹
- 2면 ·교도소 담을 넘나드는 편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제300호(94.12.3, 토) / 268

- 1면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 보장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아동학대예방세미나, 피해아동의 권리 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2면 ·동티모르 독립지원하는 민간단체 연대와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운동 호소
·2일 민교협 성명, 경상대 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 3면 ·단체탐방37-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인권하루소식

94년 7월

(제201호 - 제217호)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아라"

민가협에 따르면 과거 시국사건으로 안기부등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66명의 양심수들이 7일 고문수사관들을 처벌하라며 집단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75년부터 92년 사이에 각종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들중 현재 48명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서울지검을 방문하거나 내용증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양심수들은 양동화(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무기)씨등 장기수 20여명, 송갑석(전진대협 의장)씨등 전대협 관련 8명, 박기평(박노해)씨등 사노맹 관련 16명, 손병선씨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관련 20여명 등이다.

이번 집단 고소와 관련 민가협은 "인권침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금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게 위한 것"이라고 그 의

를 밝히면서,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금 자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고문에 의해 조작된 장기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6년 10월경 반계동맹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돼 이근안 등에게 고문당한 박충렬씨등 12명이 89년 1월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으며, 89년 안기부에 연행돼 고문당

한 홍성담, 차일환씨의 경우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홍성담씨는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몸타주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민가협은 검찰이 과거의 인권범죄를 처벌하기 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고소장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인도적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충렬씨등 3인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법, 김삼석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

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라며, 김삼석씨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삼석씨가 군사

자료를 수집한 것은 군사전문가로 연구목적이 있었으며, 군사문제를 연구하려 일본에 간 동기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7년)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김은주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말지등을 일본에 전달한 것이 국가기밀 탐지라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하며 마찬가지로 감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씨는 "법원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보법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감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원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긴급 국민공청회가 민주당이 주관하여 민변, 민가협, 법학교수협의회등이 참여단체로 7일 오전 8시에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중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 대해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법관 개인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문회등을 진행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인권운동사랑방 12차 월례세미나

북한 인권문제, '양날의 칼'인가?

-북한 별목공을 통해 생각해보는 인권

**바로 오늘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강사 : 양상우(한겨레신문 기자, 시베리아 원지에서 북한 별목공문제 취재)

일시 : 7월 8일(금)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국제 인권 소식

편지주 국제앰네스티가 7월 7일 발간한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요약, 연재한다. 9일자에는 남북한 인권상황을 실을 예정이다.

93년동안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위험에 처해있는 인권운동가들

국제앰네스티는 1994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전 어느때보다 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더욱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인권운동가들이 지구 정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경우는 더욱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이전시대에 자유로운 활동이 금지되었던 인권단체들이 수십개국에서 조직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자유와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위기상황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에서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발표하였다.

변호사, 언론인, 노동운동가, 농민 지도자 및 여타의 인권 수호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변천과 개혁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법률과 헌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으며 평화적 반대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보장하는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동 외국에게 좋은 인권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국 정부에 의해 인권운동가들이 인권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희생자가 되고 있다."

151개국에 대한 세계적인 조사작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한해동안 63개국에서 양심수가 체포되었다; 100,00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없이 구금되었다; 1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하였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33개국에서 약 2,000명 이상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유엔에게 약 9년안에 인권수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서 작성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럽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양진영에서 수백명에 대한 임의적이고도 고의적인 사례가 보고되었다. 분쟁과정에서 대개 양심수들인 최소한 15,000명의 사람들이 구금센터에 구금되었다. 부장 정치세력들 또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으며 영국에서는 공화당과 왕당세력들이 73명의 시민을 살해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포함하여 유럽의 26개국에서 감옥, 경찰서, 또는 다른 구금센터에서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발생하였다. 터키에서는 고문의 결과로 최소한 24명이 사망하였고 보도에 의하면 경찰서와 헌병대에서는 폭넓게 고문이 자행된다고 한다. 많은 희생자들이 인권수호자들이었다.

구 소련연방의 붕괴로 생긴 일부 국가에서 정부당국은 보안군을 축소할 것을 약속하였다. 카자크공화국에서 비사법 처형과 "실종"이 계속되었고 살해된 수십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 활동과 연고때문에 살해의 목적이 되었다.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7월 18-20일 서울 힐튼호텔

유엔 인권센터가 한국정부의 협조하에 주최하는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워크샵(Third Asia-Pacific Workshop on Human Rights Issues)이 7월 18(월)부터 20(수)까지 3일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91년의 마닐라, 93년 1월의 자카르타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데 '인권후진국'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로서 국제인권기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무부 인권사회과의 김종훈 서기관에 따르면 "이번 워크샵의 서울 개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엔의 인권관련 활동에 한국정부가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번 대회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아태지역 또는 하부지역(Sub-regional mechanism) 기구 설립,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그리고 작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후속작업 등의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

이다.

이번 워크샵에는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약 30개 아태지역 국가의 정부 대표, 아프리카와 미주의 지역 인권기구 대표 등 국제인권기구와 유엔 인권센터 실무자 10여명, 20여명의 주한대사 및 수십명의 한국 정부대표 및 국내 인권운동가 등 약 100명 가까이 참석할 예정인데 특별히 작년 말 처음으로 임명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 호세 아얄라 라소(Jose Ayala Lasso)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서울대 법대학장 백중현 교수와 한국 유네스코 위원장 차인석 교수가 각각 아태지역의 인권기구와 인권교육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엔인권센터로부터 초청을 받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는 이번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회원단체인 민변은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천정배 변호사)하여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참석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인권단체협의회(민변/522-7284, 민가협/763-2606)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8일 오전 8:30에 힐튼호텔 회의장에서 참가등록하면 된다. 한편 회의는 한국어 통역없이 영어로만 진행되며 민간단체 대표자가 회의중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면에서 계속)

앞으로 재판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판결의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헌법관과 인권의식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제도밖에 없다고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철 국회의원(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당위성'이란 발제를 통해 "그동안 명백히 하자가 있는 사람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다수당의 의석수 과시에 의해 표결만 하여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 왔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65조 1항에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고위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 국제연대활동에 주요 사회운동단체 높은 관심 표명

국내의 주요 사회운동단체들이 내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사회발전회의)을 준비하기 위한 첫 모임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의 주최로 8월 1일 오전12시부터 오후4시 30분까지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에서 가졌다.

이번 모임은 '민주주의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전노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경실련', '여연', '환경운동연합', '영등포 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 선교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부설 사회교육원', '평화연구소', '민정연' 등 국내의 주요 사회운동단체 대표자와 국제연대 실무자 약 25명이 참석해

코펜하겐 사회발전회의와 국제연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기사연은 초청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으로 상징되는 아태지역의 질서변화가 지역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NGO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코펜하겐 대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열게 되었다"고 개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제1부에서 기사연의 박종아씨는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와 아시아 민중'을 통해 초국적기업(TNC)의 자본국제화 전략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주의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현

상들이 '아태지역의 민중운동에 국제연대의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뒤, 발제문에 대한 간략한 논평과 함께 여성, 노동, 인권, 환경, 평화 등 다양한 부문운동의 실무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실천해온 국제연대운동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선태(기사연 선임연구원)씨는 그동안 코펜하겐 대회와 관련하여 기고하거나 수집한 주요 회의 보고서, 선언문 등을 설명했으며 그는 그동안 몇몇 단체에서 사회발전회의에 대

해 준비해온 과정을 소개하였고 이번 8월 중순 APEC과 시민사회 및 통일을 주제로 아태지역 워크샵(예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후 계속된 토론에서 자주성과 대중성 등 국제연대와 사회발전회의의 준비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가지 원칙이 거론되었고 앞으로 사회발전회의의 준비를 통해 그동안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 논의는 22일 오전 12시이다.

마지막으로 윈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배기수 부의장은 최근 한국직업병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윈진레이온 기계를 중국에 팔려나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근의 운동을 소개하면서 참가단체의 지원과 참여를 호소했다.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 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전교조는 8일 진해여상(학교법인 충무학원)의 교권유린으로 해직된 김수대

향의방문, 고발등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구속 철도노동자 석방 요구 8일째 목사들 금식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8일 현재 8일째 금식기도회를 벌이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조하순(달월교회), 이근복(새민축교회), 윤인중(세백교회) 목사 등 15명의 목회자들은 8일 '고난받는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구속·수배된 노동자들의 석방과 징계철폐를 정부에 촉구했다. 하루 8시간 노동, 변형근로시간제 폐지, 노동악법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과

행사 안내

- 원진노동자 재취업 약속이행 및 직업병 제조공장 원진 레이온 기계 중국수출 반대투쟁결의대회
· 일시:9일(토) 오후3시/ 장소:윈진레이온 공장 정문앞
· 주최:윈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0346-63-3645)
· 후원:윈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94년 국제앰네스티 전국교육대회
· 일시:9일(토) 오후3시-10일(1박2일)
· 장소:대전가톨릭교육회관(☎042-624-5662)
· 주최: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
· 일시:11일(월) 오후2시/장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내용: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상수변호사)/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점(한인섭 경원대교수)
·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741-7961,5)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아시아교류센터 설립기금안'에 대한 재질의서를 8일 외무부장관앞으로 보냈다. 2일 외무부가 보낸 답변서에 대해 정대협은 "결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정부가 보상대신에 기금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기금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에 사는 한국인 중군위안부 송신도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지난 4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중군위안부문제 해결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제일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미야기 회일의 전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는 한국정부에 수위안부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보상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정부의 「아시아 청소년 교류기금」구상을 제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정부가 갖고 있는 위안부문제 관련 미공개 자료의 공개요구 의사는 없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20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6월 일본정부가 내놓은 교류기금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이 구상은 위안부제도 피해자들에 대해 일체의 사죄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항의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본정부가 지난해 8월 중군위안부문제 제2차보고와 관방장관이 직접 사죄를 표시하는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으나 이후 아무런 방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의부성은 '청소년 교류기금'구상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들은 "작년 3월 13일 김대통령이 '몰질적 배상은 요구 안한다'고 표명한 점이나 그뒤 시행된 위안부 생활지원정책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93년동안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2)

중동

중동지역에서 인권활동은 정부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에 직면하게 되며 이 지역의 정부당국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저명한 리비아의 반정부 인사이자 인권을 위한 아랍조직체의 창립자인 Mansur Kikhiya는 이집트에서 리비아 정부 요원에 의해 "실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오늘날까지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튀니지아에서 이스라엘 단체에 동조하거나 정부에 반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폭넓게 임의적으로 체포되었다.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아를 포함하여 11개국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형집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쿠웨이트와 알제리에서 8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남북아메리카

1993년 국제엠네스티는 브라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페루를 포함하여 아메리카지역의 약 15개국

에서 매해 1,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생명에 관한 정치적 살해 및 '실종'의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콜롬비아에서는 무장세력과 준군사 조직들이 수백명의 사람들을 비사법적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페루, 쿠바를 비롯한 여러국가에서는 수백명의 양심수들이 구금되어 있다. 브라질에서는 수백명의 거리 부랑아들,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경찰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아이티, 베네주엘라,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폭넓게 보도되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형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4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38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1993년 한해동안 정치적 체포와 고문이 계속되어 왔으며 정치적 살해가 인권침해의 유형 중 현저하게 두드러졌다. 브룬디에서의 투씨부족과 보안군이 수천명의 비무장 후투족을 살해하였으며 이 사건은 최근 94년 후투족 정부관리와 지지자들이 투씨족을 살해하는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앙골라, 자르, 세네갈, 토고, 자이레를 포함하여 20개국에서 수백명이 비사법 처형되고 '실종'되었다.

이 지역외에도 카메룬, 나이지리아, 수단에서 양심수들이 구금되었으며 이디오피아에서는 수천명의 정치적 구금자들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경찰과 군대는 구금자들을 고문하였으며 4,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폭력에 의해 죽었다.

아시아

아시아지역에서 비사법처형과 '실종'이 전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처럼 캄보디아에서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처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아프카니스탄과 캄보디아에서는 고의적이고도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가정, 병원 그리고 회교사원에 대한 폭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수천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인디아에서는 정치활동가 수백명이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살해되었으며 잠부와 카시미르 그리고 편잡지역에서는 보안군에 의해 많은사람들이 '실종'되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경찰과 군대에 의해 고문을 당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살해되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를 포함하여 19개국에서는 정치적 구금자, 평화적인 반대자, 그리고 범죄 혐의자들에게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는 상식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해 적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수백명의 수인들은 양심수이거나 양심수일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에는 수백명의 정부 반대자가 구금되어 있고 이중 수십명이 양심수이다. 사형이 적어도 10개국에서 부과되었고 중국에서만 1,400명 이상이 처형되었으며 2,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중이다.

미얀마에서도 수백명의 정부반대자들이 구금상태에 있으며 이들중에는 수십명의 양심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편집자주 남북한에 대한 보고서는 13일자에 요약해서 실을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는 월 1-3만원

제일은행 128-10-131017
농협 011-01-404581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린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 대해 반말이나 폭행 경험 67%

검사나 검찰직원으로 부터 반말이나 폭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67.4%, 조사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가 불공정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52.8%, 검사를 포함한 검찰직원으로 부터 목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는 적이 없는 경우가 89.5%, 또한 검찰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자책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에 42.0%가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3일간 경실련 시민입법 위원회와 한길리서치가 검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1백40명의 설문결과를 뽑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경실련은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이란 공청회를 1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안상수 변호사는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발제를 통해 검찰의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하여 정치적 중립과 민주개혁의지가 강한 인물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임기후 3년간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검찰청법 제7조 제1항)는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및 피의자 심문할 것도 지적했다. 더불어

월 3백내지 4백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사의 대폭증원, 부검사·참조검사 제도의 도입, 보고인의 허위진술에 과태료를 부과등을 들기도 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에 관한 국내 자료가 82-3년, 88년, 93-4년 등 권권교체에 집중되어 발표되었다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 없는 검찰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발표를 통해 "검사의 임명 및 복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검찰청법 제34조)고 하여 검찰 인사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중범죄에 대해 현행의 1차연장을 2차연장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해 심급마다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은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기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야 하며, 구속적부심의 활성화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야수사도 인간의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고문의 하나이다. 검찰청내의 고문과 폭행은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앞으로 불법·탈법수사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수사참여권 보장, 모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인정, 미결구금단계에서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들었다. 검사의 기소제량에 대한 견제방안으로 제정신청제도의 전면적인 부활과 기소권행사에 있어 시민참여와 시민적 통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인제(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변호사, 정중섭(건국대)교수, 박세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등이 참여했다.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9일 원진대책위 집회

원진노동자 재취업 약속 이행과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수출 반대투쟁결의대회가 9일 오후 3시 미금시에 위치한 원진레이온공장 앞에서 노동자, 시민과 학생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측은 공장내 들어가 가스유독성을 증명하려다가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구리시 체육공원까지 행진을 벌인뒤 6시30분경 정리집회를 가졌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측에 따르면 현재 공장내에서는 중국인 1백여명이 원진레이온기계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3백여명을 더 데려와 두달안으로 철거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93년에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남한
기존의 양심수들 포함하여 2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약 50명의 사형집행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2월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약속하였다. 처음 신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수정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취임 후 큰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12월에 국회는 정치적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였다.

3월에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기능에 '심각한 제한'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5월에 정부는 이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8월 일련의 노동쟁의를 겪은 후 이 결정은 반복되었다.

6월 정부는 UN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려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지난해 말까지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월 144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들중에는 반정부 인사들, 학생들, 노동자들 또한 장기 수감되었던 나이가 많은 수인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수감된 정치적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여기에 많은 양심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그리고 북한의 '반정부조직'과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정부당국에 의해 '반국가'조직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단체를 지지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3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사노맹과 관련이 없으며 양심수이다.

6월에 국가보안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조국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양심수인은 사회주의과학원에 소속되었다는 혐의와 소위 사노맹과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황석영은 4월, 일정기간 동안 방북한 후 남한에 돌아와 체포되었고 양심수이다. 10월 그는 89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정부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돈은 '장길산'을 영화화하는 판권료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운동가 노태훈은 7월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가 일본에 있는 북한 간첩을 만났다고 자백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당국은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책과 팸플릿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용되는 자료이다. 노태훈씨의 인권활동이 그를 체포한 진짜 이유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의 장기수를 도왔고,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세계인권회의의 남한 NGO대표로 참석하였다. 그는 10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7월, 8명의 군정집자가 체포되었다. 이들은 군을 탈영하여 '양심선언'을 하였다. 일부 사건은 89년 이전의 사건으로 군대 개선을 요구하고 남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경우이다. 대부분은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는데, 이들은 양심적 이유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양심적 거부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다른 업무를 대체받을 수 없었다. 8명중 4명은 1년6월에서 3년간 감옥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양심수이다." 나머지는 군대나 전투경찰로 되돌려지고 있다.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은 제3차 개입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7월 전국노조협의회 의장인 단병호씨를 포함하여 지도자들이 임금협상과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명장이 발부되었고, 이들은 은신하였다.

이전 시대에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수십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70년과 80년대에 북한과의 접촉이나 간첩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심문기간 동안 고문을 받았고 대개 강요된 자백을 근거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다. 이들 중에는 85년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김성만과 20년형을 선고받은 황대권이 포함되어 있다. 장의균은 87년 체포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다. 4월에 임의적 구금에 관한 UN 실무분과는 이들 3사람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국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수감된 두명의 수인을 석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유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소위 공산주의 견해를 철회한다는 '전향서'를 쓰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김선명과 안학섭은 각각 51년과 53년 체포 당시 북한 군인이었다. 이들은 간첩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받았으나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전경때로였다. 이들은 양심수로 간주된다.

10월 국회 법사위원회는 91년 장기훈에 대한 한 정치활동가의 자살을 선동하거나 조력했다는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이후 이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는 재심을 위한 합법적 범주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장기훈은 계속 복역중이다. 그의 체포와 형의 선고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심수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치적 동기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소위 안기부와 경찰청 보안국에서 장기 심문, 잠 안재우기 그리고 위협을 받았다. 일부 수인들은 심문과정에서 구타당했거나 반복적인 물리적인 훈련을 강요당했다. 평화론자이고 인권옹호론자인 김삼석은 그의 변호사에게 9월 체포된 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의해 웃을 빗기고 성적으로 학대받고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했다. 그의 그의 여동생 김은주는 영양없이 체포되어 이틀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김삼석은 그의 변호사에게 그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짓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하였다. 김은주는 심문 동안 잠 안재우기와 뺨맞기, 또한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일본에 있는 '반정부'단체와 접촉했고 국가기밀을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11월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

약 5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영구적으로 수감을 차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고문주장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정치적 수인을 구금하는데 이용하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수의 사례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고문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형을 선고받았다. 12월에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모든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
불공정 재판에 의하거나, 재판과정도 없이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구금되어 온 양심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수백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인정될 수 없는 구금센터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전 수인의 진술에 의하면 구금조건은 열악하며 수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상례화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사형집행이 있었으면 일부는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북한인의 외국여행은 부분적이며 외국인의 북한으로의 접근은 북한정부에 의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매우 폐쇄적이다. 북한당국은 독립적인 조사단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작업이나 구금장소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1월, 국제엠네스티는 1992년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인 이장하가 주도하는 인권을 조사하는 연구소가 창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정부는 이 연구소가 북한 인권상황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92년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92년 말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6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박인순은 비엔나 UN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해서 "각 나라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각 주권국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국가가 '간섭'과 '비합리적인 압력'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수인과 양심수일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이들중에는 "국가반역죄"로 고발된 사람들 즉 외국에 정치적 망명을 했던 사람들의 친척과 외국인과 불법적으로 접촉을 하였던 사람들이 포함된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한 여인이 외국학생과 접촉을 하였는데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재판없이 행정구금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일본국적의 시바타 고조는 1964년 이후 구금되어 있는 양심수이다. 그는 평양에 거주하는 일본여성이 일본에 있는 친척을 만나기 위한 출국이 불허되자 이에 항의를 독려했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고 84년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90년말 평양 근처에 있는 승호마을에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다. 그후 그에 관한 정보가 없다.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정치적 수인들이 재판과정없이 확인되지 않는 장소에 구금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외국유학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재교육'을 위한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들 중에는 어린이와 젊은 사람도 있는데 18세인 오해원과 15세의 오규원도 포함된다. 이들은 그의 아버지가 외국으로 망명을 한 후 어머니 신숙자와 함께 86년 이후 구금되어 있다. 이들은 함경남도 요독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 구금장소에 구금되었으며 이들은 양심수이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구금장소에 있는 정치적 수인들은 극도로 열악한 조건속에 놓여 있다. 이전 수인들은 많은 구금자들이 추위와 기근과 질병에 대한 치료가 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구금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한다고 말하였다. 일부 캠프는 수인들중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이 수용되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음식과 다른 공급품이 공급되지 않고 수감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양식을 생산하도록 한다. 일부 북한의 임업노동자들은 러시아 연방 극동에 위치한 북한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캠프안에 임시적으로 구금된다. 캠프를 떠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북한과 소련사회주의

연방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구금되었다. 이곳의 구금 시설에 대한 관심과 캠프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러시아는 캠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사형은 정치적인 범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81년 형법은 사형을 정치적 범죄에 부과되는 '기본적 형벌' 두 가지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과 자주를 위한 혁명적 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저해하는 "제국주의자와의 공모"활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형을 실시한다. 사형은 또한 "제국주의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의 "극단적인 사건"을 범한 범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용된다; 공화국을 점령하려는 음모나 반란에 가담한 자; 노동당과 정부의 "기간요원과 애국시민"에 대한 '테러'행위; 그리고 살인 및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 무조건 적용된다. 이런 범죄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북한 형법에는 잘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당국은 91년 국제엠네스티에 사형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실시된다고 하였지만 자세한 자료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북한당국은 사형을 집행한 통제는 수집해 두었으나 이용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93년 동안 사형제도는 빈번히 이용되었고, 경제사범을 포함해 해마다 수십명의 사형되었다고 한다.

92년 11월의 한 사례는(정부진술에 따르면 10월) 30세의 주수만씨 경우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상습적인 폭력사범"으로 규정되었고, 소위 "대중의 요구에 따라" 공개집행되었다. 형법에 관한 국제엠네스티의 비판에 관하여 북한당국은 "국가에 관한 범죄와 관련된 조항"은 "범죄 예방의 기능이 있으며 드물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캠프가 범죄자 수용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단지 교육장소이며" "노동자들에게 러시아법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당국의 답변은 사형은 드물게 적용되며 정치적인 이유로는 그 어느 누구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개집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는 북한을 방문하여 인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응답도 없다.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종렬씨등 3명 국가상대 손해소송

지난 86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경감(수배중)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박종렬씨(33), 이민영, 김원재씨 등 3명은 12일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 12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들은 소장에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중철씨 등 12명의 형사들로부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9년 1월 이들을 독직 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해 11월 30일 완료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들은 반제동맹 사건에 연루돼 지난 86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89년 1월 당시 고문에 참가한 경관들

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별다른 수사진전없이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독직폭행 혐의 등의 고소를 김근태씨 고문 사건과는 별도로 종결지어야 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박씨들을 고문한 혐의로 피소당한 경관들이 수배중인 이근안씨에게 혐의를 떠넘겨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1월 30일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1심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던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교수측의 신청에 따라 우씨와 함께 근무했던 진모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등은 여러 경로로 통해 1심판결이 서울

대중장의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책임을 묻지않은 점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피해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유발한다는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2심공판은 '성희롱' 배상과 함께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인권 간행물 ◆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공정회 자료집)-경실련
·주요내용 : 발제-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상수)/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점(한인섭)/검찰활동에 대한 서울시민들 설문조사결과 등

□함께걸음(94년 7월)-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정강용씨의 7급 공무원 퇴직기-산 넘고 물 건너도 아직은 먼 길(전홍윤)/접근권, '권리'인가 '행정편의'인가(박옥순)/삶의뿌리 갈아먹는 '장애'와 '빈곤'(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소)/뇌성마비, 산전관리와 정기검진으로 막을 수 있다(문정림) 등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주제발표-정신보건정책과 인권(김병후)/각국 정신보건법과 인권(조홍식)/부록-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정신보건법 입법 예고안, 정신요양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인권과 국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법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차용석)/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박은정)/사법시험 이대로는 안된다(안경환)집중탐구-각국의 사법시험, 법학교육, 변호사의 오늘과 내일 등

□민주화 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인권선교정책협의회 자료집)-한교협 인권위

·주요내용 : 대토론회 발제-민주화개혁과 인권운동의 전망(조희연),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박원순), 새로운 인권선교와 기독교의 책임(임태수)/정신대·외국인 노동자·성폭력문제 등의 사례보고 등

□시민과 변호사(94년 7월)-서울지방법원
·주요내용 : 국회푸락치사건 판결문/시민의 소리-시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해 변호사단체가 앞장 서야(양정자)/간통죄의 행방(간통죄 존폐론(강석복)/기자가 본 사법부(이창원)/대학생들이 본 오늘의 법정(한인섭)/함께하는 광장(갈과 방패)-농어촌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유현숙), 경제적 편의주의에 기초한 농어촌소규모학교의 폐교정책은 문제있다(강승규) 등

◆ 행사 안내 ◆

□인증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실상과 허상

·일시 : 7월 14일 오후 3시

·장소 : 한사연(☎ 363-1177.8)

·강사 : 장태완(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인종학과 교수)

·주최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아시아지역인권기구, 국민인권기구등 논의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오래 전부터 유엔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기구 설립을 적극 권장해 왔는데 지난 93년 3월의 방콕 아태지역인권회의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에도 2차회의와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의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93년 6월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에 아태지역에서 열리는 첫 인권관련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지역인권기구 설

립에 대한 논의의 결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국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아시아 국가의 정부도 소극적이고 원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이후 유럽, 미주 및 아프리카 등의 대륙에서는 자체적인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여 지역내 국가의 인권이 보다 잘 보

호되고 신장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왔다.

"노조원 대량징계 철회하라"

12일 지하철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서울지하철노조는 12일 군사기지에서 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와 지하철공사에 노조원에 대한 대량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의원대회에서는 "구속 수배와 대량징계를 자행한다면 조합의 조직력과 동료를 대량 징계할 것"으로 재투쟁에 돌입할 것

을 천명하고,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재파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당초 재파업 돌입 등 투쟁수단을 결의할 예정이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국가적인 비상한 시기가 초래됐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쟁의 고삐를 늦출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지하철공사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자 25명중 21명을 파면하였다.

또 구속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원의 가족들은 '구속자 석방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중이다.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Third Asia-Pacific Workshop on Human Rights Issues

·일시 : 94년 7월 18일(월)-20일(수) / ·장소 : 힐튼호텔 / ·주관 : 유엔 인권센터

날자	시간	내용	주제	강사
18일(월)	08:30	등록		
	10:00	환영사		한승주 외무부장관/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11:30~13:00	기조발제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의 인권실현	몰라 루비스(인도네시아, 인권연구소 소장)/이브라힘 바다위(이집트, 전 아프리카 인권 및 민주권위원회 회장)
19일(화)	15:00~18:00	실무회의1-지역인권기구(Regional Arrangements)	아태지역에서 지역인권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	퓨리퍼케이션 큐이승빙(필리핀, UNICEF 아시아지역 자문위원)/몰라 루비스(인도네시아, 인권연구소 소장)
	09:30~13:00	실무회의2-지역인권기구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는데 고려해야할 실제적 문제점들	마이클 라이스만(미국, 미주 인권위원회 회장)/이브라힘 바다위(이집트, 전 아프리카 인권 및 민주권위원회 회장)/백중현(서울대법대 학장)
	15:00~16:15	실무회의3-국민인권기구(National Institutions)	국민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최근 활동	비렌드라 다얄(인도, 인도 인권위원회 위원)
20일(수)	16:45~18:00		국민인권기구에 관한 아태지역의 최근 시도들	브라이언 베테킨(호주, 호주연방 인권위원회)
	09:30~11:00		인권의 실현과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실천계획의 발전	브라이언 베테킨(호주, 호주연방 인권위원회)
	11:30~13:00	실무회의4-세계인권대회의 후속사업	아태지역의 인권교육 촉진 위한 전략의 발전	차인석(한국 유네스코 위원장, 서울대철학과 교수)
	16:30~17:30		아태지역의 국가들에게 국제인권조약과 의정서 비준을 촉구; 아태지역 국가에서 국제인권기준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의미	세드프레이 오르돈네즈(필리핀, 국민위원회 의장)

결론 및 폐회식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서울경찰청이 서총련간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로 연행하고 사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종욱(24, 서총련의장)씨등 3명을 제외하고는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구금·조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새벽 4시 20분경 이종욱·설충석(23, 중앙대 4, 한총련 대변인)·김종백(23, 서총련 조동위원장, 서울시립대4)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3명을 비롯해 서총련 간부등 55명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불법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연행된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난 11·13일 3일간 예정으로 이 대학에서 열리고 있던 '서총련 문예일꾼 진진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불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서총련학생 연행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불법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밝혀져 김영삼 정부 출범후 인신구금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

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영장을 가지고 왔다"는 말만 있었을 뿐, 누구를 어떤 혐의로 연행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약 5분만에 연행을 완료했다. 사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종욱씨등 3명 이외에 52명은 영장없이 연행된 것이다. 또 수사과정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13일 오후 9시 현재 영장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감금의 개연성이 아주 높다. 경찰은 또 연행한 55명에게 변호사나 가족의 접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변소속의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행된 정재관(고려대 총학생회장)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면회를 신청했으나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당했다. 또 연행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고 있다. 단지 금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

경찰서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총학생회 연합」(의장 이종욱, 서총련)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한양대 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영장도 없이 체포한 불법연행"이라고 규정하고 스불법연행에 대한 사과 스연행자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14일부터 서울지역의 각 학교별로 '불법연행 규탄대회'를 가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관계자는 경찰이 학교에 사전통보 없이 경찰을 진입시켰음을 밝히고 "연행과정에서 강의실 문 등을 파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연행자 명단(47명 미확인)

이종욱, 설충석, 김종백, 박선후(서총련 남부지구 조동위원장), 최종민(서총련 동부지구 의장), 조홍련(서총련 정책위원장), 조두현, 정재관(고려대 총학생회장)

두밀분교후원회 재판방청, 토론회추진

두밀분교후원회는 지난 6일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 첫 만남을 가진 뒤 후원

사업을 위해 9·12일 연이어 모임을 갖고 19일 열리는 두밀분교폐교철폐소송 결심에 참여하고 두밀분교 폐교반대를 위한 토론회모임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공판에 관심을 갖도록 신문광고를 후원회 이름으로 낼 계획이다. 현재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은 「참교육시민모임」, 「또하나의 문화」,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서울교대학생, 이석태변호사 등 이다.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사노맹 전조직원 최영민피고인(2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총련 91명 무더기 기소

지난달 18일 열린 'UR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 시위를 벌인 남총련 소속 대학생 91명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됐다.

대검공안부(부장 최환)는 13일 남총련 학생들의 열차강제정차 및 흥익대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1백17명 가운데 박상춘(24, 조선대 조동위원장)씨 등 91명을 기차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강창진(20, 순천대 무역1)씨등 나머지 26명은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 행사 안내 ◆

□인종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실상과 허상

·일시 : 7월 14일 오후 3시

·장소 : 한사연(☎ 363-1177, 8)

·강사 : 장태완교수(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인종학과)

·주최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1 지역인권기구란?

면집주 : 오는 7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을 맞아 워크샵의 주제인 지역인권기구, 국민인권기구, 워크샵 지상중계 등의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인권기구(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는 제3차 아태지역 워크샵의 여러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 것이다. 유엔의 권고에 따라 91년 마닐라에서 첫 아태지역 워크샵이 열렸고 대부분의 아태지역 정부대표가 참석하였다. 이어 93년 1월 자카르타에서 두번째 워크샵이 열렸고 이번의 서울 워크샵은 세번째이다. 이러한 워크샵의 궁극적 목표가 아태지역의 인권기구를 설립하는데 있으므로 지역인권기구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서울 워크샵은 과거와 달리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 워크샵이 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아태지역의 인권관련 회의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인권기구 설립 문제 이외에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는 한국정부의 인권 관련 대외적 이미지 문제이다. 작년 3월의 방콕 대회와 6월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통하여 한국 정부는 '인권후진국'에서 '인권모범국'으로의 대외적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과 노동인권 탄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아태지역 인권회의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인권기구란 무엇인가?

지역인권기구란 유엔의 국제인권기구와 보조를 맞추어 각 지역내에서 지역상황에 맞는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다.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외교에서 자국의 이익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의 정치 및 경제협력 기구를 통해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48년 유엔인권선언 제정 이후 유엔인권위원회(46년 설립)는 각 지역의 회원국가가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인권현장과 인권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여왔다. 한편 각 지역 내에서도 특별히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지역인권기구의 설립필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60년대 유럽인권기구, 70년대 미주인권기구 그리고 80년대에 아프리카인권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아태지역은 지역내의 정치, 경제,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내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문제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단체, 아태지역의 민간인권단체 및 아태지역 일부 국가의 지지하에 지역인권설립에 관한 결의안을 여러 번 통과시켰다. 93년 3월 9일 통과된 "아태지역의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Regional Arrangement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에 관한 결의안(1993/57)에서 인권위원회는 '아태지역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권기구에 관한 워크샵을 환영'하면서 '유엔인권센터의 자문서비스 및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인권기구 설립이 심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아태지역 국가의 입장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인권기구에 대한 아태지역 정부의 입장은 다양한데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은 아직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유엔인권센터에 보낸 공문(93년 7월 23일)에서 중국정부가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a)지역인권기구에 대한 고정된 모델이 없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관행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된

다. (b)지역인권기구의 설립은 모든 국가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협의를 통하여 모든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특정국가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강제하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c)지역인권기구의 설립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하며 불필요하게 서둘러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국가들은 아직 뚜렷하게 정리된 입장이 없지만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권기구 이외에도 ASEAN지역에 국한한 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93년 7월 23-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각료급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인권에 관한 적절한 지역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은 고위실무자회의에서 결정하여 94년 7월에 방콕에서 열리는 ASEAN 각료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아태지역 정부는 지역인권기구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 워크샵에서 대부분의 국가 정부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태지역 민간단체의 입장

한편 93년 3월 방콕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를 위한 아태지역 민간단체(NGO)회의에서 지역인권기구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아태지역 정부활동에 대한 권고안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권고를 제출하였다('93세계인권대회자료집 52쪽 IX).

IX)아태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발의도 환영하지만 그러한 수단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마련되면 국제인권장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조약, 고문금지조약,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과 기타 인권과 관련된 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따라야 한다. -지역위원회 회원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을 최우선적으로 비준하거나 동의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에 대한 개인 또는 NGO의 청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청원이나 탄원 (☎ 3면에 계속됨)

(2면에서 계속)

이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유엔기구에 동시에 탄원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역위원회원은 정부내의 공직을 겸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NGO와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조항의 이행에 관한 정부의 정기적 보고체계와 보고서의 초안작성에 NGO가 참여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 회의와 토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군대, 국가 안정보장 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부요원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활동도 심사와 조사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지역위원회는 완전한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 -계속을 심리할 분리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정부는 지역위원회에 관한 정보와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홍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열린 아시아 지역 정부대표 회의의 선언문은 "26. 아시아에서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려는 지역기구를 수립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를 다시 언급한다." (동 자료집 59쪽 26)고 간략하게 무관심에 가까운 소극적 원칙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태지역 대부분의 정부는 민간인권단체와 달리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서울 워크샵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 및 아태 지역의 인권운동단체의 압력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어 어떤 형태로든 부분적이나마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인권기구는 인권 보편성의 반영

지역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주권의 존중, 영토 보전 및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불간섭' 등을 매우 강조한다. 이는 인권의 특수성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인권의 개념과 이해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각 나라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서구의 자유주의 철학의 인권이해에 기반한 일률적인 잣대로 한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올 4월 미국의 중국에 대

한 무역외해국대우 연장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외부의 어떤 세력도 자국의 인권문제를 핑계로 자국의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에 따라 중국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하여 서방식의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권을 내세운 제국주의적 간섭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자국내 인권문제가 국제적 '간섭'을 불러올 소지가 있는 나라의 정부들이 지지하고 있다. ASEAN국가들이 별도의 지역인권기구를 만들려는 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지난 3월 방콕대회 선언문에서 아태지역의 NGO들은 "우리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무시하는 문화적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고,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 NGO의 권고안에 밝혔듯이 아태지역의 민간인권단체들은 지역인권기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아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인권탄압과 유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해당국가 내부의 민간단체 또는 지역내 민간단체들만의 연대활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현재 아태지역에는 미얀마,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의 노동과 인권탄압 등 몇몇 국가의 인권탄압 사례 이외에도 증가하는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은 지역내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인권현안들이 산재해있다. 민간단체들은 지역내의 정부가 참여하는 지역인권기구가 위의 문제들에 대하여, 국익이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인권의 보호와 신장'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위한 전제에는 NGO의 참여가 있다. 유엔 인권센터 실무자 대부분이 "NGO는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의 운영에서 약70%를 차지한다. NGO의 참여없는 유엔 인권기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인정하듯이 지역인권기구에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아태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지역인권기구가 명목상의 기구가 되어 유명무실하거나 인권의 보호와 신장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한 지역내 인권단체의 연대활동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구로 전락할까봐 우려하기도 한다. 사실 지역인권기구가 지역의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아태지역 국가의 내부 인권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 및 방지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NGO는 지역인권기구의 역할과 임무의 내용 이외에도 위원회의 임명, 활동감시, 보고서 작성, 인권침해 호소 및 청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참여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아태지역 인권현황을 정부에 앞서 민간차원에서 먼저 작성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러한 우려와 노력의 반영이기도 하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편 작년 말부터 악화된 인권상황으로 국내외의 인권관계자를 실망케 했던 김영삼 정부의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93년 3월 방콕 인권대회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예상과 달리' 한국정부 대표 신두병 인권대사는는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아태지역의 NGO로부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받았다. 당시 막 출발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분위기와 맞물려 한국정부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아태지역 국가와의 외교에서도 인권을 중시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감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한국에서 인권이 드디어 성숙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는쟁, 국가보안법에 따른 일련의 구속사태 및 최근의 노동운동탄압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지역인권기구에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과연 김영삼정부의 외교에 철학이 있는가? 있다면 인권은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주에 열리는 워크샵에서 곧 밝혀질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7천여 국민학교중 3천8백여학교 통폐합 대상

전국교대생 은나라 걷기대회 통폐합 재조정 여론화 증점
'초등교육 전문성 무시이며 교육포기선언과 같은 것'

두밀리분교폐교철폐 소송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분교 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3일부터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양동준 광주교대 4년, 교대협)가 교대사수와 교육대개혁 실현을 위한 은나라 걷기대회에 들어감으로 소규모분교 통폐합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대협은 소규모분교 통폐합 재조정과 국민학교 급식시설 학부모 부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소규모분교통폐합은 초등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반교육적 처사이며 정부가 교육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전국 11개 교대와 교원대 초등교육과 1만6천여명은 13-19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을 돌며 교대사수와 교육대개혁 실현

을 위한 은나라 걷기대회를 갖게된다. 이후 하반기에는 교육대개혁을 위한 무기한 수업거부등을 실시할 계획도 잡고있다. 교대협은 14일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대개혁 실천'을 위한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대학로 마로니

에 공원에서 가졌다. 현재 전국의 국민학교와 분교는 7천13개교인 반면, 이후 교육부가 1백8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분교 3천8백2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밝혀 전체의 54.2%가 통폐합 대상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3차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문국진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3차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현 변호사는 문국진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

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고, 설사 가혹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문서의 후유증이 고문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고문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리며, 문국진씨에 대해 고문에 의한 "심인성 편 집중적 정신병"이라고 의사 소견서를 써준 배기영 박사(인의협 공동의장, 동교신 경정신과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캘거리 여성단체 방문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이문자 상담부장, 남중지간사와 쉼터상담원 8명은 캐나다의 쉼터관련 단체들과 교류를 맺기위해 오는 18부터 2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들이 방문할 캘거리 여성단체는 '캘거리 여성비상피난처'(Calgary Women's Emergency Shelter), '캘거리 외국인여성노동자협회'(Calgary Immigrant Women's Association), '원주민 여성피난처'(Native Women's Shelter), '캘거리 법률상담소'(Calgary Legal Guidance)등이다.

'수배제등 감압조치 철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양규현등, 전노대)는 14일 "정부와 사용자측에 대해 노사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노대 공동대표에 대표에 대한 수배등 감압조치를 철폐"하고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등 교섭 진행중인 사업장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전노대는 또 "김연환 상임의장등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감압조치를 철폐하지 않고 금호타이어등 경찰투입으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에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는 별도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사 안내 ◆

- 동양 여운형선생 47주년 추모식 및 총회
·일시 : 19일 오후 1시/ ·장소 : 우이동묘소
·주최 : 동양 여운형선생 추모사업회(☎ 275-1927)
- 제2회 기사연 통일마당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일시 : 19일 오후 2-6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발표 : 김정일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 남북의 화해와 평화구조 정착(이삼열)/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장정구)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국민인권기구란?

편집주: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을 국가 또는 국내인권기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기구의 본래 목적이 국가를 대표한다기 보다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국민인권기구로 번역하였다.

국민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는 또한 국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및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국 내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성격의 국민인권기구는 작년 비엔나 인권대회를 계기로 국내 인권운동가 사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박원순 변호사는 월간 신동아에 기고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관기"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이 인권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인권청 또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치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번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에서 지역인권기구와 함께 국민인권기구는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국민인권기구의 역사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관심은 80년대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최초로 이 문제를 다룬 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가에게 "각각의 나라에 유엔인권위원회의 일을 심화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정보/자료그룹이나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정식으로 촉구하였다.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설정(Standard-setting)이 60-70년대에 활발해지면서 국민인권기구에 관한 논의도 활성화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 기구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을 각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엔 인권

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지침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78년 9월 18-29, 최초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민(National) 및 지방(Local) 인권기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작성된 지침은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존의 국민인권기구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상당수의 국민인권기구가 유엔 인권센터의 자문서비스와 기술적 지원(Advisory Service and Technical Assistance)하에 80년대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나라마다 정치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가 달라 국민인권기구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국민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교류하고 유엔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90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국민 및 지역인권기구가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초의 워크샵이 91년 10월 파리에서, 2차 워크샵이 93년 12월 튀니지에서 이어 개최되었다(두 워크샵에 한국정부 대표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

파리 국민인권기구 워크샵

파리 워크샵에서는 '국민인권기구와 국가의 관계', '국민인권기구와 인권관련기구와의 관계' 그리고 '국민인권기구의 관할권(Jurisdiction)과 권한(Competence)' 등이 논의되었다. 이 논의의 결과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이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93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민인권기구는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1.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보고서, 권고안, 제안문을 만들어 정부, 의회 등의 국가기구에 제출하고, 2.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3. 국제인권규약을 가입·비준하도록 권장하고, 4. 가입에 따른 정부의 인권보고서를 작성·제

출하고, 5. 인권의 보호와 신장과 관련된 지역과 유엔의 기구와 협력하고, 6. 제도교육 분야에서 인권교육과 조사연구계획을 지원하고, 7.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은 또한 국민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기구구성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격있는 전문가, 의회 등의 대표자와 해당 사회의 철학과 종교적 사상의 경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정부의 관련부서가 참여할 경우 자문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이다. 이밖에도 예산 및 부설기구의 확보, 임기 보장제도 등을 통한 운영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운영의 방법(Methods of operation)에서 파리원칙은 청문회, 조사, 실무소위원회 등 여러가지 구체적 방법을 거론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인권의 제분야에서 일하는 민간단체와의 관계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93년 12월의 튀니지 워크샵에서는 '파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차 회의는 아시아나 남미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대표를 선출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필리핀이 선출되었고 필리핀이 아시아지역의 조정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93년 방콕 및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논의

한편 93년 3월 방콕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 민간단체회의의 최종선언문에는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인권조약 비준, 인권침해감시, 인권교육 등 국민인권기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대표는 성명서에서는 이에 대해 "24. 인권을 진정으로 그리고 진실적으로 신장시키는데 국민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또한 그런 기구들의 개념화와 궁극적인 수립이 가장 좋게는 국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93 세계인권대회 자료집, 59쪽 24)고 입장을 표

(☞ 3면에 계속됨)

(☞ 2면에서 계속)

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신장에서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기초하여 정부조직과 비정부단체간에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표명하고"라고 언급한 바로 다음의 25항과 매우 대조적이다. 아태지역의 정부는 결국 원칙적으로 국민인권기구의 설립을 환영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의지도 표명했지만 민간단체가 국민인권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한편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최종선언문의 V.이행 및 감시방법에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해 국민기구를 수립하거나 강화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유엔의 활동과 계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인권기구를 사이에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했다.

국민인권기구의 종류

현재 약 30여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인권기구는 보통 인권위원회(Commissions Committees Councils) 형태이다. 이밖에도 옴부즈맨(Ombudsmen), 중재자(Mediators), 민중의 옹호자(People's Advocates)라고 부르는 유사한 기구도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 처럼 두가지 다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이름이 비슷해도 나라마다 구성, 권한과 책임, 기능 등이 다르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권위원회는 차별(Discrimination)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주로 다룬다. 그리고 개인, 사립기관 및 정부의 행위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룬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옴부즈맨으로 대표되는 제도는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공정성과 준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주로 다루며 인권침해도 주로 개인의 청원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두 기구 모두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두 기구가 내린 결정은 보통 강제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권고안의 성격을 취한다.

이밖에 한 사회에서 특별한 인권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약자집단을 위한 전문기구(Specialized Institutions)가 독립적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소수집단에는 주로 인종·언어·종교에 따른 소수, 원주민·외국인 이주자·외국인 노동자·난민·아동·여성·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이 전문기구는 정부의 정책이 이들 소

수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권의 입장에서 감시·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인권단체의 참여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파리 워크샵에서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케마이스 차마리(Khemais Chamari)씨는 "유엔 인권센터의 국민인권기구를 설립하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특히 남쪽의 민간인권단체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국가가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리라고 믿을 수 없으며, 둘째, 기존의 여러 국민인권기구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운영되므로 오히려 국민인권기구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기능을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 "국민인권기구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인권의 대의에 순수한 열정을 지닌 민간인권단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서울 워크샵에서 한국정부가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다시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불법적 노동운동 탄압과 학생들의 불법연행등을 볼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 그러나 '소 귀에 경 읽기'의 어리석음을 무릎쓰고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몇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국제화 시대에 인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최근 국제화 및 지구화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다. 인권의 입장에서 국제화란 국제인권규약의 수준으로 국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과거 '인권후진국' 시절 주장했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유혹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인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하는 것이 허구적인 국가경쟁력이 아닌 참된 국민경쟁력의 요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지역인권기구 설립에의 적극적 참여도 마찬가지로 국민인권기구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이 국민인권기구가 단숨에 행정책 또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될 때 국민인권기구는 기존의 유명무실한 여러 인권관련 제

도처럼 반인권적 제도를 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윤리'나 '도덕' 대신 '인권교육'을

국민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라는 소극적 측면에서 인권의 증진이라는 적극적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외국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인권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내 유네스코 위원장이 인권교육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은 그 이유이다). 그러나 국내의 유네스코는 인권교육에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전교조 문제가 한참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를 때 한국의 유네스코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요즘 반인권적 세태와 이기주의적 풍조를 두고 세상 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권교육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제도교육에서 윤리나 도덕 대신 인권을 가르쳐야 한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적 가치관으로부터 건강한 공동체 윤리를 지킬 수 있다.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차마리씨도 지적했지만 사실 권력침해의 주인공인 국가권력이 스스로 국민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은 모순된 것처럼 들린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서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바로 국가권력이다. 국민인권기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 제도적 대안이다. 따라서 국민인권기구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파리원칙'이 여러 곳에서 강조하듯이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 즉 민간인권기구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과거와 외국의 경험을 비추어 볼때 민간단체의 참여가 저절로 보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현실은 인권이 국민 각자와 민간인권단체의 끊임없는 감시와 압력에 의해서 보호되고 신장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인권옹호연맹의 정문 앞에 붙어 있는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Liberty is the price of eternal vigilance)"라는 구호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등 적용

지난 6월 한달동안 시국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이 무려 2백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의 '양심수 후원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후원회 소식지』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6·18 남측선 사건' 구속자 1백15명, 철도·지하철 파업관련 노동자 42명, 국제사회주의자 그룹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3명, 광주미문화원앞 시위등 4명에 이른다. 민가협은 "신문, 구속자 가족, 노조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남측선 구속자는 민가협 발표보다 많은 1백17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기타교통방해 혐의, 기물파손 혐의, 노동쟁의조정

법상의 제3차개입 혐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가입, 찬양동조, 국가기밀누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6월달에 시국관련 구속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남측선,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 등이 유난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선등의 1백15명 구속, 철도·지하철파업의 대량구속 등은 북한핵 문제로 조성된 '신공안' 분위기의 결과라는 혐의가 짙다. 또 7년전 출판한 책마저 문제삼은 백산서당의 김철미씨 구속에서 보듯이 잠깐동안 개폐는쟁을 벌였던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끝없이 '양심수'를 양산하는 원천기능'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또 독재정권 시절 노동자의 권익을 탄압하는데 이용되고 ILO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직권중재, 3차개입금지

등으로 인한 구속도 여전하다.

한편 지난 13일 경찰이 서충선 간부등 55명을 구속영장없이 연행·조사하고 집견을 못하게 하는 등 초보적인 인신구금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유지장 및 교도소를 채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국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의 민주적 개혁과 형사소송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는 6월과 같은 대량구속으로 감옥은 더욱 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2년 전대협 조동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5일 범청학련 결성식을 주도, 이적단체구성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하(24, 92년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전대협 제6기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해 4월8일부터 10일까지 인화대에서 열린 전대협 6기 총회 및 범청학련 건설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 행사 안내 ◆

- 몽양 여운형선생 47주년 추모식 및 총회
 -일시 : 7월 19일 오후1시 / 장소 : 우이동묘소
 -주최 : 몽양 여운형선생 추모사업회(☎ 275-1927)
- 제2회 기사연 통일마당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일시 : 7월 19일 오후2-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발표 : 김정일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 남북의 화해와 평화구조 정착(이상열)/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장정구)

27일부터 어린이 여름학교 전교조 초등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여름방학을 맞아 94년 어린이 여름학교를 각 지부별로 다양하게 마련했다. 자연 속에서 조사활동등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민속놀이, 노래등 우리 것을 배우는 여름학교는 지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7월 27-29일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지회는 경기도 가평 명지산 계곡에서 국민학교 3학년이상 어린이 1백명과 교사 30명이 함께 하는 '제2회 여름 어린이 숲속학교'를 가질 예정이다. 전북지부 고창지회도 같은 기간 4학년이상 어린이 50명과 '94 참교육 해돋이학교'를 갖는다.

7월 28-30일 인천지부 초등지회는 경기도 가평 청파수련원에서 3학년이상 어린이들과 '풀벌레 우는 교실'을, 7월 27-31일 대구지부 초등지회는 대구교대와 경산군 와촌면 계곡에서 4학년이상을 대상으로 '94 민들레학교 여름동네'를 갖는다. 이밖에도 경기도 여주, 강화, 의정부 등 5개 지역에서 여름학교를 연다. 회비는 숙식비, 교통비, 교육비를 포함해서 4만원안팎이다.

전교조 초등위원회 : 675-6181, 2, 3 /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지회 : 233-7963, 0216 / 전북지부 고창지회 : 0667-64-1992 / 인천지부 초등지회 : 032-511-5307 / 대구지부 초등지회 : 053-620-1582

단체탐방 25 / 한국사회정책학회

일이 터졌다. 마땅히 정리해 논 자료도 없고 찾으려니 막막하다. 이런 거 어디서 좀 본것 없어요? 물어 물어 찾아보면 문제와는 거리가 먼 난해하고 붕 뜬 소리 뿐이다. 대학가마다 신문지상마다 무슨 무슨 학회, 무슨 무슨 심포지엄 많기도 한데 이 급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디서 다루나, 전문가의 진단은 이리도 많지만 한데 구체적 프로그램과 대안은?

이더로 꼭꼭 숨었나? 현장감, 실무력, 전문적 연구력, 대안제시! 이 모두를 완전군장하듯 짊어지고 뛰어오라는 것인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눠지고 뿔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문제가 닥치기 전에 먼저 고민하기에는 호흡이 너무 벅찬가?

푸념이 길었다. 어느때 보다도 '비판을 넘어선 비판', '문제제기를 넘어선 대안제시'가 우리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고민되는 지극, 위와 같은 푸념을 하기에는 모두의 발걸음이 바쁘고 험잡기만 하다. 오늘은 이런 문제와 가까이 있고자 '연구와 운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국사회정책학회를 만났다.

올해 2월 22일 심창섭·이금순 두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합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가 되어준 것이 바로 한국사회정책학회였다. 한국사회정책학회의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계기로 알게 된 학회측 이남진 변호사를 통하여 이뤄진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사회부가 올 1월에 고시한 생활보호사업 지침상의 94년도 생계보호기준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못미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정책학회의 경제학 연구자

들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10만 5천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현재의 월 6만 5천원은 생존만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하여는 생활보호급여를 현실에 맞

당면 사회문제의 실천적인 해결! 사회발전을 기대하는 사람들

게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7일 '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 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현행제도에 아무런 위헌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각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아뭏든 이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수준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 문제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청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개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던 사회정책학회는 91년 3월에 시작되어 93년 2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명칭을 달게 되었다. 19세기 중반의 독일사회정책학회와 영국의 페이비언협회를 모델로 하여 점진적 사회개혁지도모임에 도움이 되고자 한 이 학회는 당면한 사회문제에 관한 실천적인 해결방향과 대책을 제시하여 점진적, 개량적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비리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는 깊이있는 연구와 정책제시. 그에 관련된 실천에 주력하고자 한다.

현재 학회의 구성원은 사회과학분야 전공한 대학교 교원 및 동등한 경력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84명에 이른다. 회원들은 30-40대 중반으로 소위 '중년'보다는 '현장의 식'이 있는 소장 및 일부 중년 학자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다. 현재는 구성원의 자

격을 교직, 연구소 재직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직활동이 탄탄히 이루어진 후에는 사회활동가, 대학원생 등을 준회원으로 개방하여 조직의 확대도 고려해 볼 생각이다. 주요 조직구성은 회장 손준규교수(동국대 사회학과), 부회장 오병선교수(서강대 법학과), 총무 김중호교수(연세대 법학과)와 정치·사회·경제·노동·복지·주택·보건·환경 8개분과의 간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가정·교육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각 분과 구성에서 나타나듯 사회과학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연계성 있는 학문간에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분과활동의 결실로써 93년 10월에 '경제사회발전과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와 위에서 말했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청구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블루라운드, 그린라운드등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국내 사회복지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3차개입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파업권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개정등을 권고한 비에서 나타나듯 블루라운드의 서막이 드러나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측과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시하며 이와 관련된 학술발표회만이 아니라 관련단체와의 조인, 관계부처와의 면담과 설득, 매스컴운용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그간 운동세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관습적 운동양식과 '즉각적' 반응등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정책학회는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더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겨서 사회개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그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중추적 이념과 전망체제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만큼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노동약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제 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18일 개막

인권침해 예방위한 정보확산, 국제인권규범의 실현등 공감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숍이 18일 오전 10시 힐튼호텔에서 세계 각 지역의 인권기구 대표자와 전문가, 아태지역 국가의 인권기구 및 인권담당 정부대표, 그리고 국내외 인권관련 민간단체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국내인권단체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NET) 이외에도 국제엠베스티 한국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대협, 대한변협 등이 업저버로 참여하였다.

제3회 아태지역 인권워크숍은 93년 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2차 워크숍과 대조적으로 이번 서울워크숍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언론도 한겨레 신문이 인권고등판무관을 인터뷰하고 일부 방송사만이 취재활동을 벌였다. 유엔 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권단

체의 적극적 참여에 비해 한국의 언론이 너무 무관심이 하다"며 실망의 빛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라소 고등판무관은 오후에 김영삼 대통령을

5월광장어머니회 김선명씨 석방촉구운동 벌여

과거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6월 중순 「5월광장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는 7일 회장 에베 보나피니씨와 후아나 메에르 데 빠르가 맨서 이름으로 초청추진위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5월광장어머니회」는 편지에서 "44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선명씨의 상황을 전유럽에 알리고 즉각적인 석방 촉구를 위해 프랑스에 있는 5월광장어머니회 대표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5월광장어머니회는 "김선명씨를 비롯해 독재자가 만들어낸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하

예방한 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회원들과 50여분에 걸쳐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23면).

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5월광장어머니회」의 후아나씨등 3명은 한국방문 중 김선명씨를 면회하기 위해 김씨가 있는 대전교도소를 방문한 바 있다.

철도·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21일 시민·여성단체 토론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여성·종교단체는 2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의 철도, 지하철 만들기」 대토론회를 벌인다. 주최측은 철도·지하철 파업이 일단락되었지만 사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오늘날 지하철·철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진단과 개선대

책을 올바로 수립하고자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서선덕(교통개발연구원 철도연구원실장)씨가 '철도와 지하철 안전과 문제점'을,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씨가 '철도·지하철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조중래(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씨가 '철도, 지하철운영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발표한다.

문의 : 274-2883(여연) 271-0491(학단협)

미군범죄근절본부 김분임씨 살해범 검거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박순금등)는 18일 주한미국 대사 앞으로 플로리다주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김분임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범인검거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82년 국제결혼을 해서 이 민간 김분임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30분경 집안 목욕탕 욕조에서 두 자녀와 함께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미경찰은 김씨와 아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김씨의 남편 에드워드 자크레브스키 공군중사를 지목하고 6월 17일 수배령을 내린 상태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 공 판 안 내 ◆

□7월 20일(수)
 ·정용화, 업무방해등, 10시, 422호, 선고
 ·정재원, 특경가법 위반, 2시, 425호, 41회
 □7월 2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속행
 ·신학철, 국가보안법, 3시, 422호, 속행
 ·장영자, 특경가법 위반, 10시, 423호, 7회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특집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편집주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첫날인 18일 열린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한다.
 7월20일자(209호)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제도에 관한 내용을 실는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상임대표 고영구, 인권협)가 주선한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의 간담회가 인권협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힐튼호텔 국제실에서 열렸다.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이루어진 이 간담회에서 인권협은 한국의 최근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하였고 라소 고등판무관은 이에 대한 관심표명과 함께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간담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원래 예정된 30분을 넘겨 약 50분 가량 진행되었다.

라소 고등판무관은 인사말에서 "개인적으로 민간인권단체와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권단체가 전반적인 인권증진 이외에도 인권고등판무관제도의 설립 등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여 지금 인권이 유엔의 사업에서 우선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난 후 민변의 청정배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주요 인권단체가 한시적인 세계인권대회 공동위(KONUCH)에서 보다 항구적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로 조직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하면서 "비록 한국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B규약)에 지난 90년 가입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에서 더 이상 인권단압이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인권탄압의 주된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주요 국제인권

조약의 비준도 중요하지만 이의 구체적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한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관행에서 국제법의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국내의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새로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대한 기대가 높음에 비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고등판무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91년에 비로소 유엔에 가입하여 민간단체의 유엔 인권기구에의 참여도 최근에 들어와 활

인권상황 개선위해

민간인권단체의 영향력 확대해야

성화 되었다"고 말하였다. 조 변호사는 "국내에서 유엔 인권자료정보센터의 설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조만간에 실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라소 판무관과 인권센터의 대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라소 고등판무관은 답변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지만 고등판무관의 역할은 민간단체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는 활동가로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비난을 통한 압력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총회로부터 정부와의 대화를 주요한 임무로 부여받았고 정부에게 인권증진이 최상의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민간단체는 많은 수록 좋지만 효과적 활동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충고하면서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단체는 정부 등 외부로부터 독립

적이어야 한다. 자료정보센터와 같은 사업은 유엔 인권센터의 재정난으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민간단체 스스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나름대로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경우 인권상황이 과거에 비해 점점 개선되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보다 나은 인권상황을 위해 계속 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인정하고 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법원의 광노현 교수는 "사상문제로 44년 동안 감옥에 있는 최장기수 김선명 할아버지 이외에도 30년 이상 감옥에 있는 양심수의 수가 14명이나 된다"며 한국정부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수는 "감

옥의 양심수 때문에 어머님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민가협 어머니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광 교수는 또한 "지난 6월 2백여명이 국가보안법과 노동약법에 의해 구속되었고 최근 김일성주석 조문시비와 관련하여 또 불법 구속사건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수의 석방과 사상전향제도의 폐지가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말했다.

광 교수의 발언에 대해 라소 고등판무관은 "생각할 권리(Right To Think)야 말로 다른 창조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성이"고 말하면서 "자유로운 의견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그는 "자료와 보고서를 보내주면 자세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가협 어머니들의 용기와 투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인권침해의 파수꾼으로서 계속 열심히 일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지상중계

워크숍은 의장으로 선출된 한국정부 대표인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공식 개막되었다.

첫 개막연설을 한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이번 워크숍이 한국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인권회의"라고 지적하면서 "작년 2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이런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민주주의, 자유, 복지 및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을 소개하였다. 한 장관은 '인권, 민주주의 및 발전의 상호연관성'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개인의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해주고 이는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의 기본을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아태지역이 지역인권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을 지적하면서 인권분야의 공동 현안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권포럼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유엔 인권관련기구의 업무 조정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제도의 설립이 제안되었고 이어서 열린 93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자신이 첫 고등판무관으로 선출되었다"며 자신이 판무관이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관련활동의 효율성은 각국 정부의 의지와 투신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라소 판무관은 "유엔의 인권관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행동(Preventive Action)이라고 생각한

다"고 전제하고 "예방행동은 가장 폭넓은 차원에서 인권에 관한 정보의 확산과 배포 그리고 국제인권규범과 기준들이 각 나라에서 실현되는데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유엔 인권센터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라소 씨는 아태지역에서 지역인권기구와 국민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한 유엔 인권센터의 관심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설명하고 나서 "이번 서울 워크숍이 '비엔나 선언과 실천계획'의 여러 권고안 가운데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천계획의 개발, 아태지역에서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한 전략의 개발, 그리고 아태지역의 국가들에 의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촉구와 그러한 국제인권기준의 실현의 실질적 함의의 검토라는 세가지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두 개막연설에 따른 휴식시간 이후 3명의 전문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첫 발표자인 법무부 소속의 주광일 씨는 한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인권의 실현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곧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방콕 주재 국제아동기금(UNICEF) 아시아 자문위원인 푸리페이션 쿤손빙 여사는 인권의 보편적 문화를 위해서 "민주화(Democratization),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탈정치(Depoliticization)"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쿤손빙 여사는 "유엔의 인권관련기구가 체내바, 뉴욕 등 서방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인권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민간단체(NGO)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나열하면서 유엔기구의 민주화와 탈집중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이 사실 가장 정치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확인된

만큼 정치적인 해석이나 불필요한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집중하자"고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집트 출신의 이브라힘 바다위 엘 세이크 전 아프리카 개인권 및 민주권위원회 의장은 아태지역에서의 인권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의식한 듯 "아프리카 인권헌장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B규약)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A규약)에 대해서도 종합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인권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권보장 없이 안보와 번영이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특정 상황을 핑계로 보편적 인권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무가 아프리카 인권헌장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과 보편적 인권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세명의 발표가 끝난 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몽고, 호주, 이란 등의 정부대표자가 발표에 대해 간단히 논평을 하였다. 이어서 신혜수 한국 정대협 대표는 "정신대문제가 유엔인권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인권기구에 민간단체(NGO)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휴식후 재개된 회의에서는 워크숍의 첫 주제인 지역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필리핀의 쿤손빙 여사는 "아태지역에서 지역인권기구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시도들"에 대한 발제에서 먼저 냉전종식, 남북의 경제적 갈등 심화, 종족갈등의 등장, 대량학살, 강화되는 지역이 기주의 등 지구적 차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아태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판적인 경향을 몇가지 나열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부터 시작된 지역인권기구에 대한 정부대표들의 논의 진전과 93년 3월 방콕 세계인권대회 아태지역 민간단체회의의 성과를 희망적 징표의 예로 들었다. 쿤손빙 여사의 발표 후 몇몇 정부대표가 이에 대한 논평을 하였고 본격적인 토론은 다음날 다시 열기로 하고 하루 일정을 모두 마쳤다.

◆ 행사 안내 ◆

- 몽양 여운형선생 47주년 추모식 및 총회
 - 일시 : 7월 19일 오후1시 / 장소 : 우이동묘소
 - 주최 : 몽양 여운형선생 추모사업회(☎ 275-1927)
- 제2회 기사연 통일마당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 일시 : 7월 19일 오후2-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 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 발표 : 김정일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 남북의 화해와 평화구조 정착(이삼열)/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장정구)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흥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북한 김일성주석 조문문제로 마녀사냥 바람이 또 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일 김영삼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유서대필 사건'등을 상기시키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이같은 총장들의 발언에 대해 "학생들과는 사계시간인 총장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최근 학생들이 대량구속되는 등 정부에 일방적으로 탄압받던 것에 대해 항의하고 선처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지성인을 상징하는 대학총장으로서 위신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전국민이 벌인 우루과이라운드 비준반

대 투쟁을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참여한 총장들은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과 박흥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이 회생을 당할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학생운동을 가리켜들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참여한 총장들은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과 박흥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민가협은 또한 현재 5백18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고, 날마다 각 대학과 노동현장에 공권력 투입과 불법연행, 구속 등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한국총학생회연합」(의장 김현준, 한총련)은 20일 오전 10시 한양대총

노조원 대량구속징계철회 안 할 경우 재파업

서울지하철노조 19일 대의원대회

「서울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은 19일 군자차량기지에서의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와 공사측이 노조원 대량구속과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파업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의행위를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대의원 1백57명 중 98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정부와 공사측에 징계 등 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8월 초 재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통공단은 18일 이번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해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위원장 강한규(37)씨등 10명을 파면하고 조직부장 박민호(32)씨등 3명을 해임, 모두 13명을 해고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행사 안내 ◆

- 무라야마 일본수상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일시 : 7월 2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소회의실(중로5가)
 - 주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7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층
 - 주제발표 : 국제화에 대응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발전 방향(김은희)
 -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788-2299, 2295)

아태지역 인권위크샵 특집 4 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인권고등판무관(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는 48년 유엔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로 계속해서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93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다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실 최근 유엔 인권기구 실무자와 국제인권운동 활동가 사이에서는 유엔 인권관련 기구의 조직과 구조가 복잡하여 기구들과 부서들간의 업무 조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게다가 세계 각 지역에서 빈발하는 긴급한 인권침해 사태에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제대로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엔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권고등판무관제도

일자). 결의안에 따르면 인권고등판무관은 사무부총장(Under-Secretary-General)급으로 유엔사무총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고, 지역별 순환원칙을 따르며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권한으로 모든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증진 및 보호하고, 이를 위해서 유엔 인권센터의 업무감독, 인권기구의 업무 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실은 제네바에 두고 연락사무소를 뉴욕에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결의안에 따라 에쿠아도르 출신 외교관인 호세 아얄라 라소(Jose Ayala

신설된 고등판무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 설치 제안되었다. 따라서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이 제안은 많은 민간단체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제엠네스티(AI)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비엔나 대회에 제출한 국제엠네스티의 제안문은 "유엔의 인권기관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고문, 실종, 비사법적 처형 등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하면서 인권고등판무관 제도가 "유엔 인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비엔나 대회는 이러한 제안을 검토한 후 "제48차 유엔총회에서 대회보고서를 검토할 때 모든 인권의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인권고등판무관의 신설문제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사안으로 다루기를 권고한다"는 항목을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는 인권고등판무관을 신설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번역 전문은 하루소식 80호, 94년 1월 7

Lasso)씨가 94년 2월 1일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인권고등판무관제의 신설과 라소씨의 임명에 대해 많은 국제인권 운동단체들은 실망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인권고등판무관의 책무를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할을 매우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엠네스티의 제안문에서 지적했듯이 인권고등판무관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fact-finding)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사파견' 등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이 결의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신 '정부와 대화한다'는 매우 애매하고 약한 구절이 삽입되었다. 이는 인권고등판무관제도가 서방국가의 '인권외교'에 의해 '악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 등 일부 제3세계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여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둘째 이유는 호세 아얄라 라소씨의 성향과 배경 때문이다. 라소씨는 현재 62세로 에쿠아도르 정부에서 62년부터 77년까지 일했는데 최종 직위는 외무부장관이었다. 이후 그는 벨기에,

페루 그리고 유엔 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최근까지 외교관으로 일해왔을 뿐 인권분야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에 수많은 인권문제를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듯 올해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약 50여명의 NGO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나는 여러분이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원하고 고등판무관도 즉시 사태에 대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 나의 견해는 다르다. 나는 인권문제에 외교를 도입하여 정부를 대화에 참여시키기 원한다.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이다. 그리고 외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난주 7월 18일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위크샵 기간 중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와 간담회를 가진 라소 고등판무관은 자신에 대한 민간단체의 기대와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고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인권하루소식> 208호, 7월 19일자 참조). 한편 유엔 인권센터 등 인권기구의 실무자들은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제도가 그러하듯이 인권고등판무관도 한계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들이 신설된 고등판무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서울 위크샵에 참석한 유엔 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비록 인권고등판무관제도가 신설되었고 고등판무관도 임명되었지만 아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부서(Infra-structure) 등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과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고등판무관에게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결국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민간단체가 주체적으로 주도해야 할 영원한 과제라는 것이 이번 인권고등판무관제도의 설립과 임명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다.

<이달의 주제 - 노동약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 국제여론 환기위해 '민중재판'도 추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대협은 20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무라야마 일본수상의 방한을 앞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교류센터기금안'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국제법질서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관련 기사 2면참조).

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내놓은 '아시아교류센터기금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일본의 아시아교류센터기금안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상규명과 개인배상, 책임자처벌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오12시 정대협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시아교류기금안 철회를 요구하는 1백27차 수요시위를 가졌으며 오후2시에 청와대 앞에서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다. 또한 23일에는 무라야마 수상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수상 숙소앞에서 아시아교류기금 철회와 법적 책임이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질 계획이다. 정대협은 오는 8월초에는 중국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출간할 예정이고, 11월에는 일본식민지 지배정책에 관한 아시아지역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또 적당한 때에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백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태지역 인권포럼 정례화 합의

20일 아태지역 인권위크샵 폐막
정부 인권포럼논의 '주도', 국민인권기구에는 '침묵'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차 아태지역 유엔 인권위크샵'이 "아태지역 유엔 인권포럼(UN Forum for the Asia-Pacific Region on Human Rights Issues)"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의장의 마무리 발언(Conclu-

ding Remark)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회의의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까지도 내부합의를 이루지 못해 폐포럼이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지연되다가 하였다. 막후협상에 참가자 중 한명은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정례적인 포럼보다는 가급적 느슨한 형태의 논의구조 또는 동남아시아(ASEAN) 등 소지역 중심의 접근을 주장해 최종합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협상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아태지역 정부대표들은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아태지역 인권포럼' 제안을 중심으로 비공식협의를 계속하였는데 한 장관은 18일 개막연설에서 '아태지역에서 인권관련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정례적 아태지역 인권위크샵'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오전에 시작한 비공식협의를 지연되어 11시가 조금 지나 회의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아태지역에서 이루어진 실천을 평가하고 인권교육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호주의 브라이언 베데킨씨는 110쪽에 달하는 '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소개하면서 "국가차원의 실천계획 또한 국민인권기구 없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국민인권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주는 93년 6월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차원의 실천계획을 수립한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유네스코위원장은 차인석교수는 '아태지역에서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전략의 개발'이란 논문에서 "부정의와 불관용으로 부터 해방은 이제 더 이상 정례적인 포럼보다는 가급적 느슨한 형태의 논의구조 또는 동남아시아(ASEAN) 등 소지역 중심의 접근을 주장해 최종합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협상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아태지역 정부대표들은 (2면에서 계속됨)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1면에서 계속)

권교육, 특히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이 없이는 민주주의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없다"고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제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시간부족으로 국가 차원의 실천계획과 인권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일부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오후 회의 또한 정부대표간 합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5시가 넘어 개회되었다. 의장은 마무리 발언형식의 합의문에서 "93년 자카르타 워크샵에서 합의된 단계별 접근(Step-by-step approach)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시도하고 있는 소지역별 접근(Sub-regional building-block approach) 방식을 한 장판이 제안한 아태지역 인권 포럼 제안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 아얌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과 한국정부의 폐회사가 있었다. 의례적인 한국정부의 폐회사와 대조적으로 라소 고등판무관은 유엔개발계획의 야곱 거이뜨씨가 대독한 폐회사에서 "민간 인권단체의 참여없이 인권이 실현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한국의 민간인권단체가 보여준 솔직함과 헌신성 그리고 인권의식과 양을 위한 역할"을 이례적으로 지적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인권단체가 "93년 방콕과 비엔나 인권대회 그리고 이번 서울 워크샵

을 비롯한 그 이후의 후속 사업에 참여하여 인권보장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서로 보완적이다"고 재강조하였다.

워크샵의 결과에 대해 유엔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비록 유럽 등 다른 지역처럼 인권헌장이나 공식적인 지역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구체적 진전이 없었지만 아태지역정부의 과거입장을 고려할 때 이번 워크샵과 유사한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이번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KOHRNET)'의 이성훈씨는 "대다수 정부대표의 발언이 형식적이거나 자국정부의 입장을 방어 또는 홍보하는 내용이어서 버마, 부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태지역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지역인권기구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회의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그는 또한 "한 장관의 제안이 참가자들에게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아태지역의 인권영역에서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주최국의 체면은 세워지만 정작 중요한 국민인권기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한국정부의 이중적인 인권정책을 새삼 확인했

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인권협은 워크샵 첫날인 18일 아얌라 라소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회의 기간 중 인권협 회원들은 단체홍보물, 한국인권상황

보고서, 국제앰네스티가 발행한 한국인권침해보고서 등을 각국 정부대표와 참가자에게 배포하면서 한국의 최근 인권상황을 알렸다.

국제중재재판소란?

편집주 : 정대협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문제등의 해결하기 위해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본정부에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해 소개한다.

국제중재재판소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1899년 7월과 1907년 10월에 열린 국제분쟁평화처리조약에 두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재판소 국제 사무국과 법정이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원래 국가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35년 그 선례가 있다. 또한 62년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규칙'이 제정되어 일반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93년 7월 '국가와 개인간의 선택규칙'이 제정되어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소기간은 쌍방이 합의하면 1년내에도 해결될 수 있고, 단 1심뿐이다. 재판비용은 쌍방이 예납하는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한편의 예납으로 시작할 수 있고 판결에 의해 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재판관 선임은 재판관 리스트 속에서 쌍방이 일정수의 재판관을 선택하며 동시에 중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선임하고 그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법정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소 내의 소법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 조사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는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와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각료회의의 선언문에서는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중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 범죄자를 비난하고 그것에 대한 범죄자 처벌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회부될 경우 결과에 대해서는 대표적 판례로 자네스 경우를 들 수 있다. 멕시코 광산에서 미국인이 멕시코인으로 부터 살해당했으나 멕시코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범을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정부는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멕시코 당국이 범인을 체포도, 처벌도 안한 것은 멕시코에 책임이 있다며 일반청구위원회에 호소했다. 재판소는 살인이라고 하는 사인(私人)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이것과는 별개로 범인의 불체포, 불처벌에 대한 국가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멕시코에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사제단 "박흥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에 의한 것"

한교협인권위, 전대협동우회등 "사과해명 요구"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공동대표 김병상신부등, 사제단)은 21일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흥신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편견과 무지에 의한 것"이고 "청와대발언과 이후 기자회견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제이며, 대총장인 지성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을 이탈한 망상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한총권이 수사파들에 의해 조종을 받는 실을 고뇌하는 청년학생들의 자치적 결사라고 생각한다"며 "남한의 학생운동이 김정일에 의해 직접 조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박흥신부의 편견적 예단이며 "무지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박흥신부는 지난 83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사선) 사건과 91년 '유서대필' 사건 당시에도 공안정국에 편승해 민주세력탄압에 빌미를 제공"해 "사제단에서 그를 불러 없히 문책하고 꾸짖은 바 있지만 형제적 애정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상근, 한교협 인권위)도 이날 '박흥총장의 청와대 발언과 경찰의 연세대 도서관 난입에 대한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91년 '유서대필' 사건 때 그의 말이 얼마나 유효하게 이용되었는지 기억에 생생하다"며 "박흥신부 성직자와 교육자로서의 이성을 찾아 제자들과 학부도,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교협 인권위는 또 "현재와 같이 공단체가 아니라, 민족의 현실을 고뇌하는 청년학생들의 자치적 결사라고 생각한다"며 "남한의 학생운동이 김정일에 의해 직접 조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박흥신부의 편견적 예단이며 "무지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박흥신부는 지난 83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사선) 사건과 91년 '유서대필' 사건 당시에도 공안정국에 편승해 민주세력탄압에 빌미를 제공"해 "사제단에서 그를 불러 없히 문책하고 꾸짖은 바 있지만 형제적 애정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을 봤다는 3년 전에는 전대협 사무실에 팩시밀리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18일 회동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보다 주사파에 매력 더 느껴진다'고 면회간 나에게 말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장을병 총장은 21일 민가협 회원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오찬회동전에 면회를 한 일도 없다.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평불협은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구속되었다"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지난 13일과 16일에 서울과 광주에서 80여명이 넘는 한총련 학생들 연행, 강희남목사등 범민련지도자 구속, 세계경찰청 보안2과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법타스님의 구속사유는 평불협회보(발행인 송월주, 편집인 신법타) 11호에 '김일성 저작선집' 5권 147쪽 조국해방전쟁 부분을 게재한 혐의다. 그러나 평불협은 "평불협회보 11호에 실은 자료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얼마나 왜곡하고 날조하는 지를 보여주는 위함이다"라고 평불협회보 12호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공안정국 조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목적까지 밝힌 기사 내용을 문제삼아 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불협은 지난 92년 2월 통일관련사업을 위해 불자와 스님등이 조직한 것으로 통일원 등록단체이다.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20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 후 한국에서 수십명의 학생과 반대자들이 조문을 표하려 했거나 김주석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데에 우려를 표시하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앰네스티는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구속되었다"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지난 13일과 16일에 서울과 광주에서 80여명이 넘는 한총련 학생들 연행, 강희남목사등 범민련지도자 구속, 세계경찰청 보안2과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법타스님의 구속사유는 평불협회보(발행인 송월주, 편집인 신법타) 11호에 '김일성 저작선집' 5권 147쪽 조국해방전쟁 부분을 게재한 혐의다. 그러나 평불협은 "평불협회보 11호에 실은 자료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얼마나 왜곡하고 날조하는 지를 보여주는 위함이다"라고 평불협회보 12호에서 명시하고

◆ 94년 반핵아시아 포럼 한국위원회 결성식 ◆

·일시 : 7월 21일(목) 오후 6시
·장소 : 서울성공회 성가수녀원내 피정회관, 프레스센터 맞은 편 서울시의회 골목길 ☎ 735-7632)
·문의 : 325-5625, 732-6801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마지막 회)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편집주 : 제3차 아태지역 유엔 인권워크샵이 '아태지역 인권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일 3일간을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개막 전부터 이번 워크샵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비교적 상세한 보도를 해온 <인권하루소식>은 마지막 특집으로 이번 서울 워크샵의 성과와 의미를 분석한다.

아태지역 인권문제, 지구촌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라

90년대 들어서 냉전이 종식되고 유엔의 기능이 부활하면서 인권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수십년을 지속해온 남아공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자 지구촌의 관심은 이제 아태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아태지역은 남북한 이외에도 버마, 부간빌, 중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어 전세계 인권관계자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따라서 다른 대륙과 달리 아직 지역차원의 인권기구가 없는 아태지역에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는 유엔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90년 마닐라 1차워크샵, 93년 1월 자카르타 2차워크샵, 그리고 이번 서울의 3차워크샵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지역인권기구와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7월 14일, 15일자 참조).

문민정부 인권외교의 시험장

이러한 국제적 흐름 이외에도 이번 워크샵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 배경에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적극적 '인권외교' 정책이 있다. 작년 2월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민정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방어적 입장을 벗어나 인권분야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맞이하여 정부는 인권대사를 파견하였고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전세계 정부대표와 인권운동가 앞에서 마치 한국에 인권문제가 더 이상 없지는 것처럼 자신감 넘친 주장을 하기

도 하였다(한 장관의 선언은 비엔나 대회 마지막 날 국내에서 발생한 조국교수들이 「남한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대회후에는 이 대회에 참가한 노태훈씨를 구속, 오히려 노씨를 국제적 저명인사로 만드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의 인권외교정책은 사실 이번 서울 워크샵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즉 회의 첫날 한 부장관이 제안한 '경제적 아태지역 인권포럼'은 내용의 추상성과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알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과 대다수 정부대표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한국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아태지역 대다수 국가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에 더이상 불법구금등의 인권침해가 없다"며 청와대를 예방한 아알라 라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인권외교전략의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하다.

인권외교의 이점성과 모순

그러나 이러한 한국정부의 인권외교 전략은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인권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이다. 최근 유엔동국제기구는 한국정부에게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몇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9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시민정치적 권리(B규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의하고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가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국제노동기구도 한국의 제3차개입금지등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노동법 개정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최근 이 악법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요청하거나 '인권외교'를 내세

우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 국제인권의 기준으로!

'인권외교'의 철학적 빈곤 또한 지적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정부의 인권외교는 70년대 말 미국 카터 정부의 어슬픈 인권외교를 연상케한다. 현재 인권이 중요한 국제문제로 등장하였고 한국정부도 인권을 외교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인권문제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이를 다루는 방법이다. 경제문제는 국제정치의에 입각한 '국익'에 따라 다루어야 하지만 인권은 '국익'이 아니라 인권자체로 즉 인류공동체가 준수하고 합의한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인권이 '정치화'되거나 '외교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이번 서울 워크샵의 한국대표는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이었다. 이는 한국정부가 아직도 인권문제를 외교와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부대표들 '외교적' 발언만 일삼아

이번 워크샵 기간에 국제인권협약 가입과 실행,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의 실천, 인권교육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지만 역시 핵심적인 주제는 아태지역 인권기구와 국민인권기구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인도, 중국, 일본 등 아태지역의 지역강국이 지역인권기구에 대해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고 사전에 이번 회의에서 특정국가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발언이 추상적이거나 외교적인 사로 일관했고 발언의 목적 또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이 아닌 자국정부의 홍보나 체면지키기에 머물렀다.

국민인권기구 없는 지역인권기구는 공허할 뿐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위한 정례적인 아태인권포럼'이라는 빈약한 내용을 담은 한 장관의 제안 조차도 합의하는데 진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지역인권보장제도의 수립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면에 계속됨)

(2면에서 계속)

어주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 장관의 제안으로 아태지역 정부들을 상대로 '인권선진국'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워크샵 발표자들이 강조했듯이 제구실 못하는 국민인권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지역인권기구 논의는 공허하고 기만적 일 뿐이다. 한국정부는 결국 이번 회의에서 지역인권기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정작 국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민인권기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지역포럼의 정례화함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해마다' 국민인권기구의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참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인권협)를 비롯한 국내 민간단체들은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 워크샵을 맞이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다. 간략하게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의 성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의 간담회

먼저 신속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지난 5월 뒤늦게 알려진 한국정부의 A규약 보고서 제출 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이번에도 회의를 불과 2주 정도 앞두고 인권협은 회의일정을 알게 되었다. 가뜰이나 '신공안정국'의 대두로 바쁜 국내 대부분의 인권단체가 제대로 준비하기에 시간과 역량이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것이 앞으로 국제인권연대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번엔 배운 셈이다. 그러나 위안이라면 첫날 18일 아알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한국의 인권상황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소개한 것이 향후 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

인권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인권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두번째는 연구역량과 종합적 정책대안능력의 부재이다. 지역인권기구와 국민인권기구는 작년 방콕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이미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였다. 그러나 정작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국내에서 두 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제대로 없음을 드러냈다. 후속작업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인권기구가 국내인권운동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슈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아쉽지만 그나마 국민인권기구가 지금 전세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정도로 이번에는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분야에서 한국유네스코와 협력가능성 확인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분야에서 국내 유네스코와의 협력가능성이다. 지난 6월 20일 결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인권교육이 앞으로 인권협이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업의 하나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네스코 위원장 차인석 교수는 이번 워크샵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제유네스코가 발간한 인권교육자료 번역중이며 앞으로 인권교육문제를 주된 사업으로 전개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국제유네스코는 오랫동안 인권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유네스코는 인권교육은 커녕 전교조가 교육권확보를 위해 힘든 투쟁을 벌일 때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 기능을 서서히 회복한 유네스코가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이번 회의에 확인한 것은 귀중한 소득이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이외

에도 인권이 제도교육내의 공식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유기적 협력이 요청된다.

현대중공업 긴급조정권 발동 움직임 철회촉구

전노대 규탄집회등 연대활동 벌일 것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의장 권영길등, 전노대)는 21일 '최근 노동상황에 대한 전노대의 입장'을 통해 "정부가 노동쟁의 자체를 백안시하고 불순하게 여기는 경제논리와 공안논리에 휩싸여 무분별한 경찰 투입, 구속과 수배를 남발해 군사독재정권시절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개탄스럽다"며 노동탄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노대는 또 "이미 직장폐쇄를 내린 현대중공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평화적인 해결의 길은 봉쇄되고 전면적인 충돌만 야기될 것"이라며 "직장폐쇄조치와 긴급조정권 발동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지역별 규탄집회등 전노대 차원에서의 지지와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협 청와대 면담요구 강제해산 형의서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제등, 정대협)는 20일 정대협 대표단이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인' 철회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정대협 대표단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서한을 21일 청와대에 보냈다.

정대협은 서한에서 "할머니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역사의 증언자로 나섰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과 "관계 비서관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94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위원회 결성

한국반핵운동연락협의회, 전국연합자주통일위원회, 배달녹색연합 등 30여 단체와 50여명의 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위원회 결성식이 21일 오후 6시에 서울성공회 성가수녀원내 피정회관에서 열렸다.

'핵무기도 핵발전소도 없는 아시아'를 만들고자 아시아지역 민중들이 연대하여 93년 6월 일본에서 제1회 대회를 치루었고, 제2회 대회는 10월 경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민족의 화해와 단결의 밤 ◆

일시 : 7월 22일(금) 오후 6시
장소 : 63빌딩 국제회의장
출연 : 문성근, 임진택, 안치환, 노래마을, 김원중등
주최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745-5872)

<이달의 주제 - 노동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 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 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씨는 연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기업주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산재보험운용주체 논의에는 반드시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산재예방 특별사업계획'에서 산재보험보험 잉여금 중 3천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율을 0.7%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잉여금을 산재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상, 사회복지 등을 위한 직업재활 등에 우선 충당하고 예방을 위한 재정은 별도의 국고지원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노동부통계로도 매년 2만5천여명 이상의 신체장애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보험법의 근로복지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이 한해 90여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유해·위험물질의 게시와 교육의 내실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정보청구권의 구체화, 긴급한 유해·위험상황사의 대피 및 작업중지권 등이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행사 안내 ◆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금감마련을 위한 공연

"다시 써서으로"

·일시 : 7월 23일(토)/24일(일) 4시 30분
·장소 : 연세대 대강당
·출연 : 노래를 찾는 사람들/꽃다지/노래공장/천지인/노래선인/MBC·KBS·지하철·대우자동차·기아자동차노조 노래패/안치환/윤선애/류금신 등
·주최 : 민정련, 전노련, 전노운협, 진정추동
·문의 : 326-1275

□ 무라야마 수상 방한을 맞은

'아시아고려센터기금안' 백지화 요구시위
·장소 : 장충공원(정대협)/세종문화회관(태평양유족회)
·일시 : 7월23일(토) 1시 50분(정대협)/2시(태평양유족회)

□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반대와 장애인의 인권

·주제발표 :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분쟁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박대영교수·피어선대 사회복지학과)
·사례발표 : 시설건립반대와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대응(장애인복지지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 7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 521-5364)

지역연 일본 탁아시설 방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최현숙 회장등 13명은 7월 24일부터 8박9일간 일본 오사카 탁아시설 방문과 보육대회 참석등을 위해 출국한다. 이들은 30일까지 '유유아발달연구소', 오사카 민간탁아시설, 애심보육원등 오사카지역 탁아소 5곳을 둘러보게 된다. 또한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보육관련대회와 유유아발달연구소 스키 쇼조소장의 강연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두밀분교 폐교철회 지지방문-7월23~4일

두밀분교후원단체인 「참교육시민모임」(상임공동회장 김찬국등)은 23, 24일 '우리농촌 바로알기와 두밀분교 폐교철회 지지방문'을 벌인다. 참교육시민모임 회원과 어린이, 일반시민등 33명은 24일 오후 경기도 가평 두밀리를 찾아 주민들과 좌담회를 갖고, 삼삼오오 주민들 집에서 묵으며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교육시민모임」은 광주 망월동묘역에서 벌인 돌담쌓기처럼 두밀분교 폐교철회 염원을 돌담으로 쌓아올릴 계획을 잡고 있다.

참교육시민모임의 권광선씨는 "두밀분교는 단순히 산골학교 하나 없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농촌정책이 오히려 농촌살리기를 역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며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둘러 보는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탐방 26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장 충동에 자리잡은 노동사목 전국 사무국은 보기드문 마당 한 자락을 끌어안고 있다. 상추며 알타리무우가 곱게 자라 실무자들의 발상에 오를 뿐만 아니라 매연과 소음을 간대 없이 씻어내고, 전국의 노동사목집들에서 날아온 씨앗들이 즐거운 노동의 소망과 인간 사랑의 싹을 틔우고 있는 듯 하다.

전국노동사목은 반월, 성남, 부산, 광주 등 16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의체의 성격이 아니라 '탄남의 집, 새날의 집, 내일을 위한집, 노동자의 집' 등 다양한 명칭의 노동자의 대중공간들이 공동체 성격으로 뭉친 것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사목이 걸어온 길은 노동의 꿈과 희망을 소중히 여기며 총체적인 인간개발을 위해 자신을 투자해온 사람들의 어울림이었다.

70년대 JOC(지우세라 부르는 가톨릭노동청년회)활동을 통해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해고된 뒤에도 노동의 삶과 함께 하고자 시작한 것이 노동자를 위한 공간 마련이었다. 이 공간에서는 신변잡기를 얘기하며 노동문제상담도 하고 문화·놀이공간으로 독서, 등산, 기타배우기 등으로 어울리고 공동체전례와 성서모임을 가지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체험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지역속에 뿌리박고 노동운동과 함께하는 터춤투박이 되었고 지역노동자, 특히 처음 노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었다. 이런 대중공간으로서의 '사목집'들이 84년 노동사목 '연구소'로 모이게 되었고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의 노동사목의 모습이 된 것이다.

현재구조는 회장단과 정책위원회, 지도위원회(위원장 문정현신부, 직무대행 문규현신부), 각지역공간 대표자로 이루어진 실행위원회와 각 지역 노동사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 사무국에는 정인숙 회장, 총무, 교육분과, 신앙생활분과를 맡는 간사 3인 그리고 최영 정책위원장이 상근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노동계의 복음화와 교회 쇄신, 하느님나라 건설을 과제로한 노동상담, 문화공간 활용, 노조지원사업

인데 그중 주목할 것은 '자발교육'이라 불리는 교육활동이다. 자발(자기발견) 교육은 단순히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나 정치경제적 상황에의 눈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아의식, 새로운 가치관과 인간관을 내면화하는 심성개발 프로그램

일하는 노동자들 애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램이다. 인간과 노동에 대한 심성의 변화없는 노동자가 자본주의 인간관에 오염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노동사목의 교육활동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선진노조 활동가 교육구조였으며 현재는 지역노조협의회가 그 역할을 이어받고 있지만 인간개발과 인간발전에 초점을 둔 노동교육은 여전히 노동사목의 주요과업이며 울 하반기부터는 실무자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회보를 현재 53호까지 발행하였다. 또 올 10주년 행사로서 10월경에 전국가톨릭노동사목현장계정, 심포지엄, 전국노동자 문화제, 10주년사 발간 등을 기획하고 있다.

그간 활동에서 가지게 된 가장 큰 자부심은 10년 이상 지역에 뿌리박은 대중성을 바탕으로 87년 이후의 민주노조결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점이다. 전북노련의 결성등이 그 예이고, 10여년 동안 이합집산하거나 정파에 흔들림 없이 공동체적 관계로 단일한 전국조직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특히 독신여성노동운동가들의 힘이 컸는데 체계적노조와 전태일 기념관에서 간담회 열어진 정인숙 회장을 비롯하여 노동자를 위한 터를 닦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노동자의 얼굴을 애인보다 더 사랑하며 마주하고 살아온 이들의 삶이 노동사목의 동맥을 더욱 강하게 고동치게 한 것이다.

물론 어려움도 컸다. 조합결성을 시도하다가 관리자와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연행된 일들은 물론이지만 가장 큰 아픔은 교회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었다. 노동사목수도 성직자 모임에 소속된 신부, 수녀, 수사 10-11명이 영성적, 신앙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나 어떤 교구에서는 성당안에 있는 노동사목집을 철거하려고 해서 교회내에서 농성을 벌여야만 했던 일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부유해지고 커져가는 교회의 지붕아래 노동자를 위한 공간과 관심은 처마밑 신세인 것일까? 이는 해외원조가 울화로 끝나는등의 교회재정지원의 전무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모금에 의존해야 하는 노동사목의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노동사목은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는 구조마련과 해고노동자들이 노공해 비누공장을 차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교회내 신자를 자기대중화하고 연대의 틀로 이끌어내기 위해 가톨릭 사업체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의 치우개선노력에 힘쓰고 있다. 한 예로 93년 가톨릭노동노동조합 산하 8개 병원노조와 공동심포지엄(복음선교의 관점에서 본 가톨릭노동조합의 역할)을 가졌고 파티마병원노조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인바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활동가들에게 보내는 노동사목의 메시지를 들이보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인간이다. 노동은 창조적 기쁨의 원천이나, 일그러진 구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적, 굴절적 노동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다. 인간존엄성 약화에 따라 인권회복은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인간성의 회복, 인권이라는 것은 노동의 해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사회발전 세계정상회담 대비 「사회발전 한국포럼」 결성 국내 모든 단체에 개방 매달 1회 포럼 개최기로

내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SSD)을 준비하는 「사회발전 한국 포럼(WSSD Korean NGO Forum)」이 결성되었다. 지난 22일(금)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국내 민간 사회운동단체의 두번째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효과적인 참여 방식을 논의한 결과 매달 한번씩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포럼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참여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열렸는데 기사연 이선태 연구원의 회의록 낭독에 이어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성훈 씨가 그 동안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문자료를 토대로 사회발전 정상회담(WSSD)의 배경과 지금까지의 준비과정 및 예상되는 의제와 쟁점 등에 대해 간단히 발제를 하였다. 첫 모임은 기사연의 주관으로 지난 8월 가장 선교교육원에서 열렸다(<인권하루소식> 7월 9일자 참조).

포럼은 사회발전문제에 관심있는 국내의 모든 단체에 개방되며 첫 포럼은 8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럼의 주제는 「한국사회와 인간적 사회발전」이며 한국적 사회발전모델에서 파생된 사회문제들을 각 분야 사회단체의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및 비판적 검토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8월 22-9월 2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2차 준비

위원회(PrepCom)에 가급적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처음부터 참여한 기사연,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환경운동연합, 평화연구소, YMCA, 경실련, 민정연 이외에 전교조, YMCA, 전민련이 처음 참가하였다.

7.28-8.1 YMCA AI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열려 「양심수의 밤」등 특별행사도

민간차원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초의 인권관련 국제회의인 94년도 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YMCA관광호텔에서 열린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는 지역 인권운동의 활성화 및 엠네스티의 발전과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15개국 35명의 대표들과 국제집행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위원 마디 마파 스프리도(Mardi Mapa Suplido)씨를 비롯해 5명의 국제사무국 요원과 4명의 다른 지역 지

부대표들이 참석하며 아시아-태평양 조정위원회(위원장 마코토 테라나카)가 주관한다. 이번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의 주요안건은 △95년 세계북경여성대회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입장 정리 △하반기 인도네시아 캠페인 전략수립 △엠네스티

의 언어문제 △아시아 5개국 순방 콘서트 개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95년 엠네스티 국제대의원 총회 준비 등이다. 28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되는 지역대회는 29일부터 거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데 비공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지부에서는 고은태 부지부장, 회원 김민정씨가 참석하고 회의서기로 조호계(국제사무국 자원봉사자, 영국 유학중)씨가 참석한다. 단 개막식과 특별행사만이 공개적으로 열리며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이다.

특히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에 관한 국내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특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별행사도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양심수의 밤」으로 29일 오후 7시 코리안 호텔에서 2시간 30분가량 치뤄진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권을 주제로한 다양한 토론과 교류가 이뤄질 이날 행사에는 허버버 엠네스티 국제사무부 총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엠네스티」의 주제로 발

◆ 공 판 안 내 ◆

- 7월 26일(화)
 - 임창준, 국가보안법, 3시, 311호, 4회
 -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3회
 - 이정임, 국가보안법, 10시, 319호, 3회
 -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319호, 2회
 - 이길용,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2회

- 7월 28일(목)
 -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2시, 318호, 7회
 - 김두하,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2회

- 7월 29일(금)
 - 부해진, 국가보안법, 10시, 320호, 2회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교류센터기금안 반대”

일본총리에 전후문제 해결 촉구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방한한 23일 정신대배상등 전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태평양전쟁 피해자관련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공동대표 양순임등) 등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무라야마 총리의 숙소인 서울신라호텔 앞 장충단공원과 서울세종문화회관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무라야마 총리의 정신대문제적극 해결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 교류센터 설립계획 철회와 일본정부의 개인배상 실시 △원폭피해자를 일본피해자와 동등 대우할 것 △정신대배상등 전후처리를 마무리 짓고 피해자 배상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1면에서 계속)

표를 하며 국내에서는 김대중(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씨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인권」,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전환기의 한국인권운동과 국제연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30일 오후2시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대표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서의 인권운동 방향과 엠네스티의 전략에 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고, 31일 오후2시에는 콜롬비아 대사관 앞에서 콜롬비아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은 콜롬비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살해에 대한 항의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인권보장 촉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날 저녁7시에는 「엠네스티의 밤」이 열린다(문의 : 053-426-2533(한국지부), 732-8291~8(YMCA)).

◆ 인 권 간 행 들 ◆

□우리네 아이들(94년 6월)-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일하며 생각하며-우리 아이들의 나라(박금희)/일본의 보육현황과 보육운동의 과제(호리 마사츠구)/미국의 탁아경험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남명자)/94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원 두건의 어머니들(황미혜) 등

□노동과 건강(94년 6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
·주요내용 : 시론-산재보상보험제정운영권을 둘러싼 올바른 논의를 위하여/특집(최근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전폐전문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하여, 금융보험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지상중계-사단법인 사회환경정책연구소의 사회개발예산에 관한 토론회 등

□후원회 소식(94년 7월)-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요내용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조경순 선생님 편/또 공안정국인가-구속자 전원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주장한다/양심수 가족을 찾아서(변희숙씨의 어머니 이윤옥님)-다시는 누구 자식에게도 이런 일이 없는 좋은 세상을 기대합니다/6월에 구속된 양심수 등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94년 6월)-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주요내용 : 회원의 일터를 찾아서-포넬리 박순애 권사님의 하루/사랑을 나누는 사람들-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박수미)/연회방문기-대전교도소, 안학섭 선생님을 뵈고(손인선)/문민정부 1년, 인권의 현주소(김수경) 등

□사월혁명 회보(94년 7월)-사월혁명연구소
·주요내용 : 초점-한반도의 평화와 미국의 책임(John M. Swomley)/통일교육에서 본 한반도 통일교육의 신좌표(II, 전종득) 등

□한노협(94년 7월)-한국노동운동협의회
·주요내용 : 특집(핵과 민족자주권)-핵자주권과 민족주체성(노정선),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한반도 전략(존 스워리)/명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적인 삶과 원상회복을 위해(전해투)/자본의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박석운)/예멘내전의 배경과 교훈(박현용)/일본의 핵무장 어디까지 왔나?(전국연합 자동위) 등

□노동운동(94년 7·8월)-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주요내용 : 기획(산재, 직업병 문제를 총검점한다)-산재·직업병의 일반적 현황(형광석), 산업재해와 함께 무너져 내린 노동자들의 삶(이해란), 산업안전의 첫걸음은 노동자의 참여-결정권 보장(조필순), 전계급적 산재·직업병 추방투쟁으로(배기수)/국제노동소식-임금인상과 조직의 자유를 외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토론회-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요내용 : 선진국의 경험으로 본 우리의 바람직한 산재예방정책(윤조덕)/국제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발전방향(김은희)/현장에서 본 산재실태와 노동자의 참여(김유선) 등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주요내용 :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실현(이상열)/정상회담의 지향·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의 중심으로(강정구) 등

전해투 기금마련 공연-“다시 전선으로”

지난 23(토), 24(일) 오후 4시 30분에 연세대 대강당에서는 전해투 기금마련을 위한 공연 “다시 전선으로”가 2회 공연에 각각 2천여 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힘겨운 투쟁과, 이들과 연대투쟁을 결의했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지도부의 구속과 노동자들의 대량해직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과 노동자들의 원적복직과 수배해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그들을 지지해 줄 많은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본 공연은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민중정치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노대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 후원한 가운데 “좋은세상”의 기획으로 준비되었다. 이날 출연진들은 크게 나누어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공장’, ‘꽃다지’ 등 전문노래단체와 안치환, 윤선애, 류금신 등의 가수와 대우, 기아, MBC, KBS 등 주요 노조의 노래패들이다.

시중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본 공연은 특히 지하철노조 노래패인 ‘소리물결’이 등장했을 때 가장 큰 박수속에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공연제목 「다시 전선으로」가 말해주듯 현재같은 노무관리 체제와 정부와 자본의 대화의지 결여와 공권력 투입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노동자들은 전선에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공연을 통해 얻어진 성과는 일회적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끌어내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노동약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서면진술서 제출하러 간 철도노동자 구속

전기협 비대위 철도청장 폭력교사혐의로 고발기로

지난 철도총파업의 여파로 연일 철도청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수배중인 서선원(전기협 비대위원장)씨 등 전기협 비상대책위 지도부 6명의 서면진술서를 대신 제출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철도청에 간 남진우(32, 전기협 천안지부 비대위원장)씨가 26일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기협 비대위에 의하면 서면진술서 제출을 위해 25일 오후 1시 철도청으로 간 남진우, 임원봉씨 등 2명에게 철도공안원 20여명이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하고 남씨 등 2명이 보호실에 구금되었다가 결국 남씨가 구속되었다. 남씨 등 2명이 구금된 소식을 들은 무선스님(불교인권위 홍보부장)과 전기협 조합원 등 4명이 같은 날 오후 3시30분경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지방철도청 공안관실로 찾아가자 7명의 공안원들이 이들을 폭행하고 이 중 무선스님까지 감금했으나 오후 5시경 전관스님(불교인권위 운영위원장)의 항의를 받고 무선스님, 임원봉씨는 풀려

났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철도청 공안원들은 남씨가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위가 열리는 장소에 들어가고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공안원 5명이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남씨등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불교, 천주교, KNCC 등 3개종단은 철도, 지하철 노동자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오전 10시 천주교 여의도성당에서 국회내 노동환경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후 남진우씨 등의 구속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철도총파업과 관련, 15명이 파면되고 21명이 구속되었으며 중경징계 대상자는 7백여명으로 7월말까지 거의 매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배중인 전기협 비대위 지도부는 서선원, 김운철(부산지부 비대위원장), 이충갑(영주지부 비대위원장), 연재찬(대전지부 비대위원장), 정영서(비대위 정책국장), 송호준(비대위 대외협력국

장) 등 6명이다.

철도청장 폭력교사 혐의로 고발방침 전기협 비대위

철도파업 관련자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전국기관차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선원)는 최훈철도청장을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전기협 비대위는 서씨 등이 징계위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갖고 25일 오후 철도청을 방문했던 남진우씨(32, 전기협 천안지부 비대위원장) 등을 철도공안원이 폭행한 것은 철도청장이 책

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 산재노동자 급증 "올 9천여명"

25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재로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모두 9천1백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7백94명에 비해 4%가 늘어났다. 또 산재로 인한 사망도 1백79명으로 전년에 비해 18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재해율은 0.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3%에 비해 0.06%나 늘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영세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 현지방문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산재 예방 기법을 보급하고 안전조치 미비시설을 개선,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국민대회 ◆

- 일시 : 7월 27일 오후 5시
- 장소 : 탑골공원
-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747-4364, 5)
- 행사내용 : 민중생존권과 평화협정체결, 남북정상회담 촉구연설(김영대 전노대 수석부위원장, 유기홍 한청협의회장)/남북한 당국에 보내는 서한 채택/미국정부에 보내는 서한 채택/결의문 낭독

◆ 제 128차 정대협 수요시위 ◆

- 일시 : 7월 27일 12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주관 : 기록영화제작소 보임(597-5364)
- 특기사항 :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군 위안부 관련 영화) 촬영현황 보고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기록영화 제작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결정 "정책화된 성문화에 의해 유린된 여성의 역사"

현존하는 일본군 군위안부 희생자 할머니들의 기록영화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가 제작된다. 영화 『낮은 목소리』는 95년 3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과 부산지역등지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록영화제작소 '보임'(감독 변영주)은 '필름 100피트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보임'은 "이 영화는 오래전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쟁과 국가정책화된 성문화에 의해 유린되어 온 여성의 숨은 역사이다. 따라서 50년전에 있었던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전후배상이 해결되지 않은,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라며 제작의 필요성을 전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생존 피해자들을 만나 취재와 자료조사, 준비촬영을 진행하며 제작의 지에 대한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낮은 목소리』는 93년 제작된 국제매체 기록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의 연장형태로 제작되고 있는데, 첫작품 역시 '식민지 속의 식민지'인 제3세계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작을 맡은 보임은 "기록영화를 통해 아시아 여성들의 자국과 타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표현하고, 전쟁과 성차별, 폭력에 맞서 연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임'은 또 현재 1백피트 회원 모집을 통해 필름 1백피트로 담아낼 수 있는 비용을 모으는 일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1백피트 필름시간은 2분 30초 정도이며, 비용은 10만원 정도이다. 1백피트회원 1천명이 모이면 영화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며, 1백피트 회원은 10만원의 제작지원금을 후원하는 이에 한한다. 회원들은 95년 영화가 상영되기 까지 두달에 1번씩 제작진행보고서를 받아 보게 되며 작품의 마지막 자막에 제작협력자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한편 '보임'은 무라야마 일본 총리 방한을 맞아 일본정부측에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상요구하며 "아시아교류기금안은 중군위안부 배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측에는 중군위안부 문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 : 597-5364

'분향소' 합수부 국가보안법 위반 피소

'전남대 김일성주석 분향소 발견' 조작설을 주장해 온 전남대 총학생회장 진재영(23, 자연공4)씨를 비롯한 전남대생 3백여명은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60여명을 전남대 전체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피소된 사람은 권태호 광주지검 공안부장(합동수사본부장), 안병욱 전남경찰청장, 김한수 광주북부경찰서장,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요원 전원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전남대 구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김일성 주석 분향소를 발견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조작·날조·왜곡하여 전남대 전체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유가 무엇이든 김일성 영정과 분향소를 만

들어낸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주석 분향소' 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분향소의 △설치주체 △설치시기 △영정과 유인물 출처등 핵심적인 사안을 제대로 밝히는데 더욱 많은 압력을 받게되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사건의 수사주체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소당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촬영 안했다' 증언경관 진술변복 '전남대 분향소' 수사관

'전남대 분향소 설치' 여부에 대한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분향소' 현장 비디오 및 사진채증 등에 대해 전남경찰청의 공식발표와는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김 아무개 경장(36)이 26일 안병욱 전남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나타나 "기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독교방송은 26일 뉴스를 통해 자사기자가 김 경장과 25일 만난 사실이 있으며 김경장이 경찰 발표와 다른 말을 했다고 재확인했다.

'협상 불응할 경우 8월 15일 이전 재파업'

서울지하철 노조 '서울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김연환)는 26일 오후 2시 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측이 대량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15일 이전에 재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사가 협상에 응할 경우 노

조측도 양보안을 제시하겠지만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재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재파업은 예고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고 "명동성당 농성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주민편견 극복되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가 26일 마련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반대와 장애인 인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과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영교수(피어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 시설보호, 재가보호, 지역사회보호가 있다"며 "이중 시설의 수요가 객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편견으로 건립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교수는 90년도 이후에 8개지역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있었다고 밝히고 분쟁의 주원인으로 시설보호수준의 열악함등으로 인한 시설의 폐쇄성 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전달체계미비등의 복지행정의 취약성 등을 들었다. 박교수는 또 분쟁해결방안으로 시설보유 기자재의 지역사회 공유 시설의 중요성등을 포함한 시설의 홍우 오는 8월15일 이전에 재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사가 협상에 응할 경우 노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유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문국진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고문으로 인한 질병 인정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f Torture)에서는 지난 5월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모임)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의한 결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7월 11일자 공문을 서준식씨(인천노동사랑방 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 지원금에 대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문국진씨와 그의 가족, 재판진행에 대한 상황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 기금이 고문피해자인 문국진씨의 사건에 매우 깊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키로 한 것은 국내에서는 고문후유증에 대해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사정에 비추어 볼때 문국진씨의 정신분열증이 고문에 의한 후유증을 인정한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한

재정까지 지원할 것을 결의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문국진 모임은 서면으로 유엔인권센터에 문씨에 관한 재정과 캠페인, 사회복지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올해 1월 말에 유엔인권센터에서 파격적으로(재정 지원 등 정식 프로젝트 제출 시한은 매년 12월31일) 프로젝트 제출 기간이 지났음에도 특별히 빠른 시일 안에 프로젝트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문국진 모임은 프로젝트와 문국진씨 상황에 대한 자료, 영문 스티커 등을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 보낸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엠네스티에서 발표한 "94 인권연례보고서" 남한 편에서 "(1993년) 11월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씨는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해 현재 서울민사지법 13부에서 3회까지 공판이 진행되었고 4회공판은 8월 25일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부터 시행

노동부 컴퓨터 단말기 작업증세등 포함

노동부는 27일 컴퓨터 단말기 작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경견완중후군등 6가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새로 인정하고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7가지 질병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개정,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타자수와 같이 팔과 손가락을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가 스목 부위의 신경 및 운동장애 스어깨 건초염 스파디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장애 등을 일으킬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또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대한 재해인정기준을 확대해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

혈이 일어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망간, 염화비닐, 타르 등의 중금속 및 화학물질 중독에 따른 질환과 잠수부 등에 나타나는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추가되었다.

또 노동부는 소음성나청인정기준도 종전 1백데시벨 이상 작업장 근무자에서 90데시벨 이상 작업장 근무자로 강화했고, 벤젠, 수은, 납, 트리클로에틸렌 등 4종의 유해물질 중독의 경우도 적용기준을 강화했다.

서울대병원 정 의 직권 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추가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병원 정 의 직권 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추가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병원 정 의 직권 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추가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 행사 안내 ◆

□철도·지하철 노동자문제에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노동환경위원회과의 간담회 및 전기협 노동자 구속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 7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천주교 여의도 성당(전화 782-1073)
·주최 : 천주교, 불교, 한교협의 철도·지하철문제 대책위

□민기협 목요일집회(전화 763-2606)
·일시 : 7월 28일(목) 오후 5시 / 장소 : 탑골공원 앞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요구

UR 비준강행 철회, 재협상 촉구 '케케묵은 이념시비 중단'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윤정석, 전농)은 27일 전북도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쪽에 근본적인 재해대책 마련과 우루과이자유무역협상 등을 촉구했다.

전농은 이날 "대가물을 계기로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을 뜯어고쳐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행농업 재해대책법을 전면수정해 농업보호와 사회보장차원의 농업재해보

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농은 또 "기रो에선 6백만 농민의 생존권을 보전 차원에서 우루과이자유무역협상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와 민자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농민과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전농은 케케묵은 이념시비와 공안정국 조성기도 중단과 정확한 가뭄피해조사 등을 촉구했다.

불벌더위에도 계속되는 전해투 텐트농성

8.18-20 전해투 평가회

불벌더위 속에도 전해투의 텐트농성이 1백여일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전국 20여곳에서 해고자복지를 요구하며 텐트농성에 들어간 뒤 27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은 의료보협연합회와 풍산금속 2곳이다. 풍산금속은 2월 15일, 의료보협은 2월말경 농성에 들어갔으며 4월12일 텐트농성에 돌입한 태평양화축은 7월27일 농성을 풀고 협상에 들어갔다. 그동안 텐트농성을 벌여온 사업장들은 한진그룹과 럭키금성이 강제해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측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영창약기와 기아자동차 등은 해고자 전원이 복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전해투는 8월 18일부터 3일간 평가회를 근교에서 가질 예정이다. 상반기 투쟁평가, 하반기 계획 논의와 함께 조직개편이 중점 논의된다. 해고노동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

하며 학생이나 전해투 지원단체도 참석할 수 있다.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128차 정대협 수요시위 주관

제128차 정대협 수요시위가 27일 12시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총지휘 및 감독 변영주, '보임') 주관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보임'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중군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 상용화, 도구화, 차별의 문제와 이어지는 여성수난사의 일부이며 이는 우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부장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또다른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수요시위에서 '보임'은 현존하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할머니들의 기록영

화 「낮은 목소리-아시아 여성으로 산다는 것 2」의 감독 변영주씨가 영화촬영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AI 사형제도 증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최근 엠네스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4년 5월 현재 사형제대중인 한국의 사형수들은 약50명으로 나타났다. 엠네스티의 보고에는 사형수들의 이름과 죄명, 형을 확정받은 날짜가 명기되어 있으며 형확정일은 87년 4월부터 93년 7월까지로 기록되었다. 이들 50명 사형수의 죄명으로는 살인 및 기타 범위가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도 및 어린이유괴, 특수절도 및 강간 등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형존치국으로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인데, 형법규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백여개에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는데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아직까지는 1건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엠네스티는 한국이 오랜 사형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사회법 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87년 한 가정파괴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점에서 엠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재고를 문제삼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고,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는 비록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했다는 도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

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또다른 자살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형수 죄명(괄호안은 명) : 살인 및 기타(14), 살인(9), 살인 및 절도(9), 강도 및 어린이유괴(4), 살인 및 사제유기(3), 존속살해(3), 살인 및 강간(2), 특수절도 및 강간(2), 절도 및 강간(1), 강도 및 미성년성폭행(1), 방화(1), 방화 및 우발적 살인(1)

'고난' 8월 3주간 통일학교 개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은 오는 8월18일부터 9월1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 고난실무자들과 통일사업부원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연다. 18일은 이규명장르로부터 통일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강사로는 신장균(정동계일교회 강로), 박순경(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상임의장)씨 등이다. 첫강좌는 18일 오후7시 홍제동에 위치한 한누리교회에서 열리며, 관심있는 이들은 모두 참여가능하다. 회비는 무료.

부경총련 조동위원장 국보안법위반혐의 조사

부산경찰청은 27일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김동균(25, 부산외국어대 총학생회장)씨를 붙잡아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 1면에서 계속)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중재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대 병원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경찰, 대학교재마저 압수하다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등 요구

경찰이 대학에서 교양과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마저 압수수색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보안본실 소속경찰 10여명은 27일 경상대학교 앞 '우리서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5년전부터 경상대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저자 장상완 등, 도서출판 智異 출판) 80여권을 비롯해 이념서적등을 압수해갔다.

이번 사건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UR비준보다 가뭄 극복대책에 신경쓰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양규현 등, 전노대)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살인적인 가뭄으로 인해 농촌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이 판에 UR비준 운운하지 말고 농민들의 생존권 대책 및 구조적인 가뭄극복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노대는 “몇십년만의 살인적 가뭄으로 농촌사정이 지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UR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죽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노대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전민적 노력의 조직하고 가뭄에 따른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과 이번 가뭄을 계기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농민들 각계각층의 예상되는 반발을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노대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UR비준을 묵과하지 않고 농민, 학생, 야당 등 각계각층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장 철도공안원 폭력 책임지고 사퇴촉구

철도·지하철 3중단 대책회의

철도·지하철 투쟁에 대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등 3개 중단 대책회의는 지난 26일 철도노동자 남진우씨 구속과 관련(<인권하루소식 7월 27일자 참조>), 28일 여의도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희훈 철도청장의 사퇴 불발법과 폭력을 비호하고 사주하는 내무부 장관 사퇴 △철도·지하철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및 징계철폐를 요구했다.

3중단 대책회의는 “교회 성소와 불교의 개혁 몸부림에 경찰을 투입하더니 수도 승려에게도 무자비하게 폭

행을 가하였다”며 “노동자를 기만하고 종교인을 능멸하는 모든 폭력적 행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3중단 철도·지하철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민주당 환경노동위원인 신계륜, 김말룡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에 국회환경노동위를 열어 철도·지하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공청회등을 통해 철도·지하철 문제의 진실을 밝힐 것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수배·징계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원복지 등 잠정합의

단체협상 결렬로 일부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 김남호)는 28일 오후 병원측과 임금인상 및 해고노조원 복지등 쟁점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의 함에 따라 전면 파업계획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병원측은 이날 임금인상등 5개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하고 잠정협상안을 마련, 가조인키로 했다.

<이번주 국제인권 소식은 쉽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94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결성대회 ◆

·일시 : 7월 30일(토)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주요순서 : 규약채택, 임원선출 등 안전토의/결성선언문 채택/내외 동포들에게 드리는 글 채택/결의문 채택 등

“학생들은 신공안 정국의 포로”

민가협 목요집회

매주 목요일 탑골공원앞에서 열리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28일 오후 5시 탑골공원 앞에서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민가협 회원과 ‘남총련 학부모 대책위’,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목요집회에서는 홍성교도소에 복역중인 김중

식(전대협 6기의장)씨의 어머니가 김씨에게 보내는 편지와 10년째 수감중인 김성만씨가 황대권(안동교도소 수감)씨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낭독되었다. 또 남총련 학생의 한 학부모는 “자식들이 열차점거, 분향소 사건 등으로 신공안정국의 포로가 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UR비준 계획 철회 촉구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춘성)는 정부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이 나라들도 국회 비준을 내년도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 상담교육 실시

여민회, 8.23-10.18

「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이경숙, 여민회)은 8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여민회 부설 ‘일·가족·성 상담소’ 설립을 위한 상담원 양상을 위한 전문상담 과정교육을 경동교회 교육관에서 실시한다. 화, 목요일로 1주일에 두차례씩 16

강좌가 진행된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1차 상담원 과정을 개설한 바 있는 여민회는 이번 전문상담교육과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부부관계, 성발달과정, 부모·자녀관계, 가족법 등을 개설하고 상담실제 훈련도 벌인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을 ‘일·가족·성 상담소’ 상담요원으로 적극 추천할 예정이다. 여민회에서 준비중인 ‘일·가족·성 상담소’는 여성노동상담, 가족상담, 성상담을 다룰 예정이다. ‘일·가족·성 상담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평생 평등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도의 불평등을 고쳐나가고 여성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여성노동상담을, 결혼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부부관계와 자녀문제가 일상화되고 있어 전문적인 가족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관에서 실시한다. 화, 목요일로 1주일에 두차례씩 16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상담도 할 방침이다.

중노위, 자보간부 29명 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양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8일 한국자동차보험이 전영춘씨(49)등 간부출신 29명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이들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회사측에 보냈다. 중노위는 이날 회사측이 서울지방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출한 재심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함으로써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확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회사측의 이틀간 간부사원에 대한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지난 2월 판정한바 있다.

한편 자보 회사측은 중노위의 이같은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9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병행행사

행사	일시	장소	형식	강사 및 목적
양심수의 밤	7월 29일 오후 7시-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 호텔 22층 Ball Room	1부-기조발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엠네스티 -허브 버거 엠네스티 사무부총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인권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
				전환기의 한국인권운동과 국제연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2부-파티 및 개별인사소개
				3부-축하공연
기자회견	7월 30일 오후 2시-4시	서울 YMCA 호텔 6층홀		
콜롬비아 캠페인	7월 31일 오후 2시-4시	서울 이태원동 콜롬비아 대사관 앞		콜롬비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살해에 대한 항의/콜롬비아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인권보장 촉구/콜롬비아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유도
엠네스티의 밤	7월 31일 오후 7시-11시	Cafe '해와 고기'(종로2가 소재, 전화 : 745-8769)		한국지부 전회원들과 국제대표단, 그외 인사들과 교류
엠네스티 기금조성 세미나	8월 1일 오전 9시 30분-12시	서울 YMCA 호텔 6층 세미나실		국제적 기금조성 방법에 대한 이해/한국지부 기금조성 방안 강구/그룹의 기금조성에 대한 이해증진

문의전화 : 053-426-2533(엠네스티 한국지부) / 732-8291~8(YMCA)

<이달의 주제 - 노동약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한국인권운동, 전문성 강화로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서준식 대표 엠네스티 '양심수의 밤'에서 사회권 영역등 시야확대 절실

통일에 기여하는 인권운동

'94 아-태 엠네스티 지역 대회' 특별행사로 열린 '양심수의 밤' 행사에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반독재투쟁의 자랑스런 전통을 안고있는 한국의 인권운동은 전문성 축적으로 사회운동과 튼튼한 연대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민족의 절실한 관심사인 조국통일사업에 인권운동의 입장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의식 높일 인권교육

2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아태지역 엠네스티 회원, 국내 인권단체 회원등 1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서대표는 한국인권운동의 과제로 △노동자, 빈민, 장애인 문제 등 사회권영역으로의 관심 확대 △자료의 축적에 기초한 활동 △대중들의 인권의식을 함양시킬 인권교육 △유능한 이론가와 활동가의 양성 △국제연대 활동 등을 들

었다.

진지한 국제연대 모색

서대표는 "전환기의 한국 인권운동과 국제연대"라는 주제발표에서 "지금 세계는 인권탄압의 국제분업체제라고 할 만한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에 맞서 전세계의 수많은 민중단체와 NGO(비정부단체)가 연대하는 인권옹호 국제분업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적 인권운동으로 성장하기 위한 열쇠가 우선은 진지한 국제연대운동에 있다"고 밝혔다.

서대표는 또 인권옹호 국제분업체제 확립을 위해 △자국외교를 모니터하면서 민주화를 실현 △국가간 공동의 문제의 국제문제화 △UN을 중심으로 확립되어온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의 최대한 활용 및 이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 등을 들고, "지금 NGO들은 민중단체들과 깊은 유대를 가지며 국제연대사업에 나서야 하고 특히 인권NGO는 특정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인권이 가진 보편성을 갖고 타분야 NGO

들과 유기적 결합을 선도할 위치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수 가석방 거부 이해 안돼

서대표에 앞서 '아-태지역에서의 엠네스티'라는 주제 발표를 한 엠네스티 사무부총장 허배 버거씨는 "엠네스티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전향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민주적이라 자처하는 정부가 미전향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 후 40년간이나 구금되어 있는 김진명씨나 안학설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언급이래 고문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태지역 인권침해 여진

허배 버거씨는 또 아태지역이 "의형적인 발전으로 인권상황이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으나 많은 아태지역 정부들이 비밀경찰을 동원,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아시아 19개국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12개 아시아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가별 단체연대 강화

그는 또 "인권운동의 공통의 전망으로 민족국가들 초

월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나누고 배워나가는 다문화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별 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발전시켜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세계적 운동연합체를 창출하는 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 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 전대협 동우회

'전대협동우회'(회장 이인영)는 29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협 동우회는 각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결성한 순수 친목단체로 '구국전위'의 안재구씨가 전대협동우회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28일 검찰 발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전대협 동우회는 "안재구씨는 전대협 친선모임에서 통일관련 강사로 단 한번 나왔을 뿐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구국전위 조직원 김진국씨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구국전위를 전대협과 관련시키는것은 공안세력들이 북한해문제와 김일성사망등으로 조성된 남북한 긴장관계를 이용해 개혁을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권을 높히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8월 2일경 김도인 검찰총장,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와 함귀용검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94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결성대회 ◆

·일시 : 7월 30일(토)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주요순서 : 규약채택, 임원선출 등 안전토의/결성선언문 채택/내외 동포들에게 드리는 글 채택/결의문 채택 등

단체탐방 27 /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홍초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걸어서 하늘까지'로부터 '서울의 달'에 이르는 달동네 이야기에 순가락질을 멈추고 숨죽이고 들여다보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비취진 달동네의 모습이란 대문없는 골목이 있고 잘생긴 건달이 있고 신데렐라 꿈을 꾸는 아가씨가 있고 인정의 치맛폭이 넓기만 한 손두툼한 사람들이 있고 가끔 왕자님이 다녀가기도 하는 곳이다. 달과 가깝기에 희망과 인정을 찾아 오르려 하기에 달동네란 이름이 붙은 것일까? 아픈대책없는 홍초보기는 관두고 제대로 이곳을 들여다보자.

서울시 관악구 봉천 9동,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높은 경사때문에 차도 사람도 허리가 휘어진다. 엔진이 타는 듯한 냄새를 맡으며 종점에 이르르면 성냥갑 같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찬 동네가 한눈에 들어온다. 밤에는 특히 산동네 가옥들에서 나오는 불빛이 한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는 듯한 광경을 연출한다. 대문과 변소문이 나란히 줄서 있는 거미줄같은 골목길을 돌아들면 고함소리로 꽂찬 '나눔의 집'을 찾을 수 있다.

젊은 대학생 선생님의 소리에 아랑곳없이 우당탕탕 거리는 아이들, 한 번 더 노래를 하는 아이들, 그래도 댕청소를 하겠다고 빗자루를 들고 설치는 아이들 소리로 공부방으로 변한 강당의 십자가조차 흔들거리는 듯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나가고 나면 책가방을 든 어머니들이 달려온다. 장사하다 늦었다고 직장에서 일이 밀렸다고 텔레비전 보다 깜빡 했다고 들어서자 마자 늦은 이유를 한보따리 나누고 시작하는 일은 받아쓰기다. '어머니교실'에선 한글기초와 글짓기, 간단한 산수를 가르친다. 기억, 니은을 어렵게 떼고 글짓기를 할 수 있게 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글은 "부모님 날 낳아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니 부모속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날 가르치지 않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그것도 딸로 태어난 죄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이 한스럽기 때문이다. 조는 일도 없고 숙제를 거르는 일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학생들이고, 배움의 기쁨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을 보면 "내가 언제 이만큼 무엇을 배운다는 데에 환희를 느껴본 일이 있었나"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나눔의 집의 가장 큰 재산은 함께 하는 이웃들이다. '가정결연사업'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대장 예수를 담으려는 산동네 사람들의 친구

묵여진 후원자들은 무의탁노인,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생활비,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삶의 빛이 되고 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후원을 자청하는 택시기사도 있고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후 사람들을 불러는데 신이나서 한 기업의 절반이상의 사원이 후원자인 경우도 있다.

나눔의 집의 작은 마당에는 신문지, 플라스틱, 병등을 따로 따로 모으는 바구니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 신문지를 가져다 파는 할머니가 계시다고 하여 신문지 한장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나눔의 집 사람들이고 알뜰살뜰 재활용품을 나누고 사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나눔의 집은 산동네 사람들이 몰라서 당하는 일, 부당한 일, 특히 개개발사업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해결사노릇을 담당한다. 또한 가장 특기할 일은 건설노동자공동체를 만든 일이다. '나래건설'(나누며 섬기는 건설노동자 공동체)은 나눔의 집 지부 한권에 작은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산동네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자립, 자활, 인간화를 위한 협동조합이며 최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올바른 건축문화를 세워나가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최대 자본은 정직과 성실,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다.

대한성공회 산하에는 이와 같은 나눔의 집이 봉천동만이 아니라 상계동, 삼양동, 인천 송림동에도 있다. 가장 오래된 곳은 상계동(88년 9월 시작)이고 봉천동 나눔의 집은 91년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또한하의 협동조합공동체로서 삼양동에는 '실과 바늘'이라는 봉계공장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장 예수를 담으려는 몸짓들이 모여서 '나눔의 집'이라는 방한칸을 마련한 것이다. 외롭고 힘든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방한칸, 그만큼 나눔의 집은 작고도 푸근한 곳이다. 그러나 속상한 일들이 어디 한두가지랴! 이곳에 있는 '한숨'을 들어보자.

빈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란 제다리 굵기이고, 지역에 자리잡은 복지관이란 것도 주민들의 생활

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다. 말벗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 그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거두어 주나 하는 걱정으로 속이 답답하다는 신부님, 사랑받을 나이에 삶의 고통을 먼저 안 소년, 소녀 가정들, 부모가 있어도 갈대가 없어 무작정 거리를 헤매며 본드나 범벅의 늪으로 빠져드는 아이들, 재개발로 위협받을 이곳 사람들의 일터와 삶의 방식...

이곳에서 피어오르는 한숨의 줄기가 우리의 가슴에 비를 내릴 수 있다면 이 더위, 이 가뭄이 좀더 빨리 가실 수 있을 것이다.

공안문제연구소, 4년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함의

지난 27일 이적표현물 배포협회의등으로 영장없이 강제연행당한 경남 진주시 소재 '우리서점' 주인 정대인(32)씨가 지난 28일 오후 7시경 풀려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대학교재에서 교재로 사용중인 『한국사회의 이해』의 제작, 배포과정, 필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한국사회의 이해』가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상대학교 민교협회의 이창호 교수는 "신공안정국 분위기를 틈타 경찰이 필자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사회의 이해』는 경상대학교 등에서 지난 90년부터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등 현직교수 9명이 집필했다.

인권하루소식

94년 8월

(제218호 - 제238호)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앰네스티,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 표명

“특정부분만 언급, 앰네스티의 인권보편성 왜곡”

‘아태지역 앰네스티 회의’가 열린 지난 30일 앰네스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북한정치범 명단이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1일 전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46)씨의 송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의 오완호 사무국장은 최근의 북한정치범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앰네스티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것의 특정부분만 언급했다”며 “앰네스티가 특정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라는 생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남·북한에 대해 공정하고 동등하게 인권문제를 제기했으나 앰네스티가 마치 북한의 문제만 언급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앰네스티의 입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는 남한관련 자료로 ‘신정부하에서 계속

되는 인권침해’, ‘김일성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대량구속에 대한 우려’ 등 2중, 북한관련 자료는 ‘북한의 정치수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북한에 관한 앰네스티의 관심’ 등 2중 그리고 앰네스티 연례보고서중 남·북한 요약본 등 모두 5종류”라고 밝혔다.

또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부지부장 고은태씨는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앰네스티에서 이미 지난 6월 발표하였던 자료”라며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처음 발표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앰네스티가 남·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하자마자 북한의 정치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93년 앰네스티 한국조사단의 방문 기자회견과 관련, '93년 11월 17일 자 '비전문가의 인권판정'이라는 기사칼럼을 동원하여 당시 피엘 로버트씨가 내린 인권평을 “한국의 새정부가 인권침해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인권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요약한 뒤 “비전문가 몇명이 불과 보름동안 어느 한쪽의 안내로 한국을 간단히 둘러본 뒤 우리의 인권실태를 자신있게 평가, 판결해도 되느냐”며 앰네스티 조사단의 회견내용을 깎아내린 전력이 있어 이번에 앰네스티 발표를 대대적으로 인용한 것은 언론의 남·북한 인권에 대한 전형적인 이중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대협, 재일동포 폭행사건 대책수립 촉구

1일 성명 민족적 박해 규정

「전국여대생 대표자협의회」(여대협)는 최근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폭행사건과 관련, 1일 오전 중앙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적 박해로 규정하고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대협은 이날 ‘재일교포 학생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민족적 박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4월 14일 일본 동경시내 전철안에서 한국인 여고생이 일

본인으로부터 ‘조선인 물러가라’는 폭언과 함께 성적 모욕을 당하는 등 울들어 1백50여명의 여학생과 재일교포가 일본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관련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한국정부도 민족적 차원에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 재학·졸업생 10명 국보법협회의 구속 경찰, 피의사실공포에 자의적

지난 28, 29, 31일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고대졸업생 및 재학생 10명을 연행, 이중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조사중이고 1명은 기무사로 이첩했다.

지난 28일 경찰은 이상철(고대 서문어과 87학번)씨 등 5명을 연행한데 이어 29일 새벽에는 박현용(29)씨 등 4명, 31일에는 차현민(고대 신방, 86학번)씨 등 모두 10여명을 연행했다.

한편 경찰은 혐의사실의 확인을 거부, 구국전위 사건 때와는 달리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피의사실공포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자명단 : 이상철, 안호성(88학번), 윤형금(91, 언어), 김기현(89, 경제), 강진구(87, 사학, 기무사), 이정화(90, 언어), 김영광(91, 통계), 차현민(86, 신방), 박현용, 안병일(27)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녹색교통운동 사무실 이전 ◆

주소 : 종로구 도령동 115번지 삼육빌딩 500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옆 건물
 전화 : 723-6286, 7 // 팩스 : 720-7879

「인권하루소식」 7월분 총목차(196호-217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7/1	196	1	노동계 "3차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 금속, 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구국전위 관련 4명 추가구속/한준수 전연기군수 2심에서도 유죄판결
		2/3	「인권하루소식」 6월분 총목차(175호-195호)
7/2	197	1	3%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목회자 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국노총 노동운동연합규탄 5년만에 시국대체회의/민정련 마창지부 회원 박채홍씨등 2명 연행/아태지역 엠네스티 병행행사 확정
		2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삼청교육진흥사업추진위원회)
7/5	198	1	제3차 청원권 및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전노대, 제3차 개입금지, 직권중재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 발부 항의서한
		2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검찰, 고문협회의 안기부원 무혐의 처분, "협외사실 부인, 고문입증 증거없다"/탈냉전이후 환경, 인구가동, 다자간 군사안보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7/6	199	1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 수렴 미흡", 8일 민주당, 민변 등 공청회, 대법관 임명제청자 개별평가/일본정부 후속조치에 관여안해, 정부 위안부 대책/APEC 서울회의의, '사회발전 정상회담' 대비 민간단체 모임, 8일 기사연 기장선교 교육원
		2	미군 영동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5일 미대사관에 진정서/광주전남연합 소속 오병운씨등 3명 구속, 5일 범민련 관련/지하철노조 총회, "조합원 중징계 반대"/최저임금 26만4천4백20원
7/7	200	1	남한 "250여명 양심수석방, 장기수 제조사, 사형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 요구, 국제엠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16개단체 두밀분교 후원회 모임, 서울교대생 방학기간 보충수업 실시키로
		2/3	<인권하루소식> 지령 200호 특집-<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7/8	201	1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서울고법, 감상석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2	국제인권소식-93년 한해동안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1)/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7월 18-20일 서울 힐튼호텔
7/9	202	1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 국제연대활동에 주요 사회운동단체 높은 관심 표명/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 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구속 철도노동자 석방요구, 8일째 금식기도회
		2	93년에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2)/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 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7/12	203	1	"검찰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검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말이나 폭행 경험 67%/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9일 원진대책위 집회
		2/3	93년에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7/13	204	1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씨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서울대 여교교 성희롱 사거 항소심 첫 재판/인권간행물
		2	아시아지역 인권기구, 국민인권기구등 논의,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노조원 대량징계 철폐하라", 12일 지하철노조 임시대의원대회/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일정
7/14	205	1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두밀분교후원회 재판방청, 토론모임등 추진/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담총련 91명 무더기 기소
		2/3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1-지역인권기구란?
7/15	206	1	7천여 국민학교중 3천8백여학교 통폐합 대상, 전국교대생 온나라 견기대회, 통폐합 재조정 여론화 중점, '초등교육 전문성 무시이며 교육포기선언과 같은 것'/고문후유증 문국진씨 3차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켈거리 여성단체 방문, 여성의 전화/수배해제등 강업조치 철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2/3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국민인권기구란?

「인권하루소식」 7월분 총목차(196호-217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7/16	207	1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등 적용/92년 전대협 조총위장에 징역 2년 선고/27일부터 어린이 여름학교, 전교조 초등지부
		2	단체탐방 25-한국사회정책학회
7/19	208	1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18일 개막, 인권침해 예방위한 정보확산, 국제인권규범의 실현등 공감/5월광장 어머니회, 김선명씨 석방촉구운동 벌여/철도·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21일 시민·여성단체 토론회/미군범죄근절본부, 김분임씨 살해법 검거촉구
		2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3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7/20	209	1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우려", 한총련, 박홍총장 며에혜순씨의 고소 방침/노조원 대량구속·징계철폐 안 할 경우 재파업, 서울지하철노조 19일 대의원대회
		2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7/21	210	1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 국제여론 환기위한 '민중재판' 추진/아태지역 인권포럼 정례회 합의, 20일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폐막, 정부, 인권포럼 논의는 주도, 국민인권기구에는 침묵
		2	국제중재재판소란?
7/22	211	1	사제단, "박홍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에 의한 것", 한국협 인권위, 전대협 동우회등 "사과해명요구"/평불협부회장 법타스님 구속, 평불협 회보내용 문제삼아/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
		2/3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마지막 회)-평가와 반성,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현대중공업 긴급조정권 발동유지임 철폐촉구, 전노대 규탄집회등 연대활동 벌일 것/정대협 청와대 면담요구 강제해산 항의서한/94 반핵아시아 포럼 한국위원회 결성
7/23	212	1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지택연, 일본 탁아시설 방문/두밀분교 폐교철폐 지지방문-7월 23~24일
		2	단체탐방 26,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7/26	213	1	사회발전 세계정상회담 대비, '사회발전 한국포럼' 결성, 국내 모든 단체에 개방, 매달 1회 포럼 개최키로/7.28-8.1 YMCA, AI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열려, '양심수의 밤'등 특별행사도
		2	"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일총리에 전후문제 해결촉구/전해투 기금마련 공언-"다시 전선으로"/인권간행물
7/27	214	1	서면진술서 제출하러 간 철도노동자 구속, 전기협 비대위, 철도청장 폭력교사혐의로 고발키로/부산·경남지역 산재노동자 급증, "올 9천여명"
		2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기록영화 제작,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결정, "정책화된 성문화에 의해 유린된 여성의 역사"/분향소 합수부 국가보안법 위반 피소/사진촬영 안했다' 증언경관 진술변복, '전남대 분향소' 수사관/협상 불용할 경우 15일 이전 재파업, 서울지하철 노조/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주민편견 극복되어야
7/28	215	1	문국진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위한 재정지원 결정,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고문으로 인한 질병 인정/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 부터 시행, 노동부, 컴퓨터 단말기 작업중세등 포함/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2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UR 비준강행 철폐, 재협상 촉구, '캐케묵은 이념시비 중단'도/불벌터위에도 계속되는 전해투 텐트농성, 8.18-20 전해투 평가회/기록영화제작소 보임, 128차 정대협 수요시위 주관/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의 대체요구/'고난', 8월 3주간 동일학교 개교/부총총련 조동위원장 국보법위반혐의 조사
7/29	216	1	경찰, 대학교재마저 압수하다, 경시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등 요구/'UR비준보다 가뭇극복대책에 신경쓰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철도청장 철도공안권 폭력 책임지고 사퇴촉구, 철도·지하철 3중단 대책회의/서울대병원 노조원복지등 잠정합의/
		2	"학생들은 신공안정국의 포로", 민가협 목요집회/UR비준 철폐 촉구,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문상담교육실시, 여민회, 8.23-10.18/중노위, 자보건부 29명 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94년 엠네스티 아태지역대회 병행행사 일정
7/30	217	1	한국인권운동, 전문성 강화로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서준식대표, 엠네스티 '양심수의 밤'에서, 사회적 영역등 시야확대 절실/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
		2	단체탐방 27,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공안문제연구소, 4년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지적혐의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영등포교도소 폭염 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지난 달 영등포교도소에서 이아무개(19)씨가 징벌방에 독거수용중 자살한데 이어 견정삼(49)씨가 독거방에서 사망함으로써 재소자 징벌 및 의료제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7월 20일 혼거방에서 재소자와 싸움을 벌인 후 일반독거실에 수용중 자살한 이씨의 경우는 교도소내의 자의적인 징벌관행과 독거수용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구주임은 규정을 어겼을 때 먼저 조사감독부에 기록하고 사안이 경미하면 훈방하고 중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나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씨를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해 독단적으로 독방에 수용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다. 수갑, 포승등의 계구를 사용할 때는 계구사용허가부에 기재하여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등포교도소는 조사감독부 및 계구사용허가부를 이씨 사후에 '정상'으로 복구해 놓았다고 한다. 이씨가 징벌로 수용된 일 반독거실은 관 2개 정도의

크기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은 복도에 접해 있는 식구통 하나, 화장실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뚫린 아크릴판 하나이다. 한 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5분 정도 있으면 땀이 비오듯 흐른다. 결박을 안하고 들어가도 견디기 힘들게 율해와 같은 폭염에 결박한 상태에서는 상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징벌방에는 일반독거보다 더 심한 엄정독거(일명 덕방)가 있는데 복도와 접한 식구통을 제외하고는 공기가 통할 구멍이 전혀 없어 사형수에게 채우는 형수갑을 채우는 것이 보통이어서 "바람이 안 들어와 식구통에 코를 대고 헐떡헐떡 거린다"며 질식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28일 사망한 견정삼씨는 영등포교도소에서 장애인 수용사동인 8사에 독거수용된 상태였다. 견씨는 28일 낮 12시경 잠수를 떠와 작업을 하려는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사 상태였다.

견씨는 평소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8

사는 높이 20센티미터, 가로 3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 하나 만이 복도쪽에 뚫려 있어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 실내온도가 높다. 비록 몇가지 질련을 안고 있었으나 높은 실내온도가 견씨의 사망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수까지 다다른 방향없는 신공안 바람

박홍 서강대 총장이 일본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는 발언에 발을 맞추듯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 검사장)는 2일 경상대 최태룡 교수등 9명의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국보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최환 공안부장은 "이 책이 공안연구소에서 계급대립을 강조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밝혔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같은 이름의 교양과목의 교재로, 경상대의 최태룡,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이 공동으로 지난 90년에 발간한 이후 올 초에 개정판을 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신공안 분위기를 틈타 교수들이 강의 내용을 모은 책을 문 제삼자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며, 한

성이 농후하다. 영등포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는 1천6백여명에 이르나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는 1회에 2시간씩 1주에 2번 진료할 뿐이고 그 이외의 2명의 간호사가, 퇴근 이후에는 의학지식이 없는 교도관이 담당하고 있다. 즉 소내에서 분초를 다투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달 27일 경상대 앞 '우리서점' 주인 정대인씨를 연행하여 이 책의 제작배우 과정, 필자들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시 국제사무국, "언론, 남한 인권 언급 무시" 유감 표명

국제사무국은 2일 '아태지역 앰네스티 대회' 기자회견과 관련 한국 언론이 남한 인권상황에 대한 언급을 무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2면 참조).

인권협 집행위 열려

한국인권협의회 집행위원회가 2일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집행위에서는 10월 초에 제네바에 있는 IS(국제인권봉사회)를 초청하여 인권교육 워크샵을 열기로 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앰네스티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논평

북/ 남한 : 앰네스티의 관심

국제앰네스티는 '아태지역 앰네스티 대회'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아태지역의 정부들에게 인권의 의무조항을 지키도록 요구했으며 경제성장에 맞게 인권 보호의 제도와 인권교육의 발전을 이루도록 요청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지역 모든 정부들이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성명과 약속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중에, 국제앰네스티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씨는 남북한 인권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에 있는 정치범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했는데 이는 런던에 있는 국제사무국이 지난 6월에 발행한 것이다. 버거씨는 또한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불행히도 많은 한국의 언론은 이를 거의 무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별히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것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또한 최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한 조문논란 때문에 연행된 학생들, 제야인사에 대하여 남한 정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편집자주: 앰네스티 기자회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허브 버거씨의 연설문을 요약해서 게재한다(지면상 아태지역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은 생략한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기구가 국제적인 연대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노태홍씨나 김남중씨와 같은 인권운동가들의 활약덕분입니다. 그런 분들과 여러 분들의 헌신, 개인적인 희생과 용기가 인류를 위해 이 세계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비폭력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각국 정부의 책임회피적인 행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앰네스티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앰네스티의 관심사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인권(전문 게재)

한국의 경우 우리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구금되어 있는 300명 가량의 정치범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해 비폭력적인 정치활동으로 투옥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규정을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앰네스티는 정치범들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실제 또는 가공의 공산주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전향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향' 수인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조기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스로 민주적이라 자처하는 정부가 비전향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 후 40년간이나 구금되어 있는 김신명씨나 안학섭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고문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작년 체포되었던 모든 정치범들의 경우 심문 초기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문 또는 가혹행위에 관한 우리들의 우려는 내무부장관 최형우씨의 언급이 있는 이래 더욱 증폭되어왔습니다. 사상범들은 잠을 재우지 않아도 되는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 그것은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최장관의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고 그의 견해가 정부의 공식정책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아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소한 50명의 수인들이 현재 사형수로 대기중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수인들은 보통 수갑을 찬채 구금되어 있으며, 이는 수인의 처우에 관한 국제규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북한에는 1960년 이래 양심수를 포함한 수만 명의 인사들이 여러 형태의 자의적 구금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천 명의 수인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가혹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요청을 한 후 1986년 11월부터 구금되어 있는 신숙자씨와 그녀의 두 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앰네스티는 이들을 양심수로 간주하며 북한당국에 이들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치범들이 기소 또는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도 사형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통의 비전

우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세심 강조합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불가분의 것이고 상호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빵과 자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고문의 방식이 먼저냐 기아의 해결이 먼저냐 식의 토론에 끌려들어서는 안됩니다. 양자가 모두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쟁의 결과이며 국가와 비정부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발견되어 온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의 보편성이나 불가분성을 후퇴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비엔나인권회의는 그러한 노선을 견지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노선 견지 이상의 일을 해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권상을 향해 달려있는 새롭고도 더 넓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무장해야만 절망에 대항하는 강력한 대응전략인 행동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학문의 자유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 등 학계 공동 대응키로
5일 오전 11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반론권 게재 요청서’ 제출

김철이 4일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들이 북의 장학금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학생들의 리포트나 시험답안을 조사하겠다고 언론에 밝힘으로써 학문사상의 자유와 교권 침해에 대한 학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당사자인 장상환 교수(경상대) 등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들은 4일 오전 경시대 23 강의동 201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철의 이적성 여부 수사방침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맞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검찰당국이 언론조작을 통하여 사회를 불안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들 교수들은 “학문적 활동에 대해 외부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유도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안당국의 의해 재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면 참조). 교수들은 김철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5일 오전 11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권 게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회장 장임원 등) 4일 중앙위원회

열고 김철의 수사방침은 학문연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들도 4일 회의를 열어 “당국이 내사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공표하여 개인과 그 소속기관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한 것”에 유감을 밝히고, “동료 교수들이 더 이상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제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결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제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문당한 홍성담(39·화가)씨는 서울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시켰다.

차씨는 89년 11월 8일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이일회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등

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최효진 검사는 고소제기후 4년 7개월만인 94년 6월 30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차씨의 경우 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없이 체포한 사실과 수사관의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고지 없이 불법체포한 점과 61시간 영장없이 불법구금한 점등을 검사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린 것이다.

홍씨의 경우 89년 11월 8일 안기부 수사관의 몽타즈를 감옥에서 직접 그려 피고소인을 특정해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한부환 검사는 피고소인인 안기부 수사관의 이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92년 8월 4일 불기소처분(기소중지)을 했다. 이에 홍씨는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등 제수사를 촉구하며 항고했다.

또한 서경원씨 방북사건과 관련 89년 안기부에 구속된 전국회의원 비서관 방양균(전주교도소 수감중)씨도 94년 7월 제정신청을 냈다. 방씨는 93년 11월 29일 안기부수사관 김군성등을 독직폭행등으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박성득검사가 올해 6월 27일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려 제정신청을 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3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 알 림 ◇

□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반론권 게재 요청서 제출 -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일시: 5일(금) 오전 11시

□ ‘민교협’, ‘학단협’ 등 학계 공동대응 논의
·장소: 민교협 사무실(888-3683) ·시간: 5일 오후 3시

□ ‘미군범죄 추방캠페인’
·일시: 94년 8월 5일(금) 오후 5시(매월 첫째주 금요일)
·장소: 해밀턴호텔 앞(이태원)
·주최: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작은 학교의 생명력을 살려 교육의 틀을 마련할 터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기자회견

지난 7월 6일 첫 모임을 가지면서 출발한 두밀분교 후원회가 22일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 모임」으로 변화한 가운데 4일 오전 11시경 「토론과 기획 2100」에서 연대모임의 결성동기와 입장, 이후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유성(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모임)씨는 “두밀학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세계화에 대처할 기반이 되는 지역의 문제와 국제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질 높은 교육 문제를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금 두밀 주민들은 시민의 교육 주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모범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연대모임의 입장을 말했다.

나아가 “연대모임은 두밀분교뿐 아니라 산재된 작은 학교의 생명력을 살리고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일을 펼쳐갈 것”을 밝혔다.

연대모임은 이후 활동으로 1천만원 모금운동을 벌여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정진(참교육시민모임)씨는 “두밀분교 학생들이 생색교로 등교하지 않고 두밀분교로 다닐 경우 추가비용이 한해 1천만원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참여로 1천만원을 마련한다면 그 효과는 1천만원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은 학교-큰 교육’ 축제행사를 9월말경 두밀리에서 가질 준비중인데, 외국의 작은 학교운영 성공사례, 교육에 관한 영상발표회, 주민들과 교육노래부르기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학교 모델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할 계획이며 전교조 경기지부에서는 현직교사들이 일요일을 이용해 1일교사 수업을 갖을 준비

도 갖고 있다. 현재 서울교대등 교대생들이 두밀분교 학생들에게 보충수업과 특별활동수업을 3주째 하고 있다. 개강 뒤에는 전국 11개 교대생을 대상으로 두밀분교 소식을 알리고 연대활동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양경진(서울교대 국어과 3년)씨는 말했다. 이밖에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는 두밀분교를 포함해 분교문제에 대한 상담전화 받고 있다. 전화번호는 675-9068, 상담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6시(단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1천만원 모금운동 구좌번호: 국민은행 373-21-0023-856, 신한은행 23307-341601(예금주 이정진)

서울시경,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

학생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짜맞추기식 조작수사”
서울시경 육인동 대공분 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과거 시위경력까지 들먹이 며 짜맞추기식 조작수사를 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김영삼정부의 신공안탄압 중단과 구속학우들의 석방, 조작 음모중지를 요구하며 난간도 없는 지상 15미터 학생회관 옥상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대학생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경이 발표한 피의자는 차현민(신방과 석사과정 2재), 강진구(사학 87), 이상철(서어문 3 재), 박현용(철학졸, 평화연구소연구원), 윤형금(언어 4 재), 이정화(언어 4 재), 김기현(교육대학원 1 재), 김영광(통계 3 재), 안호성(전기공 3 재), 안병일(사학졸, 평화연구소연구원)

한편 고대총학생회와 고대구속학생 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경은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한 채 밀실 강압수사로 또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고 있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우리의 입장(요약)

1. 『한국사회의 이해』는 대학교양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집필되었다.
2. 『한국사회의 이해』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과학계의 축적된 한국사회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집필되었다.
3. 또한 강의시 1시간 강의, 1시간 질의·토론시간을 가져 학생들 스스로 판단케 했다.
4. 『한국사회의 이해』는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 우리는 비판적 시각에서 정치, 경제, 노동, 농업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해 온 한국사회과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 요약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데 집필의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4. 이른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표현물...’ 운운하는 감정결과 발표는 『한국사회의 이해』의 내용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다.
- 우리는 이땅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서 남한 사회를 분석하는 개념이나 규정을 책에서 직접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의 중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분석은 책의 내용을 거두절미하여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이론에 대해 문외한으로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공안당국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드러내기를 꺼리는 진실을 체계적이고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5. 이 사건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만약 한 사회에서 개인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새로운 발상이 싹터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체를 수박에 없다. 이번 검찰당국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수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며, 이 사회를 정체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세력들의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이 사건은 검찰당국이 언론조작을 통하여 사회를 이른바 공안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과 사정의 분위기 속에서 움추려 있던 정부 내 공안파들이 이 사회의 분위기를 매카시즘으로 호도하여 자신의 입지를 유지 강화하려는 데서 이번 사건도 비롯되었다. 1994. 8. 4.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일동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민교협·학단협·민예총등 7개단체 「공동대책준비위」 결성

집필교수들 정정보도 요청서 제출 기자 개개인도 고소할 계획

경상대 사건대책을 위한 학계 공동대책준비위가 결성되어 이후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자율화의 문제를 둘러싸고 공안당국과 학계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민교협」 「학단협」 「민예총」 등 7개 단체 30여 명은 민교협 사무실에서 공

동대책회의를 갖고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7개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하는 공동대책준비위는 학술분과위원회, 법률분과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두었다. 학술분과에서는 「한국사회의 이해」의 내용에 대한 대응

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률분과에서는 이후 전개될 사법처리문제등을 책임지게 된다. 공동대책준비위는 9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결성에 앞서 경상대 이창호, 김의동교수의 사건경과보고가 있었다.

서부경남지역 21개 단체 학문의 자유 보장 요구

「서부경남지역목회자협의회」, 「진주지역노동조합연합회」, 「전교조진주지회」등 서부경남지역 21개 민주단체들은 5일 성명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최소한의 이성 과 합리성을 포기한 채 용공으로 음해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영삼 정권과 공안당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뷰:김의동 교수(경상대 무역학과,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 집필자)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의 소환조치로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김의동 교수를 만났다.

- 이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김영삼정부의 개혁외조 움직임과 함께 보수세력의 입지를 확대하려는 흐름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90년부터 시작된 강의는 매년 1천명에서 1천5백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한다. 신입생의 50%정도가 이 강의를 들을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강의내용이 현실문제를 비판하고 있어 문제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강좌를 폐지하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인 것이다. 특히 이 책이 발행될 90년 당시에는 문제삼았으나 「경고」 조치로 끝났었는데, 이제와서야 문제삼는 것 자체가 공안정국과 연관시키려는 의도임을 읽을 수 있다.
- 3일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고 하는데 응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 법적으로 위배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이 없는데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는가. 2차 출두요구서에는 물론 구인에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 강제구인에 앞서 사회과학대 도서관에서 농성할 예정이다.
- 극단의 경우 사법처리도 예상된다.
= 내부 결속은 공고하다. 사법처리문제에 대한 각오는 되어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학 교육자들의 결속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여기에 「공안문제연구소」의 발표등에 대한 학술적 대응 또한 필요하다.
- 이번 문제를 UN 인권위나 인권고등판무관에 알릴 생각은 없는지.
=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환영한다. 우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다면 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 경상대 학생들과 일반교수들의 반응은 어떤지.
= 학내에서는 오늘 5일 대책위가 구성된 것으로 전해들었다. 5백여명의 교수중에는 옹호적 입장을 나타내는 교수들도 많지만 못마땅해하는 교수들도 있다. 교수권과 수업권의 문제로 학생들과 공동으로 싸워나갈 생각은 없다. 물론 학생들 자체내에서 움직여 준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
- 오전 12시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요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 언론중재위에는 우선 중앙일보 8월3일자 사설 「붉은 교수 사실인가」(2면 참조)의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앞으로 중앙일보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등 다른 신문기사와 KBS등 방송에 대해서도 곧 정정보도 요청이 들어갈 것이다. 최환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방송사, 신문사 주필·기자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도 갖고 있다.
-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인정한다면 그 특정한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을 해치는 것이고, 이는 현 체제가 자유민주사회가 아닌 파시즘체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학단협 「공안문제연구소」에 공개토론회 제안

「검찰의 강좌 폐지 강요는 교권 및 학습권 짓밟는 것」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회의 이해」로 문제가 된 경상대교수 사건에 대해 「학문적 저자는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 아닌 공안적 잣대로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검찰당국이 이 책을 교재로 쓰는 대학의 강좌를 폐지까지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과 교권, 나아가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단협은 「공안문제연구소」가 학문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학문적 업적을 매도하였다면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학단협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범수색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연구회는 6일(토) 오전 10시에 서울지검에 불법수색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청동사건은 조작」 고대 학복위 물품 압수품으로 둔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5일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경의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수사발표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경찰이 총학생회를 배후조정하기 위해 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16청년회」는 94년 2월 16일 결성되었던 반면에 총학생회는 93년 11월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격차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점과 「2.16청년회」 일원인 강진구(사학 87학번)씨는 결성식 당시 방위로 경남 함양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한국산업사회연」 불법수색 「전두환정권때도 없었던 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한국산업사회연구회」(회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 사무실이 4일 오후 8시에서 5일 새벽 사이에 불법으로 수색당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4일 낮에 「관악서 정보과 형사」라는 남자가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아 이번 불

법수색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연구회는 6일(토) 오전 10시에 서울지검에 불법수색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알림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불법수색에 대한 고소장 접수

·일시 : 8월 6일(토) 오전 10시
·고발접수처 : 서울지검 검찰청
·접수자 : 박승희 교수(성균관대) 등

□ 원진레이온노동자 투쟁자금마련 일일호프

·일시 : 8월 6일(토) 10:00-22:00
·장소 : 동국대 후문 사롯데 호프점(계일병원 옆)
·주최 :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전화:0346-63-3645)
원진레이온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서울지역 학생대책위원회

주장했다. 복사기와 컴퓨터, 팩스는 생활정보 신문인 「안압골」 편집용이며, 테이프복사기는 AFKN 특강 테이프 복사, 안테나는 대형TV수신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현재 고대 총학생회는 「공안탄압분쇄 및 학생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매진중이다.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영등포교도소, 안재구씨 면회 제한

구국전위 사건으로 기소된 안재구(영등포교도소 수감)씨의 면회가 제한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시되고 있다. 안재구씨의 딸 소영, 소정씨에 의하면 지난 28일 기소된

이후 면회를 할 수 있었는데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 정돼 있다는 것이다. 민교협 대표 서경순 등이 안씨를 면회코자 했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라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계완변호사는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권 남용 손배소송 제기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석진(24, 전투경찰 양심선언자)씨는 5일 신체 가혹행위와 징벌권 남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대한민국, 송선홍(영등포교도소장), 강봉학(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을 피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폭행당하고 추수정 등에 채워진 채 15일간 독방에 갇히고, 강제급식까지 당했다. 민가협측은 지난 20, 2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안재구씨 사망을 계기로 행형제도와 재소자 인권개선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월 3일자 사설

「붉은 교수」사실인가(부분 발췌)

이적성 교재를 공동 저술한 대학교수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준다. 학문연구의 주체이며 이 사회를 이끄는 지식의 대표라 할 대학교수가 利敵性 교재로 학생들을 오도한다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학문 풍토다. (중략) 문제된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는 교수 9명이 전공분야별로 작성한 11편의 논문을 수록하면서 해방이후의 현대사를 마르크스史觀에 입각해 분석 비판하고 있다. (중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 소장파교수들이 객관적 연구와 사실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날 자신들 학생시절의 낡은 논리를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략)北韓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는 충격적 진술과 함께 이 땅에 「붉은 교수」가 있다는 의혹은 차체에 신중하고도 엄정하게 가려져야 한다.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경찰수사 공정성 상실

불투명한 사인으로 고대생 폭행치사혐의 구속 병원도착전의 행적수사 외면

프락치혐의를 받아 학생들에게 조사받다 풀려나 술에 취한채 발견되어 병원에서 지난 5일 사망한 전귀희(39)씨 사건에 경찰이 구타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성북경찰서는 지난 7일 자진출두한 고려대 학생복지위원장 정연철(25, 심리학과 3년)씨등 6명을 감금 및 폭행치사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전씨를 4시간동안 감금한 뒤 '경찰 프락치임을 시인하라'며 밀쳐 쓰러뜨리는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학과 학생회실에 감금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경제과 학생들은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등의 구속은 경찰이 구타가능성으로만 수사를 물고간 결과"라며 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하나는 전씨의 치료를 담당한 동부시립병원 의사, 성북경찰서장의 '폭행을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초발언과 성북경찰서 형사계장이 '어깨와 등, 허리에서 30cm정도의 멍이 발견되었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피하출혈과다에 의한 쇼크사'로 '구타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단정 사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도 정씨등을 긴급구속한 점을 들고 있다.

두번째로는 4일 오후4시 30분경 학교에서 풀려나 같은 날 오후 5시20분경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행적에 대한 수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전씨가 학교를 나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등 전씨의 사망원인이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시간대의 전씨 행적이 밝혀져

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찰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프락치 오인'에 대해서도 "프락치 오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씨가 당시 각대학 총학

생회, 검찰청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신원확인을 위해 전화번호를 하나 가르쳐달라'는 요구에 대담한 번호는 대검형사계번호임이 확인되었다"며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려대에는 '김청동' 사건 전후로 눈에 띄게 경찰의 학내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구속자 명단 : 정연철, 최윤규(25, 경제3), 이광훈(22, 경제4), 남창유(24, 경제3), 전장근(22, 경제3), 김준일(22, 경제3)

비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교도소 "전향하면 처우완화"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20년형), 박영희(국보법위반, 10년형), 심금섭(국보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 전향제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일반재소자와의 차별이 심한데, 25사에 수감된 다른 공안관련 양심수와 철저히 격리시켜 6사 중층에 독거수용되어 있고, 운동시간이 다른 재소자의 절반 밖에 안되며 VTR시청은 일반재소자와의 격리를 이유로 불허되

고 있다. 특히 지난 6월27일 대구교도소에서 이곳으로 이감된 강용주씨의 경우 종교집회의 참가마저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비전향사범은 처우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상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히 격리시켜야 하며, 단 전향하면 처우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강씨는 7월19일 "수형자는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나 순열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제6조)는 '청원' (☞ 2면에서 계속됨)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공 판 안 내 ◆

- 8월 9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4회
- 8월 10일(수)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속행
- 8월 11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8회
- 8월 1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항소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사회경제학회, 대학강사노조, 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9일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

한국사회경제학회, 전국 대학강사노동조합 등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이들교수들이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이날 2·3명씩 나누어 오는 10, 11, 12일 각각 경남경찰청 보안2대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소환장을 교수 8명(백좌훈 교수는 해외출장으로 제외)에게 보냈다.

또 집필진은 경찰에 출두할 수 없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발송했다. 한편 9일 오전10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 발족식과 함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 12일 민교협 중앙회의가 경상대에서 열리고, 13일에는 공대위가 주최하는 집회가 진주에서 치뤄지게 된다.

6일 오전부터 사회과학대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경상대 김준형(사회교육학과) 교수등 8명의 집필진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관련 출두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경남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답변서에서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논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공안당국에 의해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다"며 출석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해 문의할 것이 있으면 집필자로서 충분히 이해하게끔 답변을 하기 위해 책집필에 참고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집필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있는 연구실

로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차출두 마감일인 12일 이후 강제구인이 예측되는 데 이에 대해 이창호교수는 "경남 경찰청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따라서 강제소환의 명분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저자들에게 대한 명예훼손 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에서 "이 책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꾀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자들을 '주사파' 운운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교권침해 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위원장 전명혁)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교수들이 사용한 교재와 강의록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김영삼 정부는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주세력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등 대학원 학생회 사법처리 철회요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 학생회는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교협, 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 요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장임원

등, 민교협)는 6일 오전 10시 민교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통제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당국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저술한 경상대 9명의 교수들과 발행인에 대한 소환·수사를 철회할 것과 보수 언론의 자숙을 당부했다.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경상대 법대교수회(회장 서정향)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에 대해 "학자의 연구성과인 저술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정에서 논의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이는 어떠한 정치체제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편협된 판단으로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최근의 사태는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영순,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6월 보사부가 발표한 '94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용자계획'(용자계획)에 대해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용자계획이 정부가 민간보육시설 확대와 정상적 운영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용자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 여성노동자회는 성명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현재의 용자 이자율을 9%에서 3%로 낮추는 등의 비현실적인 용자조건의 현실화 △입대탁아소를 건립하는 정책으로 용자계획의 전환 △실질적 심사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와 보육시설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구로지역 민간보육시설단체들은 보사부의 용자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청원서와 교사, 자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을 용자신청 마감일까지 1차로 진행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 1면에서 계속)

권을 행사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키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측은 이마저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8월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2·5사에 복역중인 나머지 양심수들은 7일부터 동조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강씨는 6월25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 건강한 일반재소자를 병사에 함께 수용, 감염의 위험에 놓은 점과 썩은 과일등 구매물품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을 법무부장관앞으로 보냈으나 이틀뒤에 안동교도소로 이감돼 강제이감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권하루소식> 7월 5일자 참조).

○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7월 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세실레스토랑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학문·사상·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9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대 교수 9인에 대한 소환 및 수사중지와 대검찰청 최환 공안부장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 개혁할 것과 언론의 자성"을 요구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동안 국내 사회과학계가 이룩한 연구성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판하려는 일은 학문·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상대 사건은 공안분위를 조성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소수 기득권세력의 시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족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는 「공안문제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공개적 토론을 거쳐 「한국사회의 이해」가 과연 이적표현물인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덕우(민변대의협력위원)변호사도 "공안문제연구소의 실태와 그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본격적 사업으로 공대위는 13일 진주지역에서 경상대 사태의 진전과 공대위사업에 대한 보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서울지역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의 내용을 중심한 토론회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중심으로한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상대 경영대 교수

경상대 경영대 교수일동은 "사법기관의 행위로 인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동료 교수의 명예는 물론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경영대 교수일동은 "사법당국은 법적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초치도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대신 내용은 아시아교류기금이 중군위안부 당사자는 물론 정대협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개인배상과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에 "현대노예실무반"이 제의한 '국제상설중재판소' 중재권고안을 정식결의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또 "일본정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성의한 태도를 질책하면서 일본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과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를 비롯해 식민지시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원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내사단계에서 상세한 인명과 내용을 공표해 저자 개인과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병원도착전 대취, 학생조사결과

경찰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귀희씨의 "프락치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생회(회장 김동근)는 대학교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문한 결과 전귀희씨가 술에 취해있음을 확인했다. 탐문결과 한 주민은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안암약국 앞에 앉더니 신발을 빼고는 누웠다. 그후 23차례 맥주빛으로 보이는 말간 물을 토해내었다. 내가 보기에는 술에 많이 취해 보였" "처음 보았을때 어디서 저렇게 술을 먹고 왔나싶을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학생회측은 진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현재까지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전귀희씨는 지난 4일 오후 12시에 프락치로 의심

(☞ 2면에서 계속됨)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제)

경상대학교 교수 9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의의 교재로 집필한 「한국사회의 이해」를 최근에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로 문제삼는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이미 여러 학문공동체들이 지적하였듯이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동안 국내 사회과학계가 이룩한 연구성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판하려는 일은 학문·사상의 자유 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남북회담과 우루과이 라운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현실점에서 공안당국이 이와같은 사건을 터뜨린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현정부가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김일성 북한주석 사후 급작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국정의 방향이 오도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공안통치가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일은 한반도를 둘러싸나 강대국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평화적 통일정책과 민주적인 정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정부는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건강성과 민주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문제된 경상대 사건 역시 공안분위를 조성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소수 기득권세력의 시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들은 우리 민족과 사회의 창조력을 쇠락시킬 수밖에 없다. 당면과제인 전반적 사회개혁과 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상 표현의 자유와 자율적인 토론문화가 정착하도록 관계법령을 개폐하고 민주적인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이 자유와 자율성을 잃을 때 사회의 창조성이 쇠퇴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경상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경상대 교수 9인에 대한 소환 및 수사를 중지하라.
1. 정부는 공안통치의 시각에서 사법처리에 앞장 선 대검찰청의 최환 공안부장을 사퇴시키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1.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라.
1. 진실추구의 원칙과 사실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저버린 언론은 자성하라.

1994년 8월 9일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회의

민족문학작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연합회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1면에서 계속)

을 받은 후 4시 20분까지 조사를 받는 동안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5시 20분경 병원에 도착했을때는 누가보아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로써 이사건의 최대 의혹인 병원도착전인 50분에 1시간 10분 사이의 전씨의 행적과 음주장소, 함께 음주한 사람들 등에 대한 조사가 관심의 집중되고 있다.

◆ 인권 간행물 ◆

- 북한의 인권실태(84년 8월 9일)-홍일원
·주요내용 :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7호)-문국진 모임
·주요내용 : 문국진의 처 윤연옥(곽진선)/ 기획연재2-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됨을 완전히 파괴하는 고문(고문의 특성)/ 삼청교육동우회를 찾아서-국가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 고문후유증 사례(방양균씨의 경우)-고문을 당한 가정이 후유증을 앓으며 감옥에 갇혀 있다 등
- 평화의 일꾼(94년 8월)-천정연 장기수가축협의회
·주요내용 : 관악산의 비(상종영)/ 짜장면 인생(한상봉) 등
- 녹색고통(94년 7월)-녹색고통운동
·주요내용 : 특집(철도, 지하철의 파업사태가 남긴 것)-지하철 파업을 정부책임이다(나상윤), 수도권외 교통혼란은 재발할 수 있다(박병소), 철도, 지하철 파업사태, 무엇을 남겼나(서장석)/ 녹색진단-시의버스, 수술이 필요하다(박선희) 등
- 우리네 아이들(94년 7월)-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보육사업과 국가(김연명)/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복지국가의 모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향하여 새마을 일구는 사람들(주혜민)/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미술활동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이영애) 등
- 운동본부 소식(94년 8월)-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주요내용 : 권두언-기치준 여성의 대변자, 우리 운동본부(이성혜)/ 숨겨진 범죄-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등
- 함께가는 여성(94년 7월)-한국여성민우회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성계 입장-민주우선을 바탕으로 신뢰관계 구축을/ 지역자치와 여성-지역차원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하여(김선옥)/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나 나의 미래는 철새(최운선) 등
- ILO단결권 협약(제87호)과 한국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94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여성정책연구(94년 여름호)-여성정책연구소
·주요내용 : 지방자치, 제대로 해야한다(이병화)/ 여성정책연구소에 바란다 등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세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6공 공안정국의 포로, '죽음을 사주한 어둠의 배후자'

강기훈 석방 7일전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신공안정국 - 시련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전기협 농성장 침탈은 일제의 예비검속 해당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가 10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려 노동·학생·통일운동 탄압,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공안탄압을 부추키는 언론의 왜곡 보도 실상 등이 공개되었다.

민가협, 민변, 한교협 인권위등 9개 인권단체가 주최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박석은 노동정책연구소장은 "김영삼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개방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노동조건이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반대, 임금억 제정책 철폐요구는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밝히고, "철도·지하철 파업, 한진중공업의 선상파업, 금호타이어 대기진 파업 등은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확보하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지난 6월 23일 합법적으로 농성 하던 전기협 노동자들을 구속한 것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예비검속'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긴급구속된 노동자의 경우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공무원의 정의행위 등을 가로막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도·지하철 파업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한 이기욱 변호사는 "현정부 출범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가 104명인데 올 6, 7월의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는 10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신공안정국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로 '구국전위' 사건을 들고 "3차례에 걸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 군사독재시절에 구태를 다시 반복해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2일의 '노동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침투, 조직원을 산입현장에 보내 불법파업 선동, 특히 철도·지하철 파업에 조직원 활동사실 확인' 등의 2차발표는 철도·지하철,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의 파업이 진행되던 시기와 일치하고, 7월 28일의 '구국전위'는 북의 지령을 받아 학원계와 노동계에 침투, 조직원을 통해 전대협 동우회를 결성케하고 이를 통해 한총련의 활동 조종' 등의 3차 수사발표는 김주석 사망 이후 조문파동과 박홍총장의 '주사파 배후' 발언으로 이념논쟁과 주사파 척결을

앞세우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재구씨에게 '한국과학기술청년회'(한과청)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줬던 한과청 전 간사 최영준씨는 아지트 제공등의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상식씨등 '포항민주청년회' 회원 5명은 '구국전위'와 관련을 찾지못해 입수경 방북비디오등을 시청한 것이 이적행위로 간주돼 구속되었으나 발표때에는 '구국전위' 조직원으로 발표되는 등 사건부풀리기가 심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신공안정국에서 학생운동 탄압사례, 언론의 왜곡 보도 실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사례, 종교권에 대한 탄압사례 등이 보고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다음호 참조**).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월별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 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93년											
월	계	3	4	5	6	7	8	9	10	11	12
총구속자	188	7	4	19	19	43	28	7	13	28	20
국보법	104	3	2	16	6	16	12	5	7	20	17
94년											
월	계	1	2	3	4	5	6	7			
총구속자	446	4	41	24	25	23	215	114			
국보법	179	3	34	18	14	8	45	57			

94년 6, 7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사건별 분류(총 102명)

사건	구국전위	조문관련	남총련	조선대 교지	한총련	일심단결	국제사회주의자	사노맹 관련	평불협	출판
구속자	23	8	7	3	22	6	6	2	2	1

이창복 의장 구속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11일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범추본, 전국연합, 전교조 '민족대결주의에 매달리는 처사'

김주석 조문 논란, '구국전위' 사건,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등을 계기로 구체화된 정부의 대북 강경대응의 표적이 민간통일운동의 지도체격인 범추본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창복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 등을 긴급구속, 10일 귀국하던 박영호(충북연합 집행위원장)씨를 김포공항에서 긴급구속, 범추본 조성우 서명운동본부장의 수배령 등은 범민족대회등 민간통일운동에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추본은 10일 범민족대회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사를 거듭 강조하며 대회장소를 독성고수부지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10일에는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전국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해 개인용 컴퓨터 본체 5대, 팩시밀리 1대, 전화기, 범추본 결성대회 자료집 등을 압수했다. 이 의장과 황 집행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4월 열린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 중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 지지, 전국연합의 김주석 애도성명 등의 혐의이며, 박 집행위원장은 '범민족대회 신문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홍 한청협 의장은 "공안관계자들로부터 '이들은 1차 대상자이며 11일

중으로 관련기관 회의를 열러 2차구속대상자를 확정할 것'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부가 치밀하게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준비해온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제5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범추본)는 10일 긴급구속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냄으로써 정부의 반통일성을 만천하에 입증한 결정적 사건이며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범민족대회 추진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긴급구속하고 수배한 사건은 부당한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추본은 "범민족대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른바 문명정부가 국민, 민족민주운동, 민간통일운동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최근의 신공안행각은 반세기 에 걸친 유례없는 민족분단의 비에 속에 은국민을 진저리치게 만들었던, 그리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했던 독재와 민족대결주의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연합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개인적인 신신구속처원을 넘어 민족민주운동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공안통치의 종식

과 범민족대회의 원청봉쇄 방침 철회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도 10일 성명을 통해 "창구단일화라는 경직된 논리로 자주적인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차단하는 정부의 처사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며 반역사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장 남발, 졸속수사 비난

영장기각3명, 불구속입건 2명

전국회씨 사망사건과 관련, 8일 구속된 정연철(25, 고대 심리3)씨등 6명중 정씨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긴급구속장 남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 형사지법은 정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타한 증거가 없고, 긴급구속의 사유가 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서울지검 형사3부(김홍일 검사)는 긴급구속장 발부때와는 달리 남창유(23·경제)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형사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른바 문명정부가 국민, 민족민주운동, 민간통일운동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최근의 신공안행각은 반세기 에 걸친 유례없는 민족분단의 비에 속에 은국민을 진저리치게 만들었던, 그리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했던 독재와 민족대결주의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연합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개인적인 신신구속처원을 넘어 민족민주운동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공안통치의 종식

영·호남지역 교수 경상대교수 강제소환 즉각 중지 요구

부산·경남의 '지역사회연구회'(회장 황한식)와 광주 및 전남·북지역의 '전남·호남사회연구회'(회장 오수성등) 소속 1백50여명은 10일 성명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관련, 해당교수들의 강제소환 즉각 중지와 학문·출판 자유보장을 요구했다.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등 B규약 위반

유엔인권이사회와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간사)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 7월29일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형선대법관, 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작·소지하였으나 미필적 인식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한 그 내용이 다른 간행물등을 통하여 이미 일반에 소개된 것이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상고이유서에서 "국보법은 실제로 국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일이 없기에 법률의 효력이 없으며", "이적목적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보법이 사람의 양심과 사상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임을 드러낸 것이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이는 90년 7월10일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중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장(제18,19조)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곧 헌법에 위반하는 일이라고 보았다(<인권하루소식> 3월31일자 참조).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신공안정국 - 시련받는 인권 기획(2)

물고문, 담배불 지집, 사시미 칼 위협

광주 동부경찰서 '수배자 행선지 대라' 여관등에서 고문 결국 구속

수배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간부의 행선지 파악과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전남 대동성을 깨뜨리기 위해 경찰이 노조원을 여관에 불법감금시킨채 담배불로 지지고 송곳으로 찌르며 물고문까지 행한 사실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위원장 장영열, 금호노조)과 피해자들의 가족이 생명불상의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을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월 21일 오후 9시경 동부경찰서 소속경찰 5-6명은 금호타이어 노조원 한생남, 모한중, 김옥현, 김영만씨를 영장없이 연행, 운암동 고가다리 아래에 있는 놀이터 옆 여관으로 끌고갔고 22일 새벽 1시경 동부경찰서 근처 아시아나장 506호실로 옮겨 신호식 금호노조 목성기부장의 행방등을 대라라는 가혹행위 및 고문을 하였다.

이들은 한씨등 4명을 22일 아침 8시경 동부경찰서로 옮겨 결국 노동쟁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금호노조 및 고발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영만씨에게 폭행은 물론 담배불로 어깨부위를 지지고

송곳으로 찔렀다. 김씨는 왼쪽 어깨에 담배불로 지진 흔적이 남아 있다. 또 한씨와 모씨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했다. 특히 김옥현 조합원의 경우에는 담배불로 지지고 송곳으로 찌른 것은 물론 22일 새벽

2시30분경 어린이대공원으로 끌고가 사시미칼로 위협, 거짓전화를 하게하여 금호노조 집행부를 유인해 붙잡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내무부장관의 해임과 관련경찰관의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전략)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 재직중인 9명의 교수는 몇년전에 출판되어 1990년이후 대학교재로 쓰고 있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의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 책이 지난 4년동안 대학교재로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한 보도는 검찰은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답안을 작성하여 좋은 점수를 받은 몇명의 학생을 조사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중략)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 남한 당국은 북한방문을 시도했거나 에도성명을 발표한 혐의로 수심명을 연행하여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생으로 이들은 조문성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구금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이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한 규정은 막연하게 해석되어 학생, 정치적 반대자, 출판업자 등을 포함한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한 진보적인 사상에 대한 일치된 반대캠페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보다 더 많은 구속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한다. 8월초 민자당 의원들이 학생들에게 좌익사상을 가르치는 교수를 일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발언은 서강대학교 총장이 몇몇 학생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다고 얘기한데 이어 나왔고 경찰은 대부분의 총학생회가 좌파학생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당국에 요구한다.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단지 평화적으로 실천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말 것을.

6공 공안정국의 최대 희생자 - 강기훈 석방 5일전

신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편집자주> 허투가 멀다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6월 구국전위 사건을 시작으로 몰아친 공안바람은 거칠 것이 없다. 내일은 또 누가? 민가협등 인권단체들이 10일 가진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보고대회'에서 되짚어본 「신공안정국의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실태」를 요약정리해 실는다.

1. 국제사회가 폐지를 촉구하는 국가보안법

미국정부는 2월25일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를 통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뒤 크리스토퍼 미국무부장은 <문화방송>과의 위성대담을 통해 "한국정부와 국민이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케네디 인권재단, 세계기독교학생연맹, 국제고문반대연합 등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보법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거론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 또한 국보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한국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3월 4일 정치관계법의 미합의 쟁점에 대한 타결책을 찾기 위한 회담에서 국보법 폐쇄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 국회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쇄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된 바 없다.

2. 김영삼 정부에서의 국보법 적용 실태

김영삼출범이후 7월 31일까지 1년5개월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6백34명이며 이중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자는 2백83명(44.63%)이다. 출범이후 최대구속자를 낸 6·7월 구속자는 3백 9명, 그중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1백2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출범 1년이 되는 2월 25일까지 구속된 양심수는 2백22명으로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62.4%인 1백39명을 차지했는데, 이들중 2월25일 현재 재판을 마친 70명 가운데 87.5%인 62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8명(1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

보법 조항중 자의적 법적용률이 높은 이적표현물 소지, 폐포 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국보법 전체 구속자의 33.6%나 차지해 실적위주의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정부들이 대표적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는 컴퓨터통신, 미완성 창작 노래극 대본, 출판물등을 들 수 있으며, 출판인에 대한 구속사태는 미묘하게도 그 시기가 국가안보문제가 심각하게 들출될 때와 일치하는 점을 볼 수 있다.

3. 신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구국전위 사건>

6월16일 발표된 구국전위 사건은 '문민정부' 들어 국보법 사건으로 23명이라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냈다. 그러나 사건 관련된 구속자 다수는 안기부,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구국전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조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조작관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 별건으로 조사를 벌이면서도 구국전위의 관련자로 발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구국전위 관련자로 발표된 다수의 사람들을 구국전위건으로 공소유지가 불가능해 이적표현물 소지등 단순 국보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9월부터 열릴 예정인 재판에서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국전위사건의 문제점은 수사발표과정에서도 보여진다. 안기부는 7월 2일 안재구씨등을 검찰로 송치하며 '노동계 침투에 주력한 간첩단 사건'이라는 요지의 2차발표를 했다. 그러나 7월28일 3차발표에서는 '구국전위가 북한의 지령을 직접받아 학원계와 노동계에 침투했고, 안씨는 북의 지령을 받고 조직원 김진국씨를 통해 반미청년회총재인 조혁을 포섭, 93년 12월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 활동을 조종했다'고 밝혔다. 3차보고 발표시점이 김주석 사망이후 조문파문으로 보수언론과 공안세력들이 날마다 한총련-주사파 척결을 외치던 때와 일치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전대협동우회는 조혁, 김진국씨는 전대협동우 회원도 아니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김진국씨 또한 조혁씨와 안재구씨는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말했다.

<김주석 사망이후 국가보안법 적용>

-조문파등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7월 임시국회에서 이부영의원의 김주석 조문관련 발언 한마디가 보수세력과 여당의원의 집중공격을 받고 정치권은 조문논쟁에 휩싸였다. 이는 조문논쟁으로 비화되었고,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방침을 발표하며 대학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전남대 분향소사건'이 발생, 새로운 논란이 벌어졌고 각 대학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불법연행, 구속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통일원에 등록단체인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의 회보기사와 관련 7월 20일 법타스님이 구속되었고, 조문미수행의로 범민련 관계자들이 구속되었다. 또한 조의 현수막을 부착한 혐의로 7월 18일과 23일 시립대 최인규 부총학생회장과 한양대 안산교정의 김진숙 총여학생회장이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방침, 대학교재와 교수에까지 국가보안법 적용

박홍총장은 8월1일 일본의 한 일간지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 대검공안부 최환공안부장은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대립을 강조, 계급혁명과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상대 교수들에게 소환장 발부, 출국금지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계로 구성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위」는 '4년전 출간된 대학교재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문제삼겠다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학문사상의 자유에 위배됨은 물론 교육권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주 국제인권소식은 기사법처 쉽니다>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

경상대 총장, 실정법 절차 준수 주장 민교협, 대학자율권 포기 처사 강력반발

검찰의 『한국사회의 이해』 조사로 교수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자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교협은 12일 오후 2시 경상대에서 임시중앙위원회를 가졌다. 1백여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정부의 학문자유 탄압을 규탄하고 검찰의 경상대 교수 9인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저녁 경상대 구내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13일 오전 10시 경남 경찰청과 창원지검을 방문해 경상대교수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12일 저녁 10시 현재 50여명의 민교협회원들은 철야농성중이다.

부터 오후 1시까지 경상대 22동 101호 강의실에서 70여명이 참가한 속에 경상대 사태에 관한 비상총회를 가졌다. 부산경남 민교협 회원 교수들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비민주적 국가권력과 야합하여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보수언론의 자숙을 촉구했다.

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교수들은 실정법 절차에 따라 임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입장표명이후 민교협은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공동의장단으로 대표를 구성해 경상대총장을 방문, 경위설명을 듣고 학문과 대학의 자율이라는 차원에서 민교협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학생들은 “9인의 교수와 일부교수들의 의견과는 달리 다수의 교수들의 견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사법처리로 하루 빨리 배대것기를 바란다”는 총장의 발언에 분노를 나타냈다.

서울시 교육청 이수호씨등 8명 임용대상 제외 면담기회도 안 줘 전교조, '관료행정의 표본' 비난

전교조는 12일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추가복직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면담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이수호(94년 서울지부장)씨등 해직교사 8명을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자체 인사위를 열고 2학기 추가복직 대상자 11명을 확정, 개별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전교조는 전남·북등 타시도 교육청과는 구별되는 폐쇄

적 관료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학기 추가복직 제외자 8명을 포함해 전교조 관련 누락자 26명,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등 2백30여명의 해직교사를 복직을 요구했다. 2학기 추가복직 제외 대상 : 이수호, 이부영(94 부위원장), 김현준(94 사무처장), 신연식(93 사무처장), 조정(93 대변인), 신연식(93 편집실장), 이동진, 김문식, 박상대

사망 6명 중경상 52명 폭발 원인규명 촉구 인천 진흥정밀화학노조

지난 7월 26일 사망 6명, 중경상 52명을 낸 진흥정밀화학(대표이사 조백호) 폭발사고에 대해 진흥정밀노조는 “엄청난 사고의 원인은 위험이 내재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행정기관과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진흥정밀화학노조(위원장 안우현)는 노조비대위, 유가족대책위,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처벌, 제2의 사고에 대한 대안마련,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현재 인천지역은 유독,인화, 폭발물질을 다루고 있는 화학업체가 4백9개나 되는 도시로 언제든지 제2, 제3의 대형참사가 터질 위기를 안고 있다.

행사안내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대회

- 일시 : 13일 오후 2시
- 장소 : 경상대 22동 101호 대강의실
- 문의 : 경상대 사회과학대 도서관 임시상황실 (☎ 0591-751-5721)

6공 공안정국의 최대 희생자 - 강기훈 석방 4일전

단체탐방 28 /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 생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살 다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골병들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을 세계 2위, 92년 한해에 2천 4백 29명이 사망하고 10만 5천 6명이 부상당했다는 노동부의 공식통계 등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골병들었다'는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건강해야 할 노동, 즐거워야 할 삶의 현장에서 '골병'이 들 수 밖에 없다면, 병명도 모르는 채 또는 살기에 바

이 바되고 상호변경을 거듭해온 부실기업, 집단해고와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대표적 공해산업으로 묘사되는 원진레이온 속에서 노동자들은 병명도 모른채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혹시나 쫓겨날까봐 아프지 않은 척 위장을 하고 진통제를 밥알치

환경개선과 전문가 확인, 장애인사등급은 1등급 최고 1억원에서 14등급에 1천만원의 지급한다, 직업병인정기준개정 등이 있다. 이러한 합의서는 안전사고 산업재해와는 다른 독립적인 직업병판정기구를 설치한 것이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기준이 비현실적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독자적인 장애보상수준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였다.

직업병의 대명사 원진레이온! 그들의 '건강'과 다시 '노동할 수 있는 삶'

림 삼키며 참아야 했다. 건물주변의 나무들이 말라죽고 텔레비전 안테나가 6개월도 안돼 삭아버리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래도 직업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황화탄소중독이라는 원인이 밝혀지고 희생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원진노동자들은 원진레이온 밖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59년 회사가 설립되어 93년에 회사가 폐쇄조치되기까지 이곳을 거쳐간 원진노동자는 1만 5천여명이다. 그중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판명을 받은 노동자는 88년 14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백 59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중 16명이 사망했으며, 16명의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직업병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은 진행성 질병으로 퇴사한지 23년만에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 작업환경에서 실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를 언제 대면할지 모른다. 특히 이 병은 육체적 증상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있어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자살하고 일반 열심히 하던 아버지가 포악해지고 우울해지고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된다

원진레이온의 비극과 투쟁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59년, 전 화신백화점 사장 박홍식씨가 일본에서 이미 20년 이상 사용한 중고기계를 사들였다. 물론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비밀은 이 기계의 두꺼운 녹속에 덮여있었고, 그 기계의 녹을 닦아내고 가동하는 순간부터 원진노동자들은 색깔 없는 이황화탄소 귀신에게 호흡기를 점령당한 것이다. 13차례나 사망

이런 성과는 원진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직업병 문제에 대한 관심확산과 법률이나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등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원진노동자들이 요구해온 것중에 들어 있는 산재종합병원설립이나 폐업 이후 갈곳이 없는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많은 부분이 합의각서와는 달리 이행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원진레이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진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질병과 생계유지의 이중고가 자리잡고 있다. 원진출신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직업병을 의미하는 바에서 이들은 어느곳에도 취업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또 터졌다.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고철이 된 원진레이온의 기계를 중국에 수출한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노동자들이 1백여명 들어와 기계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고통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다. 인권의 보편성이나 국제성등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이 비극을 막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원진레이온이 걸어온 길은 올해 『얼룩진 원진레이온 이력서』의 출간, 장편소설 『검은하늘 하얀 빛』, 다큐멘터리 형식의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정리되어야 할것은 이들의 '건강'과 다시 '노동할 수 있는 삶'이고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아닐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대한 '삶'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예방과 대책을 탄탄한 '길'로 닦아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강기훈 이제야 나왔다

17일 새벽 만기출소

강씨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전현지발] 17일 새벽 4시 10분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의 실형을 산 강기훈(31)씨가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하였다. 이날 대전교도소에는 새벽 1시부터 강기훈씨를 환영하기 위하여 가족, 민가협, 당시 전민련 관계자, 동료, 취재진 등 70여명이 모여들어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강씨의 출소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4시가 되어도 강씨가 나오지않자 출소를 요구하며 돌맹이와 캔을 가지고 철문을 두드리고 크라션을 울리는 등 항의시위를 벌였다. 출소직후 최중진(전농 사무처장, 당시 범국민대책회의 상항실장)씨의 사회아래 간단한 "강기훈출소환영식"을 가졌다. 민중의례를 마치고 당

시 범국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수호씨는 환영사를 통해서 "3년전 죄없는 청년을 감옥에 놓아두고 철문을 나설때 어른으로서 가슴이 무척 아팠다. 시간이 흘러 강기훈이 출소하였어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다른 감옥일 수 밖에 없다. 강기훈씨의 진실은 그에게는 물론 민주화를 위해 몸바친 김기실 동지의 진실과 함께 소중한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힘을 모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씨 어머니 권태평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

문에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강씨는 서울에 도착하여 함세웅 신부(강기훈 공대위 위원장), 범안스님(총무원 총무국장), 이규용 장로등 재야인사와 아침을 먹고 기차간담회를 가졌다(2면 강기훈씨 인터뷰).

알 림 니 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권운동
 *의회,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동입니다.
 참여연대는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하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등 5개 전문센터와 시민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민을 민주주의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 바꾸는 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은 참여연대의 한 전문센터로서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펴 나감은 물론 인권운동의 전문화, 국제화, 대중화를 위해 이전과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얻는 보다 폭넓은 경험과 시각을 밀거름으로 삼아 <인권하루소식>을 더욱 알차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일동

▷ 참여연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연락하십시오 <

강기훈씨 사건의 모든 기록!

유서사건 총자료집

'유서대필 사건'의 판결, 이제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전3권 2700여쪽

- 제1권 : 수사자료(약 800쪽)
- 제2권 : 재판기록(약 900쪽)
- 제3권 : 참고자료(약 1000쪽)

구입문의 : 796-8364 / 3책 1질 10만원

'대량구속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

재일인권단체 재일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

일본에 있는 「칸사이(關西) 한국정치범 구원연락회」(구원연락회)는 지난 13일 8-15 특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역대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투옥되고 있는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구원연락회는 "한국에는 최근 김주석 사망에 의한 조문문제등을 계기로 안기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이나

경찰이 정국의 핵심을 장악하는 공안정국이라고 불리워지는 상황에 있다"며 "이 공안정국에서 학생, 노동자 등이 대량으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또 구원연락회는 "이와같은 대량구속 사태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이후 최대규모로써 대통령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학' 서명운동 본격화

13일 학문·사상·표현공대위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대회 및 서명발대식」이 13일 오후2시 경상대 22동 101호 대강의실에서 교수, 시민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부 보고대회에서는 공대위 활동보고, 공안당국이 이적성이 짙다고 주장한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보고 및 공대위 참가단체들의 이번 사건의 의미와 격려의 뜻을 밝히는 연대결의로 이어졌다. 이날 학술평가보고에서는 민중운동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 반공이데올로기, 지배질서의 유지와 민족민주운동 탄압에 봉사하고 있는 법체계 등이 「한국사회의 이해」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장상환교수는 "전국교수들의 연대활동이야말로 이

번 사건을 여론화시키는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 공안당국이 빨갱이로 모든데 맞서 학살·진보단체들이 탄탄한 결집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2부 공대위 서명발대식에서는 이후 언론·종교·문화 등 각계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1차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을 알리며 서명운동 출범을 선포했다. 이후 사업으로 학술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공안문제연구소'와의 공개토론회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3일 오전 김대환(학단협 회장)·장임원(민교협 공동의장)교수 등이 경남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출두가 곤란하면 학교나 경찰서를 제외한 제3의 장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경상대교수들

인터뷰

'유서대필 사건'으로 만기출소한 강기훈씨

"나를 때나 들어갈 때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7일 오전 4시 10분, 3년 57일만에 만기출소한 강기훈(31)씨의 첫마디이다.

- 출소소감은
=3년 2개월동안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를 이겨낸 것은 곁에 계신 어머니의 힘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저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 주시고 관심가져 주길 바랍니다. 저같은 사람을 또다시 만들어 내서는 안됩니다.
-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었고, 작년 여름 아버님이 병환으로 위독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작정이냐고 하는데.
=이달내로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으나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도 법이 공정하다는 걸 믿고 싶다.
- 당시 수사과정에서 잠안계우기 등 고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라는데
=주위 분들과 상의해 준비해 갈 것입니다.
- 최근 박종철장의 '주사파'발언은 91년 당시와 거의 흡사한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91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또 어떤 생사람을 잡을려나 우려가 됩니다. 교육자이자 신부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장이 공안정국의 예방탄을 날렸지만 공안정국으로 물고 가려는 습은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 이후 계획은
=가족들과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긴 수행생활을 마친 그는 "계속 관심가져주시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고 끝맺음을 지었다.

은 17, 18일로 정해진 3차 출두요구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해투 하계수련회 8월 18-20일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7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성리 밤나무집에서 '전해투 하계 수련회'를 갖기로 하였다. 94년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수련회에서 일부사업장의 해고자 복

직 및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해고·수배에 따른 조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위원장, 집행위원 등이 새로 선출될 예정이다.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폐강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들은 16일 오전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폐강시킨데 대해 17일 오후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1시 경상대 사회과학대 도서관에서 사태급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공 판 안 내 ◆

- 8월 17일(수)
·이부영, 국가보안법등, 11, 319호, 속행
·박정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속행
- 8월 19일(금)
·김철미,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속행
·김진한외 2, 업무방해, 2시, 속행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경상대학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 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검찰의 이적성 수사로 문
제가 되어온 『한국사회의
이해』 책 내용이 집필교수
들의 소환여부에서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
해』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논
의를 거쳐 최종으로 학처
장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학처장회의가 ‘통과기구’인
점을 감안한다면 폐강이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
는 가운데 집필진들은 철
야농성을 통해 항의하고
있다.

정진상교수는 “사회과학
대와 자연대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인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
은 상황에서 외부압력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며 경상대 내에서 경영대,
인문대, 법대등 5개 단과
대 학장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이 모색될 것임을 밝
혔다.

정상환교수등 집필자 8명
은 “당국은 대학에 압력을
행사해 교수의 고유권한인
강의의 폐강을 전적으로
결정케 했다”고 지적하면

서 “강의의 형식과 내용은
교수의 고유권한인 교권에
속하는 만큼 강의가 대학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개폐
된다면 이는 명백한 교권
유린”이라고 설명했다. 덧붙
여 “공안문제연구소의
왜곡된 분석결과를 선불리
발표한 검찰과 이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
보도한 언론에 의해 이미
경상대 구성원들은 만신창
이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
다.

나아가 외부의 압력에 대
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지켜야할 책무를
지닌 경상대 빈영호총장은
이번 폐강결정으로 대학을
지켜야할 기본적 본분마저
저버렸다고 말했다.

17일 오후부터 정상환교
수등 8명은 ‘학문의 자유
와 교권 수호’, 『한국사회
의 이해』 폐강철회를 요구
하며 사회과학대 도서관에
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인론의 본연지서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경상대 사태를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28명은 17일
경상대 교양교재에 대한
이적성 수사와 관련, 즉각
적인 수사 중단과 함께 경
상대측이 정치적 이유로
정규 개설강좌를 폐강하려
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
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교
(2면에서 계속됨)

알 린 니 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
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
을 가져주신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
립니다.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
는

-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권운동
- *의회,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
-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
동입니다.

참여연대는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하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
터),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등 5개 전
문센터와 시민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민을
민주주의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 바꾸는 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은 참여연대의 한 전
문센터로서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펴 나갈은 물론 인권운동의 전문화, 국제화, 대중화를 위
해 이성과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활
동을 통해 얻는 보다 폭넓은 경험과 시각을 밀려름으로
삼아 <인권하루소식>을 더욱 알차게 꾸며나가겠습니
다.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일동

▶ 참여연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연락하십시오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지난 16일 서울형사지방법
원 형사21부(재판장 부
장판사 이홍훈) 심리로 진
행된 이창복 제5차 범추본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
의장)과 황인성 범추본 집
행위원장(전국연합 집행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사
청구이유서를 통해 “피의
자들은 긴급구속요건이 갖
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
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실사 긴급구속
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48시간이내인 8
월 11일 17:30분경(황 집
행위원장), 같은 날 19:20
분경(이 상임의장)까지 발
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0경에 발부되
었다”며 “긴급구속이 적법
성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
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
했다.

긴급구속장 발부의 관건
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
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
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
송법 206조 1항)하고 있고,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집견거부는 “92년 1월 28
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집견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207조 2
항)되어 있다.

변호인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임종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 위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7일
경찰서에 구금중 변호사와
의 집견을 거부한 것과 관
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
사결과 드러난 관련자들을
임종처벌해 줄 것을 요구
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화
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
다.

대한변협은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으로 구금
중이던 이상철씨 가족으로
부터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은 유선영 변호사가 지
난 2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이씨의 집견을 신청하였으
나 변호인선임계가 침부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2회에 걸친 집견을 거부하
였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집견거부는 “92년 1월 28
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집견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

이 상임의장은 지난 9월
19:20분경, 황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17:30분경에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고,
전국연합은 지난 11일 서
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불법
체포감금죄로 고발한 바
있다.

라고 밝히고 “위와같은 위
법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
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것
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 가족은 변호사
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
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
다.

여성의 전화, 민우 회등 상담교육 시작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
상담소」 등이 상담교육 강
좌를 실시한다. 민우회는
8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경동교회 교육관에서 ‘(가
칭) 일 가족 성 상담소’ 개
설을 위한 상담원 전문교
육을 연다. 모두 16강좌로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까지 실시
한다. 회비는 5만원.

여성의 전화는 제23기 여
성상담전문교육을 오는 9
월 9일부터 시작해 11월
29일 까지 총21개 강좌로
매주 화, 목요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간강좌
를 듣기 어려운 직장인들
을 대상으로 야간강좌(단
첫강좌는 9월8일)를 마련
했다. 여성문제 및 상담에
관심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회비는 7
만원. 주간강좌는 오전 10
시30분-오후1시, 야간강좌
는 오후7시 30분-9시 30
분. 또한 성폭력상담소는
오는 9월27일부터 제6기
상담교육을 가질 계획이
다.

(1면에서 계속)

“교양선택 과목에서의 강의내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장대를 들이대는 일은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대학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발상”이
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또 “어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도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탐구와 다양한 교육적 실천은
보장되고 권장돼야 한다”며 “검찰의 자의적 왜곡에 무
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다수언론도 교권과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4시30분께 부
산 영도구 청학1동 선원학
교 뒤편 야산에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 오던 월남
전 참전한 김현경(59)씨가
10m 높이의 나무가지에
비닐빨랫줄로 목을 매 숨
져 있는 것을 감씨의 아들
개성씨(2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66년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 오던중 최
근 수족이 마비되는 등 중
풍증세까지 겹쳐 고생해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이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

16일 오후 4시30분께 부
산 영도구 청학1동 선원학
교 뒤편 야산에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 오던 월남
전 참전한 김현경(59)씨가
10m 높이의 나무가지에
비닐빨랫줄로 목을 매 숨
져 있는 것을 감씨의 아들
개성씨(2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66년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 오던중 최
근 수족이 마비되는 등 중
풍증세까지 겹쳐 고생해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이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훈씨 사건의 모든 기록! 유서사건 총자료집

‘유서대필 사건’의 판결, 이제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전3권 2700여쪽

제1권 : 수사자료(약 800쪽)

제2권 : 재판기록(약 900쪽)

제3권 : 참고자료(약 1000쪽)

구입문의 : 796-8364 / 3책 1질 10만원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긍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이창복·황인성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18일 연이어 입장발표

국보법, 표현·결사의 권리 등 국제기준 어긋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면위원회)는 18일 '남한-표현의 자유 억압 속의 새로운 구속'(AI INDEX : ASA 25/WU 05/94)이라는 문서에서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경상대교수 소환시도 사실 등을 표현과 결사의 권리의 평화적 행사에 대한 침해 사례로 들면서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창복씨와 황인성씨의 석방을 위한 호소'(AI INDEX : ASA 25/27/94)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서를 통해 지난 9일 체포된 이창복 상임의장과 황인성 집행위원장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

섰다. 또 이, 황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호소하고 많은 학생과 정치계 반대자에 대한 최근의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편지를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장관,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다. 사면위원회는 "이, 황씨가 수감됨에 이르는 진보적이고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압의 희생자들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면위원회는 또 "최근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사면위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

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몇몇 조

항이 국제인권기준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정부는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후 '김일성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대량 구속에 대한 우려'(7월 20일 2면에서 계속됨)

알 림 니 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는

-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권운동
- *의회,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
-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동입니다.

참여연대는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등 5개 전문센터와 시민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민을 민주주의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 바꾸는 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은 참여연대의 한 전문센터로서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펴 나갈은 물론 인권운동의 전문화, 국제화, 대중화를 위해 이전과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얻는 보다 폭넓은 경험과 시각을 밑거름으로 삼아 <인권하루소식>을 더욱 알차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일동

◎ 바로 잡 습 니 다 ◎

<인권하루소식> 제229호(94년 8월 18일(목)자 1면 소제목인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본연자세 확립 촉구'를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로 바로잡습니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언론의 역할을 곱해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총장에 항의서한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18일 경상대총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강의를 폐강한 것은 대학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강의는 교권중에서도 핵심인데 이번 사건으로 교수들은 교권을 짓밟혔습니다. 또한 이미 수감신청이 끝난 강좌를 상당한 이유없이 폐강한 것은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17일 오후 집행위를 열고 공청회 마련과 서명작업 1차마감을 31일로 할 것을 결정했다. 29일 '김영삼정부'의 주제로 열리는 공청회는 주제로 '신공안정국과 학문·사상·표현의 자유'(한신대경영학과 교수 중),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학단협),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신장수변호사) 등 3주제로 나뉘어 발표된다. 2부에는 1부 주제발표자와 학문·사상·표현 공대

위 참여단체 전원이 참가하는 종합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검속 논리

민기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기협) 주축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진행된 목요 집회에서 전국연합의 신미애씨는 경찰이 “90년 이후 범민족대회마다 폭력시위가 있었으므로 5차 범민족대회도 폭력시위 위험이 있다는 논리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시작도 하지 않은 범민족대회를 폭력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경찰의 범민족대회에 집회불허는 일제시대의 예비검속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씨는 “범민족대회

가 열린 서울대근처에서 전경들의 공공연한 쇄괴 프 소지, 정문앞에 불도저 대기, 헬기동원 등 폭력은 경찰등 정부당국에서 조장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신씨에 앞서 「구국전위」 조직원으로 발표된 최영준(29)씨 동생 최영훈씨는 “안기부 발표당시 「구국전위」 조직원으로 발표된 형이 정작 기소단계에서는 안재구(61)씨에게 사무실을 임대, 편의제공 혐의로 바뀌었다”며 “우리나라에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석영씨 환송심 첫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 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 5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에서 “황씨가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인적 사항, 핵관련정보 등을 북한에 알린 것도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내린 이 부분 무죄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창복, 황인성씨 18일 검찰송치

황석영씨 환송심 첫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 1면에서 계속)

일),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8월 10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사면위원회는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의 평화적 행사를 침해한다는 점,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속된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추가정보 문의 : 국제사면위원회 런던 사무국(전화 -44 71 413 5500, 팩스-44 71 956 1157,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강기훈씨 사건의 모든 기록! 유서사건 총자료집

'유서대필 사건'의 판결, 이제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전3권 2700여쪽

제1권 : 수사자료(약 800쪽)

제2권 : 재판기록(약 900쪽)

제3권 : 참고자료(약 1000쪽)

구입문의 : 796-8364 / 3책 1질 10만원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민교협, "반지성적, 반양심적 박흥총장 사퇴"

"경상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 중단"도

주사와 색출필요 발언으로 사회여론을 조장해온 박흥총장에 대한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반박성명이 19일 발표되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공동의장 고홍석·고철환, 민교협) 소속 1천3백여명의 교수들은 "박흥총장은 이미 반지성적, 비양심적인 인사로 규명되었으므로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직을 수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박흥총장을 비롯해 공안당국, 보수언론, 그리고 일부대학내 반대학적·반지성적 형태를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상대 9명의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 중단과 공안통치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

부산-경남 민교협(회장 문현병 부산여대교수) 소속 교수 14명은 19일 오후2시 30분경 경상대 총장을 방문해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 결정에 항의했다. 이날 빈영호총장은 전국총학협의의 참석차 출장중이어서 대신 박구부교무처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교무처장과의 1시간 가량 면담을 통해 "폐강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빈총장 출장으로 연기된 학처장회의가 오는 24(수) 일로 잡혀졌다.

불교인권위, 철도·지하철 노동자 돕기 모금

"불교계의 사회적 약자 등한시 반성"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한상범등)는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에서 19일 현재 47일째 농성중인 '철도 지하철 조계사 농성자'를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 불교인권위는 "이번 모금은 그동안 불교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등한시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의의를 밝히며 "지난 시절 종단의 지도 승려들이 앞장서서

민중을 탄압한 것은 불자들에게 큰 치욕이고 중생구제 원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는 이번 모금 운동을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6월 파업으로 구속자 21명, 수배자 6명, 직위해고자 2백 89명 등 7백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중징계를 당해 거리로 내몰렸으며 서울

지하철, 부산지하철까지 합치면 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주는 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청구한 상태에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락처 : ☎ 745-1852, 주소 : 제일은행 128-20-303720 예금주 박용도 (진관)

노동법 교실 개최

「구로청년회」(회장 김계섭)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2회 '노동법교실'을 연다. 강의는 월급봉투계산법(8/31), 역사기행(9/4), 근로기준법(9/7), 노동조합법(9/28), 진짜노동자되는 길(10/6)등이다. 오후 7시30분부터, 회비 7천원. 문의 ☎ 863-9015

알림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권운동 *의회,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동입니다.

참여연대는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등 5개 전문센터와 시민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민을 민주주의의 관재이 아니라 주체로 바꾸는 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은 참여연대의 한 전문센터로서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펴 나갈은 물론 인권운동의 전문화, 국제화, 대중화를 위해 이전과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얻는 보다 폭넓은 경험과 시각을 밀거름으로 삼아 <인권하루소식>을 더욱 알차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일동

단체탈방 29 / 전국 장애인 가족 협회

밥을 먹다가 혹은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 있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앵벌이라는 이름으로 구걸이나 강매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다. 그 대부분은 장애인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순순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은 도와줘서 안된다고 흥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때마침 격론을 벌이게 된다. "사지가 멀쩡하면 무슨 일이든지 노동을 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냐, 몇푼의 동정이 오히려 저 사람들을 망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일라치면 "그래도 나는 돈이 있으면 꼭 사준다"고 은근히 자신의 자선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너무 자주 겪는 일기에 귀찮아서 동전 하나로 해결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다.

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 똑같은 승객으로서 지하철과 기차와 시내버스를 탈 수 없는 것일까? 전문가거나 떳떳한 직업을 가진 장애인에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 것일까?

오늘 만나본 '장애인가족협회'가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은 한마디로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사회'이다.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이론연구, 실태조사, 복지제도 등등 무엇이든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을 품고 있는 사회 그 자체이다. 장애인의 노동가능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전혀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 할 지라도 그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그에 걸맞은 보호를 받는 사회, 보통사람의 생산력의 10%도 발휘못한다 할 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물론 쉬운일이 아니고 구호나 캠페인, 지원금 얼마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스스로의 자세전환도 중요하고 다른 누군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먼저 몸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애인가족협회는 출발하게 되었다.

현 조직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몇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81년 청년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밀알들"이 있었고, 이 모임이 91년 「전국장애인가족협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울림터'라는 동아리에서 출발한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91년 창립)가 존재했었다. 이 두단체가 93년 8월 15일 통합하여 현 조직을

나누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는 것은 연구실로 장애인운동 관련 자료 분류작업과 돌발적 사안에 대한 대처, 장애인 관계법에 대한 연구작업, 장애인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고민하는 곳이다. 요즘 주로 고민하는 것은 '지역

사업'으로 특히 청년학생특별위원회와 전국특수교육학과대학생연합회, 자원활동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애인문제의 울

장애인의 노동가능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리무게 되었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 광주, 강원, 제주, 충남, 경남에 8개 지부를 두고 있고 각 지부마다 100여명의 회원들이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장애인정도나 종류의 제한은 없으며 장애인문제에 관심있는 비장애인도 일반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앙사무국에는 회장(황광식), 집행위원장(김대성)과 청년·학생특별위원회, 조직·교육부, 편집·출판국, 대외협력국, 재정사업국의 4개 부서와 연구실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우선 '새날도서방'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새날도서방은 장애인들에게 자료대여신청을 받아서 발송을 해준다. 이때 신청받은 책과 반환봉투를 함께 넣어서 발송하는데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배달을 하며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우편발송으로 바뀌었다. 새날도서방에서는 '새날'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새날도서방과 더불어 일상적 사업으로 매주 일요일 정립회관에서 '일요운동회'라는 이름의 생활체육을 한다.

몸시도 더웠던 올 여름, 서울시내를 누비며 장애인 대학생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문제지만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편의상 추정되는 장애인의 숫자, 그들의 삶! 이번 조사에서도 관계부처, 학교당국, 학생처, 과조교 그 누구도 모르고 파악하고 있지않은 장애인 대학생 생을 찾아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 현재 1백20명 정도를 파악했으며 그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달 28일 자원활동분과가 직장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주 1회의 봉사와 함께 고민하고

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가 그 일을 맡고 있다. 지역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간 전국장애인가족협회가 4백만 장애인의 문제를 포괄하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면을 벗어나 구체적인 공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사업의 내용에는 지역선정과 그 지역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관련 활동인력조사, 지역아학 및 공부방 시범 운영, 활동사례집 기획등이 있고 장애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문제에 접근하고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하여 간담회와 공동세미나, 장애인·학생 대동제를 가진바 있으며 그것을 통해 장애인운동에 대한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각 단체의 역할을 고민해왔다.

장애인가족협회는 그간 싸움 일이 많았다. 장애인관련시설의 비리를 폭로하며 무지무지 속상했던 싸움, 장애인관련시설과 학교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편견에 맞선 서러운 싸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안에 등돌린 기업에 맞서는 버거운 싸움,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하는 싸움 등을 그간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가로막은 보도의 높은 턱을 뒷사람의 힘으로 밀고 넘으며 해왔다. 많은 사람이 지쳐나갔고 지금도 지쳐가고 있는데 사회는 변할줄을 모른다. 같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가는 세상, 내 동네에 장애인의 학교를 당연시하는 세상은 어디에... 참사회, 참복지, 참사랑의 구호가 신명나게 외쳐질 세상은...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갑절 22일 민주당 집계 통계 국보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

94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시국사건 관련 구속자 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구속자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1년간 구속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6백34명으로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자는 44.6%인 2백83명이다.

특히 이 기간에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백19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의 구속자 2백22명에 비해 두배로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자도 1년간의 구속자 1백4명 보다 75명이나 더 많은 1백79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자의적 범칙용의 지적을 받은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전체 구속자의 33.6%(95명)에 이르러 실적위주의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민주당은 "이런 통계는 마구잡이 인신구속 등 최근의 신공안정국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공안통치를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 "한국국적 획득은 생계유지 위한 부득이한 것"

북한은 19일 김인서 함세환씨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요구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논평을 통해 김인서 함세환씨가 '전쟁포로'라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법도 적십자 인도주의도 안중에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비전향장기수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고 주장, 국제문제가 이들을

송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민변」등 인권단체와 광주·대전지역의 재야단체들은 작년 6월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통일원장관, 국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등에 두 사람의 송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폐강항의 경상대 방문

22일 오후3시 민교협 고철환상임회장등 2명은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에 항의의 뜻을 전달기 위해 경상대를 방문했다.

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

'사회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을 위한 제2차 준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상훈(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표)·이선태(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곽창규(경실련 국제부장)씨 등이 21일 오후 출발했다. 2차 준비회의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뉴욕에서 열린다.

92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95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은 '빈곤감소, 사회적 통합 및 고용증대'를 주제로 하고 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 구성된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 92년 리우 환경회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85년 나이로비 여성회의의 후속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회의는 대사나 장관급 차원이 아닌 정상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고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제1차 준비회의는 올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대부분의 정부대표와 246개의 민간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뉴욕에서 열렸으며 제3차 준비회의는 내년 1월중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8월 4일 서울경찰청은 김일성주의 청년동맹(김청동) 조직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고려대총학생회는 김청동사건이 단순한 학습모임일 뿐 한총련을 배후조종해온 전국규모의 조직이라는 경찰의 주장이 과대포장되었음을 주장했다. 지난 6월 발표된 구국전위 사건에서도 3차 수사발표과정에서 한총련 배후조종했음을 밝혔는데, 김청동 사건도 한총련 출신 배후조종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어 공안정국 바람을 탄 부풀리기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작성했다는 17건의 '김정일'에 보내는 충성편지를 핵심증거 가운데 하나로 공개했으나 실제 이 '충성편지'는 모두 지난 92년 안기부에 적발된 중부지역당 사건 때 증거자료로 제출된 편지들과 내용은 물론 활자체, 띄어쓰기, 모든 글자 등 한 획도 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측이 물증으로 내놓은 컴퓨터, 디스켓등이 대부분 지난 28일 학교 압수수색과정에서 잃어버린 물건으로 이 물건들은 학생복지위원회 복지 사업 자료로 쓰인 것이라고 학생회측은 밝혔다.

이로써 경찰이 관련 고대생들이 작성하지도 않은 충성편지를 제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김청동은 물론 주사파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데 이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92년 결성된 것으로 밝힌 2·16청년회의 실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16청년회 결성의 주축이 된 강진구씨의 경우 경남 함양에서 방위로 있으면서 배후조종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발표에 따르면 2·16청년회는 조직원인 신창현씨(93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임시 대변인, 94년 한총련 집행위원, 수배중), 김만수씨(가명, 서총련 북부총련 조직국장)등을 통해 한총련, 서총련 및 서울지역 각 지구총련에 파견망을 구축, 김청동 조직원과 연계 활동등으로 학원가 배후활동을 조직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발표이후 10일 최도형씨(고려대 심리 84)만이 검거됐을 뿐 2·16청년회 조직원이 고려대생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한총련 배후조종이라는 발표는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2·16청년회 조직규모가 고대 조동위 및 단대 조동위 조직원 약 1백여명을 추정한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단과대 조동위는 각 1인씩으로 오히려 학생회측이 단과대 조동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는지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이 공안정국을 부추기기 위한 사건이 아닌가는 의문을 갖게하는 또 다른 이유는 90년 12월 결성되어 93년 한총련 출범이후 현재까지 활동해온 김청동의 활동상황이 거의 전무하다는데 있다. 활동하지 않는 조직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8월 4일 가진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경찰은 김청동 결성시기를 92년과 94년을 엇갈려 발표했다. 또한 실제 인물들을 전부 가명을 쓴 점등에서 사건조직의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90년 12월 결성된 김청동은 김충일씨(미검, 가명)·김석훈씨(미검, 가명)등 4명이 모여 결성했다고 밝힌 반면 안병일씨의 구속영장에 의하면 김태형씨(가명 김충일)의 주도로 김도현씨(가명)등 3명이 결성했다고 나와있어 경찰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고대학생회측은 '김석훈'씨의 가명이 '김충일'임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경찰측이 밝힌 명단중 많은 부분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이 과대포장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졸속수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상철씨와 박관용씨와의 학습을 위한 몇 번의 만남등 몇몇의 학습모임이다. 이상철(가명 이상두)씨의 경우 붙잡히기 6개월전 미행을 당해왔다는 확인이 든다고 구속추경절차에서 밝혔는데, 미행과정에서 박관용씨와 93년 9월부터 12월 사이 몇 차례 만나 대담방송녹취문을 읽고 토론한 것이 유일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김청동과의 연계성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김청동은 과거 정보에서 추론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92년 발표된 중

부지역당 사건으로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심상득씨(고대 통계학과 89)의 공소장에 김청동과 안병일·강진구씨 등의 이름이 거론된 점,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성북경찰 한 형사가 총학생회로 '민족고대조국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건을 터뜨리겠다고 말해온 사실등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8월16일 학교를 찾아온 심상득씨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얼마전 상득이를 수사관이 찾아와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한다.

또한 구속된 사람들 거의 전부가 학생회 활동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이미 졸업후 취업준비나 대학원 공부에 몰두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한총련을 배후조종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차현민씨의 경우 91년 8월부터 대학원 준비로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82년 8월 고대 신방과 대학원을 진학해 94년 6월 논문이 통과된 상태로 구속직전까지 취업준비중이었다. 차씨가 학교공부에만 몰두한 사실은 주위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청동 사건은 조직구성에서 드러난 점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구속적후 이상철씨 접견을 신청한 유선영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 접견금지령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씨의 가족은 접견을 방해한 성남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 불상의 2명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화남경찰청장 앞으로 지난 17일 변호사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구속자들이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측은 긴급구속 이유로 박관용씨의 경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복사, 소지, 운반, 반포, 취득한 자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측 수사가 긴급구속 남발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다. 긴급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청동사건의 경우 긴급구속장 발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 알 린 다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전 (136-0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05번지
- 미국산 자동차 구입강요 항의서한 전달 ·일시 : 8월 23일(화) 오전 9시 ·장소 : 교보문고 앞 집결 후 미국 대사관 앞 이동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안에 강력 반발 '유엔 공식 조사활동에 협조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윤정우·김희원, 정대협)는 23일 일본정부가 밝힌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에 대한 보상안에 대한하는 조치로써 일본내 민간모금 형식을 통한 위로금 지급계획을 철회하고 개인배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민간위로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나서서 민간위로금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법적 책

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또 "올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전쟁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등에 정보를 인권침해의 범죄자 불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낼 것을 결정"한 사실과 "특별조사관에게 일본이 2차대전동안 주로 한국여성등을 군대위안부로 동원한 데 대한 첫 공식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을 상기시키며 "일본정부에 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을 적극 돕고 일본정부 스스로 진상을 조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의 종전 50년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일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필리핀 위안부와 함께' 등 19개 인권단체와 카와야 후미코(작

가), 아리미즈켄(아시아 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9명은 22일 '일본정부의 민간기금 통한 위로금안에 대한 연대성명서'를 통해 무라야마 수상에 "아시아-태평양 전쟁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전후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을 대 전환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일본정부에 △'아시아 교류센터', '아시아 여성 자립센터' 등 전후보상과 관계없는 구상의 백지화하고 전후보상문제 해결책의검토를 우선할 것,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이 아니라 국가의 가해책임 인정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사죄, 보상할

(2면에서 계속됨)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시위대 중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에 깔려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중분(55)씨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면서 합리적인 정도를 넘는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극히 빠른 시간안에 포위하고 폭행까지 하는 바람에 시위자들이 인근 골목길로 도망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건 현장에서 김귀정이 땅에

쓰러져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씨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불법시위에 참가해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91년 5월 전국 22개 지역에서 열린 '노경권 퇴진 제3차 국민대회'에 참가해 퇴계로4가 대한극장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골목길로 쫓긴 시위대에 깔려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해 소송 제4차 재판 ◆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민사지법 559호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해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또는 당사자는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의 총무 박래군에게 미리 연락주시시오.
(전화 796-8364)
(다음 고문피해자 가족모임은 10월 하순에 열립니다)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지난 94년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 46차 인권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기에서 중요하게 결정한 것은 결의안(resolution)으로서 「차별방지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채택을 권고하였다(E/cn.4/s-ub.2/1994/L.13)라고 결정된 점이다. 또한 결정사항에 일어나는 여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스(Ms. Linda Chavez, 미국)가 제 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 정 부간 기구, 민간단체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신대 문제가 국제적으로 처음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조사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린다 차베스 씨는 면담을 통해서 "96년 4월이나 5월 이주간의 일

정도로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1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협조"라고 설명했다. 북한정부는 이미 공식적 방문을 요청한 상대라고 전해지며 필리핀 역시 정부가 초청할 수 있도록 요청 중이라고 전해진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정대협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코마라스미(Ms. Radhika Coomaraswamy)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제1차 총체적 보고서(95년 2월에 제출), 가정내 폭력을 다루는 제2차 보고서(96년 2월에 인권위 제출) 국가에 의한 폭력을 다루는 제3차 보고서(97년 2월 인권위 제출)에 군위안부 문제가 정확히 기술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차 보고서와 3차 보고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일본 정부에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정신대문제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위

◆ 공 판 안 내 ◆

- 8월 24일(수)
 - 경제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9회
 - 박치관, 국가보안법, 2시, 421호, 속행
 - 조승희, 국가보안법, 4시, 424호, 속행
 - 배진성, 업무방해, 2시, 421호, 속행
 - 정재원, 특경가법, 2시, 425호, 42회
- 8월 25일(목)
 - 박중호의 2, 특수공무집행방해, 11시 30분, 319호, 1회
- 8월 26일(금)
 - 신학철, 국가보안법, 3시, 422호, 속행, 항소심
 -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0분, 321호, 속행
 - 박한상, 존속살인등, 2시, 319호, 4회

원회에서 미국의 교묘한 방해로 유산되었던 "특별보고자 임명"이 부결된 이후 유엔에 의해 공식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48년 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종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어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중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 연합」(의장 서광일, 부경총련)은 23일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부산-경남 지역 학생이 경찰에 무더기로 강제연행된 사실과 관련하여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황용하 부산경찰청장, 시내 13개 경찰서장 등 모두 15명을 불법감금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24명이 낸 고소장에서 학생들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데도 무더기로 강제연행해 불법감금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과 피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내부부장관과 경찰간부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부경총련은 앞으로 내무부장관등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성모옥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공판이 23일 오후 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신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은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1면에서 계속)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사결과나 제언을 존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서울지하철 구속수배철회와 대량징계분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

- 일시 : 8월 26일(금) 오전 10시 ~ 8월 27일(토) 24시
- 장소 : 대학로 씨스쿼치 호프(전화 747-8778)
- 주최 : 서울지하철노조(전화 243-3321, 214-8490)
- 주관 및 후원 : 전지협, 서투노협, 전국연합, 전노대, 전지협 공대위, 공공부문노조, 3종단 대책회의, 각부문 전문노래패

제132차 정대협 수요시위

- 일시 : 94년 8월 24일 12시
-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 주관 : 한국성폭력상담소(전화 576-7128)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검찰, 구인실패

검찰은 24일 새벽 3시 55분경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범원으로 부터 정진상(경상대 사회학), 장상환(경상대 경제학) 교수 등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다.

진주경찰서 및 경남도경소속 3개중대 4백여명의 경찰은 이날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시도철회를 요구하며 8일째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던 사회과학도서관과 교수연구실에 진입하여 정, 장 두교수를 찾았으나 교수들이 농성장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

로써 구인에 실패하고 새벽 4시 20분경 철수했다. 농성중이던 교수들은 건물주위에 있던 학생들의 고향을 듣고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구인을 당하지는 않았다. 교내진입 과정에서 경찰은 인사사회관을 강제로 열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진입으로 이를 막는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다.

구인에 실패한 경찰이 되돌아나오려할 때 교내에 있던 학생 1백여명이 경찰관들이 타고간 차를 가로막고 구인에 항의하는 소리를 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검찰은 구인장 만료시한

인 오는 30일까지 이들의 소개가 파악되는 대로 구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앞둔 대신 자진출석을 종용하기로 했다.

민교협, 경상대 민교협, 사회학교수 구인시도 강력비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상대 민교협」은 24일 성명에서 "경찰이 교수를 잡아들이기 위해 심야에 학원을 침탈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는 물론 군사정권 시대에도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원침탈 사태는 최근 박홍총장의 자기발언 뒤집기 행각에 대한 검찰의 곤혹스런 반응이 보여주듯이 공안통치의 모순이 드러나자 검찰당국이 궁지에 몰려 행한 망둥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고철환, 고흥석)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야에 경찰을 투입하여 교수들을 붙잡아들이려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검찰이 문명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교협은 △경상대 교수들에 대한 강제구인 기

도의 즉각 중단, △검찰총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사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철회,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통제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진균(서울대), 서관모(충북대), 박상태(서강대) 교수등 사회학 교수들도 24일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던 교수의 '교수권'과 '수업권'을 사법적 대상으로 침해하려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조차 무시한 행위로 규정한다"며 △경상대 교수에 대한 수사 및 인신구속의 시도를 중지할 것, △대학의 '교수권'과 '수업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시도를 중지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일부 제도권언론에 균형적 보도태도를 되찾을 것을 촉구했다(2면에 성명서 전문).

신공안정국 돌파 논의

민가협 수련회

민가협은 지난 8월 22일에서 23일까지 충북 보은 동양일보 연수원에서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련회를 갖고 신공안정국 추방을 94년 상반기평가를 통해 결의했다. 또 장명국(주간 내일신문 운영위원장)씨의 '신공안 정국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이적성 수사는 끝내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개설과목의 폐강으로 가는가.

지난 16일 경상대는 교양과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의 폐강을 잠정결정하고 학처장회의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이 폐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필자들에게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없을 것”이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연기끝에 23일 열린 학처장회의에서는 2학기 폐강여부를 결정짓는 과목심의회 『한국사회의 이해』는 의안으로 올리지도 않아 사실상 유보했다.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한 다음주에 수업이 시작되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여지가 많았던 조건이었다. 지난 1학기 수강신청에서 2백70여명이 이미 수강을 신청한 『한국사회의 이해』를 폐강하기에 명분이 없었을 뿐더러 박홍 서강대 총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으로 공안정국에 틀이 생겼다고 판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19일 경상대를 항의방문했던 민교협관계자에게 박구부 교무처장은 “폐강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기도 했다.

결국 “폐강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법처리 재검토에 들어갔던 검찰에게 공을 넘긴 것이었다.

검찰은 경상대가 23일에도 폐강결정을 하지 않자 24일 새벽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과시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자신이 없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받을 명분을 쌓기위해 구인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홍총장의 최중우를 발언이 세상에 밝혀져 마녀사냥 분위기가 주춤하다가 “북한이 갑자기 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장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24일의 구인시도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이제 제2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동 기소 1명 석방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김정동사건과 관련, 이상철(26, 고대

서문3)씨등 6명을 국보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윤형금(23, 고대 언어4)씨는 반성 의 빛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했다.

◆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

8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559호실에서 열리는 고문피해자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에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이 열린다.

이번 고문피해자 가족모임에서는 고문피해자의 법정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또는 당사자는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총무 박래군에게 미리 연락주시시오.

(전화 796-8364)
(다음 고문피해자 가족모임은 10월 하순에 열립니다)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최근 경상대학교의 교양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 및 관련 교수들에 대한 공안정국의 수사는 우리를 사회학교수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검찰의 발표 및 수사진행과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학교수의 학문적인 저술과 강단에서의 강의내용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로 규정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우리는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강의활동에 대한 수사가 헌법 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교재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들 중에서 대학강단에서 학술적인 수준에서 토의된 학문적 연구업적과 사상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곳이 지구촌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다. 학술활동 및 그 성과물들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경우에는 오직 대학 내부의 학술적 비판과 토론에 의해서만 그 성과가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학문과 사상을 공안기구의 비학술적 판정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문민정부 하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더욱더 우리 사회학자들에게 놀라운 것은 공안정국의 수사가 강의 중에 교수와 학생들 간에 이루어진 토의내용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된 부분이 있다. 정치적 사건조작의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이같은 무리한 수사태도는 우선 그 방식에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정권 하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던 교수의 ‘교수권’과 ‘수업권’을 사법적 대상으로 삼아 침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법당국의 이와 같은 태도를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조차 무시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학 교수들은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인 사상탄압이 이 한 반도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좀더 성숙된 사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

◆ 우리의 요구 ◆

1. 경상대교수에 대한 수사 및 인신구속의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반시대적인 강제구인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대학의 ‘교수권’, ‘수업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일부 제도권언론은 균형적 보도태도를 되찾을 것을 요구한다.

1994년 8월 24일

경상대사태를 염려하는 사회학교수 일동(명단생략)

◆ 행사 안내 ◆

◎사월혁명연구소 월례발표회

·주제 : 정세변화와 학문·사상의 자유
·발표 :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일시 : 8월 25일(목) 오후 5시
·장소 : 사월혁명연구소 사무실(☎ 888-3682)

◎제49차 민가협 목요집회(☎ 763-2606)

·일시 : 8월 25일(목) 오후 5시
·장소 : 탑골공원앞

◎서울지하철 구속수배철회와 대량징계분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일시 : 8월 26일(금) 오전 10시 ~ 8월 27일(토) 24시
·장소 : 대학로 씨스퀘어 호프(전화 747-8778)
·주최 : 서울지하철철회조(전화 243-3321, 214-8490)
·주관 및 후원 : 전지협, 서투노협, 전국연합, 전노대, 공공부문노조, 3중단 대책회의, 가부문 전문노래패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문국진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씨 제4차 손배소송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4차 공판이 8월 25일 오후 4시에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씨를 2년간 직접 진료한 배기영 원장(동교신경정신과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나온 배 원장은 “문국진씨는 정신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거의 감정도 통에 문제가 없었고, 발병 전에 성격이나 적응력도 좋았다. 그러나 구속 도중 갑자기 발병한 것이 특이했다. 또한 발병 후 결혼 생활과 두 권의 저술활동 및 원만한 직장생활 등은 일반 정신질환자들과는 매우 다른 점이다”고 증언하였다. 또 배 원장은 “문씨가 치료기간 중에 다른 증세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를 두려워 하고, 글자 중 ‘ㅇ’자에 대해, 또 검은 색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속되었다”면서 “80년과 86년 두 차례의 고문 중 발병과 직접 관련있는 것은 86년의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문씨의 경우 구속중 수감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성기나 목을 자를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렸고, 이런 급성 편집증적 반응이 만성이 되어 ‘심인성 편집증

적 정신병(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발전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문씨는 86년 구속되어 3년간 잠을 자지 못하고, 구타와 위협에 시달렸고, 면회도 금지되었다. (2면에서 계속)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개설 8월 29일, YMCA

「한국YMCA 전국연맹」(사무총장 장문규, YMCA)은 10만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개소식을 8월 29일 갖는다. YMCA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극도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권유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중계실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8월 29일, 공대위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고철환, 학문 사상표현 공대위)는 ‘김영삼 정부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란 제목으로 29일 2시 서초동 변호사회 별관에서 대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를 강제구인하는 모습에서 보여주듯이 학술적 성과에 사법적 잣대로 재

단하려는 공안당국의 탄압에 맞서 보다 객관적인 학술적 평가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집행위원장은 서울대 서양사학, 발제는 “신공안정국과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김상곤 한신대 경영학),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이종오, 계명대 사회학),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민변 변호사)이며, 토론사회는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토론자는 김영현(민조작가회의), 이광호(언노련)씨가 참석한다.

강좌 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경찰의 강제구인 시도에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이창호교수 등 8명은 “현재 활동의 쫓겨 폐강문제에 맞추고 있으며, 사법처리문제는 경상대 교수와 변호사 각 1인씩을 증재인으로 내세워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강이 다음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단 이번 주내로 사법처리등의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이교수는 내다보았다. 25일 현재 사회과학대 도서관에서 폐강철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상환 교수 등은 24일 새벽 경찰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시위용으로 본다면서, 그 이유로 경

찰 투입시 주변 연구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행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한편 경상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의 대학난입에 항의하며 “학교당국은 폐강조치를 철회하고 전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재우고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은 외대 용인캠퍼스 양태조(인도어 88)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최낙운(아프리카어 89)씨 검거에 나섰다. 양씨를 포함한 김정미(아랍어 91)·이정익(중국어 89)씨 등은 올 1월부터 최씨 주도로 「주체사상연구회」를 구성, 소모임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 3명은 경찰이 지난 15일 밤 10시경 한양대에서 연행한 후 17일 저녁까지 거의 잠을 재우지 않고,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19일 면회는 가족들에게 밝혔다. 경찰은 18일까지 가족들이나 학교측에 연행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16일 새벽에는 이들의 자취방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은 19일 오후 4시30분경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용인캠퍼스 학생회관과 인문대를 수색하였으며, 동아리실에 있던 20여명을 강제연행한 후 3시간만에 풀어주기도 했다.

국제인권소식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등 다뤄 여성, 노동, 장애인, 노인, 아동단체 등 적극적 참가

【뉴욕=이성훈】 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가 정부대표단, 정부간 기구 및 약 3백여명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22일 개막되었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아직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난과 늘어가 는 실업, 그리고 난민, 기아, 에이즈, 범죄 등 현재 지구촌이 직면한 사회문제는 인류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개발 정상회담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사회개발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9월 2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미 본회의에서 배포된 정부대표들의 선언문과 행동강령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2차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동강령에는 유지가능한 환경, 광범위한 가난의 감소와 제거, 생산적 고용과 실업의 감소, 사회통합, 이들의 실현방안과 후속사업 등 5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올 1월 뉴욕에서 열린 1차 준비위에서 나타났듯이 이번 회의에서도 가난, 실업 및 사회통합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서로 다른 입장이 표출되었다. 양측은 전지구적 문제의 심각한 증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였지만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에는 첨예한 차이를 보였다. 남측은 제3세계의 가난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북의 선진국 이 보다 많은 재정지원과 외채탕감 등의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북측은 개발의 효과적 배분과 효율적인 경제개혁과 인문대를 수색하였으며, 동아리실에 있던 20여명을 강제연행한 후 3시간만에 풀어주기도 했다.

본회의의 병행행사로 열리는 민간단체회의는 부문별 대회, 주제별 워크샵, 정부대표단과의 간담회, 지역별 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여개의 민간단체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미 발언을 하였다. 부문별대회의 경우 여성, 개발, 아동의 권리, 청년 등의 주제별 모임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한편 매일 오후 2시에는 각 대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대표의 본회의 경과를 요약, 보고하는 민간단체 전체모임이 열리고 있다.

첫날 열린 민간단체 전체모임에서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제3세계 네트워크의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마틴 코씨는 “초안과 행동강령이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문제의 증상만 나열할 뿐 원인과 구조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초안을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초안이 제3세계 구조적 가난의 주원인인 초·다국적 기업의 착취, 원주민의 개발의 권리 등이 제대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코펜하겐 대회가 알맹이 없는 또 다른 형식에 치우친 회의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인권봉사회사의 마크 톰슨씨도 8월초 제네바에서 열린 70여개 인권단체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구속력없는 선언문과 행동강령보다는 이미 대다수 국가가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과 이를 감시하는 인권기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사회개발문제에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 준비위는 1차 준비위에 비해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했으나 아태지역의 경우 약 20여개 단체만이 참가해 다른 대륙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대표단중 반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앞둔 민간여성운동단체의 적극적 참

여가 돋보였다. 아태지역의 경우 25일 오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단체의 간담회, 26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아시아 민간단체 대표단의 간담회가 열려 사회개발회의의 공동준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인권협대표인 본인을 포함하여, 기사연의 이선태 선임연구원, 경실련 광창구 국제국장 등 3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준비 및 논의내용 파악, 국내외 아태지역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내용을 점검등과 한국 정부대표단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여성은 물론 노동, 장애인, 노인, 청년, 아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회개발에 대한 국내 민간단체의 이해와 관심이 매우 협소함을 느끼게 했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대표단이 자국의 이익에 얽매어 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사회개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였다.

한국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발언의 내용도 비록 국내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고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서대원 외무부 국제기구 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총리실, 노동부, 경제기획원, 여성개발원 등의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였다.

(1면에서 계속)

이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의 법정 지정 대리인인 박찬홍씨(청량리 경찰서 소속)는 반대신문을 통해 문씨가 86년 구속 이전부터 특이한 정신적인 기질을 보였으며, 구속 당시 고문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문씨가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와 방청하였다. 앞으로 재판은 문씨가 경찰 구속 이전부터 발병하였고, 청량리경찰서에서 고문(또는 가혹행위)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는 피고측과 고문에 의한 후유증을 입증하려는 원고측의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559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 몰아 9명 구속

사민청 85년 결성 26일 새벽 1시경 압수수색, 유초하교수등 수배

안기부는 26일 새벽 「사
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의
장 홍승문, 사민청) 사무실
을 압수수색하고, 권오창
(58·사민청 지도위원)씨등
9명의 회원을 이적단체 구
성등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초하 충북대
교수(사민청 정치학교 교
장) 등 3명을 수배하였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26일
오전 1시30분경부터 오전
3시까지 사민청 사무실(중
로3가 소재)을 압수수색영
장을 제시하고 수색하여
컴퓨터 팩스등 100여점을
압수했으며, 같은 시각 홍
승문(27·사민청 의장)씨등
9명을 각자의 집에서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과 함께 연행하였다.
사민청 회원들은 "85년 창
립되어 활동하여 왔으며,
정치학교도 89년에 개설한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
의 기회를 주어왔다"고 주
장하며 '주사파 조작기도
중단과 학문사상의 자유 보
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연행자 명단 : 권오창, 최형
록(36·지도위원), 최창우(38
·전 의장), 홍승문, 최인기
(28·지부준비위원장), 김영
호(27·회원), 이정아(27·총
무국장), 정승희(27·문화위
원장), 방진옥(25·조직국장)
수배자 명단 : 유초하(49),
성세경(29·사무처장), 김경
란(29·민중교육위원장)

◆ 행사 안내 ◆

◎정대협 토론회

-일본군 '위안부' 민간위로금이 과연 해결책인가
·발제 : 정대협의 운동과 일본정부의 반응(권희순 총무)
·토론 : 이장희 외대 법대학장, 김원웅 민주당 의원, 정
숙자 여성교회 목사
·일시 : 8월 29일(월)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정대협 ☎ 263-2802)

◎김영삼정부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발제 : 1)신공안정국과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김상곤)
2)『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이중우)
3)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일시 : 8월 29일(월) 오후 2-5시
·장소 : 변호사회관(서초역 부근)
·주최 :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

◎YMCA 외국인 노동자 증계실 개소식

·일시 : 8월 29일(월) 오후 3시
·장소 : 한국YMCA전국연맹 3층 회의실(☎ 754-7891)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

폐교철회 밤샘농성을 10
일째 벌이고 있는 『한국사
회의 이해』 공동집필자 장
상환·정진상등 8명의 교
수는 26일 오후 4시 경
상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일까지 검찰의 구인장에
응할 것임을 밝혔다.

교수들은 "경찰병력이 신
성한 대학에 진입하는 것
을 용납할 수 없고 다시
진입할 경우 학생들과의
충돌을 우려한다"며 구인
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했
다. 또한 자신들은 공권력
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것일 뿐 공권력 자체를 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
다. 출두 시기와 방법은
논의중이다.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정부와 민자당이 기업활
동유계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장애
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
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계
의 주장에 이어 24일 「전
국노동조합대표회의」(공
동대표 권영길등)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포기이
어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이는 재벌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
한 결과로 장애인고용등
국민 대다수의 공공복리와
사회보장을 일방적으로 회
생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
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
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및 3백인 이상 사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
로 두고 있으나 실제로 기
업고용률은 0.39%, 공무원
고용률은 0.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씨 구제 공대위 결성

지체장애인협회 대전지
부, 한국장애인연맹, 대전
기독교교회협의회 외 인권위
등 6개단체는 26일 「정강
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
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
다. 이후 7급공무원 임용에
서 장애인 구분선발을 촉
구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
이며, 30일 오전 9시30분
대전경찰청 기자회견에서 기
사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봉환(대전NCC 사무국
장)씨는 "현재 재판중인 정
강용씨의 요청에 따라 모
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
면서 "정씨의 경우 군필 가
산점때문에 탈락했는데, 우
선 장애인 구분선발에 초
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32·지체3급)씨는 93
년 8월 충남도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공
채시험에 응시했으나 군필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해
낙방했다. 따라서 그해 12
월 충남도를 상대로 '불합
성명'을 통해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포기이
어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이는 재벌들의

단체탐방 30 /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무슨무슨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돌아서서 오두막
집을 읽거나 TV를 '뿌리'를 보면서
흑인노예의 입장에서 가슴 아파한 경
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와이에
처음 이민노동자 우리 선조의 이야기
나 일제가 행한 정신대만행을 접할
때면 피가 거꾸로 솟
구치는 분노를 느껴보
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연스런 것
에 대한 의심과 회의
가 물러온다. 가리봉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의
계단을 오르면서 말이다. 말이 건물 5
층이지, 시멘트 옥상에 슬레이트 지붕
을 올린 방 두칸에 불과한 이곳을 찾
은 노동자는 한달에 1천여명에 이른
다. 어께가 부서지고 손이 찢리고 임
금을 때리고 강간을 당하여 이 보잘
것 없는 곳을 의지삼아 오는 사람들
이 그만큼 많고 때론 시체가 되어 그
한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한해 30
여건에 이른다. 밖으로 문이 잠긴 감
금상태에서의 하루 20시간 노동, 전기
불이 없는 방에서 1년을 생활한 청년,
여관에 가야만 여권과 월급을 주겠다
는 위협을 당한 필리핀 처녀, 술에 취
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한국인, 산재를 가장한 의문사, 시체
유기...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험악한 현실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오두막,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외국인 노동
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찾아주고자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 노
동자 피난처는 바다교회공동체 중의
하나이다. 바다교회공동체란 사랑은
말도 아니고 제의만도 아니고 삶속
에서 실천되는 진정한 예배라는 인
식 아래 바르게 하나님과 이웃사랑
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임으로서 농
촌공동체(평화의 의지), 도시공동체
(꽃들에게 희망을), 제3세계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중 도시공동체가
90년 6월에 구로공단에서 '사랑의
고리 공방'을 열고 3년간 사업을
하던중, 공단지역에서의 외국인 노
동자의 현실을 보고 92년부터 외국
인노동자피난처 사업을 시작하여 오
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올해
는 제3세계 공동체사업의 실험을 시
작하는 해로서 「귀향한 외국인 노동
자 산업재해 보상금 찾기 시민

모임」을 만들었고, 해외사무소를 개
설하면서 본격적인 제3세계 공동체
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 그 예로
서 내팔공동체는 한국정부로부터 보
상받는 운동뿐만 아니라 자기나라에
서 소외됐던 장애인이나 이웃을 돕
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피난처의 활동양식에는 몇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기업주의
양심에 호소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
가의 화해」를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을 때 돌아온 것은 10년, 심지어
30년까지의 약속을 우롱한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4개월정도를 보낸 후
얻은 결론은 '정의없는 사랑'이 힘에
의해 무자비하게 강요될 때는 '중요
없는 사랑'의 형태로 맞서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피난처
의 사람들은 이를 '창조적인 긴장'이
라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항의집회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되자 당장에 기
업주와 경찰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
법도 한두 사례에 가능할 뿐 한달에
천여명씩 몰려드는 방문객의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세 사람의 실무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이었다. 그래서 개인적 차선에 호소
하고 사례별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
니라 우리사회의 공동체의 윤리를
바로 세우고 구조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올해 초에 노동법의 전면적용을 요
구하며 경찰력에서 농성을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산재보
상적용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권리를 잘 모르는 것을 이
용하여 산재를 당하면 기업주들이
보상없이 강제출국시켜버리는 경우
가 많아, 이미 귀국한 9천여명의 노
동자들이 본국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 시작하게 된 것이 보상금
찾아주기 운동이다. 산재보상은 3년
이 소급적용되므로 그 대상자를 찾
아내고 있다. 이 일을 위해 지난 6월
5일에서 7월 20일까지 동남아시아 7
개국을 돌며 국가별 산재자 조직을
만들고 언론 홍보와 국외사무실 개

소 등의 일을 피난처의 대표 김재오
전도사가 하고 왔다. 산재보상금 찾
아주기 시민모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자원봉사자
가 필요하다. 언어의 장벽을 고민하
지 말고 찾아와서 외국인들의 벗이
되어주고 병원가는 일이나 노동부에
출석하는 일 등에 동
행해주는 등의 도움
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국외사무실에
거주하며 외국인 산
업재해노동자 모집활
동에 참여할 사람과 유족등이 보상
을 위해 입국할 때 거처를 마련해 주
고 함께 생활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
이 모임의 활동이 어느정도 끝나면
'제3세계찾기여행'을 함께 떠날 계획
이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대할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크
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이다. 그러
나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어겨 체
류기간을 넘겼다 할지라도 이들의
노동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취업은 이미 10만명 이상으
로 추정되고 있고 상공부 통계로 볼
때 한달 398만원, 1달에 5억불이상
을 우리에게 벌여주고 있다. 근로기
준법이나 헌법에서 나타나는 '노동
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처우를
하면서 저들을 불법이라 매도하는
것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
을 하는 모순된 일이다. 특히 기업
주들이 '법대로 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법대로 한다면 그들은 다 처
벌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
리도 힘든데...'이다. 이는 특히 우리
노동자의 손해라는 생각으로 나타나
는데 한 가지 차별은 모든 차별의
전제가 된다.
김재오 전도사, 김계금, 조명숙 두
명의 간사가 지키는 피난처는 24시
간 열려 있다. 운동에서 보람이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중'이 되어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애정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며 이 일을 통해 고통
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의 기쁨을 최
고목표, 최우선으로 삼고자 다짐하
면서.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서울시 가리봉 3동 148-40 정함빌딩
5층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전화 : 612-6717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동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정부의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공청회

'통일정책 추진 방해되는 진보학문 탄압 전조'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 조치와 함께 경상대 교수 8명이 30일 강제구인에 응할 것을 밝힌 가운데 경상대 사건에 대한 학술적 평가와 함께 적법성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많은 사람들의 열띤 참여 속에 열렸다.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는 29일 변호사회서초 별관에서 '김영삼정부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주제

로 공청회를 마련했다. 김상곤(민교협 교육위원장) 교수는 "89년과 94년 모두 공안세력 주도하에 남북문제를 대치해 나간다는 것과 국민의 기본권 요구를 암살하고 이를 주도하는 민주화추진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89년 6공 당시의 공안정국과 94년 최근의 정국 구도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찰 및 안기부등의 공안세력과 내무부, 교

육부, 법무부, 공보처 등이 대책과 방안을 조율하고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자임하는 구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89년에는 전교조등 교육민주화운동이 공안정국의 주요 타격대상이었다

면 이번에는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이 공안정국의 1차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89년 13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약속을 무효화시키고 권력기반을 재생산하려는 기도가 맞물렸다면 이번에는 민자당내 민주계와 공화, 민정계간의 대립적 파벌을 해소하고 내년 선거정국에 대비한 권력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됨)

YMCA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열어

'법률구조, 상담, 의료활동등 사업계획'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강문규, YMCA)은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소식 및 좌담회"를 가졌다.

1부 개소식에서 강문규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맞아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국제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YMCA 사업의 하나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않은 우리의 노동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산업재해의 위험속에 놓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중계실과 연계된 법률구조, 상담, 의료봉사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을 위하여 마닐라 YMCA소속

셀라(25, 필리핀)씨가 1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안산, 부천지역 등의 YMCA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봉사, 법률구조, 상담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무료 한글 교육등을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식과 도덕성을 높이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피난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기술연수생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술연수생의 심각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9월 10일경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일본군 위안부 민간위로금이 과연 해결책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다. 최근 일본정부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고 오는 31일 일본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정대협 주최로 정신대 할머니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일본의 법적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데는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단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설때 더욱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정부가 지난 92년 6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에게 도덕성 살릴 기회를 주겠다.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도덕성을 살릴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원웅(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정신대등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해방 5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성특위산하에 '정신대대책 특별소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대협의 권희순 총무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9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나며 소신과 덕망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 장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임헌법재판소장으로 과거 권력에 영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고 당혹감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정치판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질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위압과 영향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한 사람이 새로운 문명시대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시대의 변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정련간부 긴급구속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 정책국장 이미연(32)씨가 29일 저녁 8시 50분경 민정련 사무실 앞에서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국가보안법 위헌위헌회를 통한 활동, 세제간단단체들과의 연대, 정책입안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운동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일본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면에서 계속됨)

김교수는 또 경상대 사건은 지방소도시 대학의 교수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안물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김영삼정권 세력에 대한 제거작업의 하나이며 지배집단의 권력기반 확충과 권력중심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진보학문을 탄압하고 비판적인 교수를 무력화하려는 전조적인 성격을 띠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한 사회의 학문과 사상의 발전은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며, 고전적 시민권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사회발전의 기본장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육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관계 이데올로기 암송 수준에 묶어 놓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가 어떤 수준까지 추락할 것인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상대 교수들에 대한 공안정국의 탄압사태는 단순히 특정교수들에 대한 진보적 학문에 대한 탄압만이 아닌 전반적인 국민기본권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우(학단협, 계명대 사회학)교수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에서 경상대 사건은 '달리 생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냉전 전시체제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수많은 진보적 입장의 저작물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내놓았다. 민변의 신장수 변호사는 사법심판에 오른 서판모교수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사회주의과학원과 조국교수사건을 짚어보았다. 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문은 학문으로 비판되어야 하며 사법적 강제로 재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것

장상환교수등 경상대교수 8명은 29일 오전11시 학생들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갖고 오후1시 학교앞에서 검찰의 구인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수배해제 촉구

민교협은 사민청사건과 관련 수배된 유초하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교수가 사민청 정치학교교장으로 있으면서 사회구성체 경찰들에게 국가보안법 위헌위헌회를 통한 활동, 세제간단단체들과의 연대, 정책입안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운동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일본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의 주제 - 인권의 보편성>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없다

대한변협·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 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대한변협이 과거 권력에 영합하여 판결을 내린 사람의 헌법재판소 내정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안우만 전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 반대와 헌재재판관 인선원칙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안우만 씨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

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유신과 5·6공시절 정치권력에 영합, 굴복한 대표적인 '정치판사' 중의 한 사람이다"라며 "83년 서울형사지법 수석 부장으로 재직 당시 5공시절 국민의 언론자유를 봉쇄한 악법중의 하나였던 '국가모독죄'와 관련하여, 당시 김영삼 민주당총재 비서실장이던 김덕룡씨에게 국가모독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를 포섭할 수 있는 법철학 및 헌법판의 소유자이고 중립적인 조정 중재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퇴행적인 인사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오재식,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민변, 한국공법학회

등은 오는 9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지금의 헌재재판관들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고 시민이 원하는 헌재재판관의 상에 대해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재재판관 인선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또 공청회에서는 헌법, 행정법 교수와 변호사 등을 상대로 벌인 헌법재판소의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고, 민변은 이 자리에서 안우만 전 대법관의 임명반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제안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두밀리분교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석대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폐교인 경기도교육청이 폐교처분 이유에 대해 조례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책임회피할 기회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다소 재판이 지연되

더라도 확실한 승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방청에는 두밀리 마을주민 10여명을 포함, 「두밀학교살리기시민연대모임」, 서울교대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방학중 마을어린이들의 보충수업을 위해 4주간 열었던 '사랑의 푸른학교' 평가등 대책회의를 서울교대에서 가졌다.

두밀분교 아이들은 지난 3월6일부터 8월30일까지 마을회관 2층에서 수업을 받아왔는데 30일 재판을 지켜본 뒤 주민회의에서 전 학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일시 : 94년 9월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 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한상희 경성대 교수)
- 시민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의 상(홍금예)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

「인권하루소식」 8월분 총목차(218호-238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8/2	218	1	앤네스티,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표명, "특정부분만 언급, 앤네스티의 인권보편성 왜곡"/여대협, 재일동포 폭행사건 대책수립 촉구/고대 재학·졸업생 10명 국보법협의를 구속, 경찰 피의사실공포 자의적
		2/3	「인권하루소식」 7월분 총목차(196호-217호)
8/3	219	1	영등포교도소 폭염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교수까지 다다른 방향없는 신공안 바람, 대검, 90년에 나온 교재 문제삼아 조사 지시/AI 국제사무국, "언론, 남한 인권무시" 유감표명/인권위 집행위 열려
		2	앤네스티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논평/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발췌)
8/4	220	1	이성 잃은 공안바람, 다음은 누구?, 경상대교수에 소환장 발급, 학생들 "어안이 병병하다", 관련교수들 4일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힘 예정/육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칠야농성 돌입/정대협, 유엔 인권소위서 정신대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2	동티모르에서 여전히 '실종' 및 살해가 계속돼, 호주 '티모르의 빛' 긴급호소문 보내와/정부, A규약 보고서 검토회 연기 요청, 내년 5월 열릴 예정/참고자료 : 「한국사회의 이해」 차례
8/5	221	1	"학문의 자유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등 학계 공동대응키로, 5일 오전11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반론권 게재요청서' 제출/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등 재정신청 및 항고
		2	작은 학교의 생명력을 살려 교육의 틀을 마련할 터,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기자회견/서울시경,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 학생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짜맞추기식 조작수사"/「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요약)-「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일동
8/6	222	1	민교협·학단협·민예총등 7개단체 '공동대책준비위' 결성, 집필교수들 정정보도 요청서 제출, 기자 개개인도 고소할 계획/인터뷰 : 김의동 경상대 무역학과 교수(「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장중 1인)/서부경남지역 21개 단체, 학문의 자유 보장 촉구
		2	학단협, 「공안문제연구소」에 공개토론회 제안, "경찰의 강압폐지 강요는 교권 및 학습권 깎아는 것"/한국산업사회연, 불법수색, "전두환정권 때도 없었던 일"/"김정동사건은 조작", 고대 학부위 물품 압수품으로 둔갑/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정동사건' 이상철씨 가족/영등포교도소, 안재구씨 면회제한/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성진씨 가족행위 및 징벌된 남용 손배 소송제기/중앙일보 8월 3일자 사설, "붉은 교수 사실인가"(부분발췌)
8/9	223	1	'프락치협'의 사망사건' 경찰수사 공정성 상실, 불투명한 사인으로 고대생 폭행치사혐의 구속, 병원도착전의 행적수사 외면/비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교도소 "전향하면 처우완화"
		2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사회경제학회·대학강사노조·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9일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8/10	224	1	학문·사상·표현 자유 보장항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상대 경영대 교수/개인배상, 가해자 처벌, 역사교과서 개정선해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프락치협의 사망사건, 병원도착전 대검, 학생조사결과
		2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등견해(전제)
8/11	225	1	신공안정국-시련받는 인권 기획(1)/구국전위사건 신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전기협 농성장 침탈은 일제의 예비검속 해당/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자료제공-민가협)
		2	이창복의장 구속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본격화, 11일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범주본·전국연합·전교조 등 '민족대결주의'에 매달리는 처사/긴급구속장 남발, 족속수사 비난, 영장기각 3명, 불구속 입건 2명/영·호남 지역교수 경상대교수 강제소환 즉각 중지 요구/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등 B규약 위해
8/12	226	1	신공안정국-시련받는 인권 기획(2)/물고문, 담배불 지킴, 사시미 칼 위협, 광주동부경찰서 '수배자 행선지 대라', 여관등에서 고문, 결국 구속/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8월 10일)
		2	신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8/13	227	1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 경상대 총장, 실정법 절차 준수 주장, 민교협, 대학자율권 포기 처사 강력반발/서울시 교육청, 이수호씨등 8명 임용대상 제외, 면담기회도 안 줘, 전교조 '관료행정의 표본' 비난/사망 6명 중경상 52명, 폭발 원인규명 촉구, 인천 진흥정밀화학노조
		2	단체탐방 28 / 직업법대개혁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인권하루소식」 8월분 총목차(218호-238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8/17	228	1	강기훈, 이재야 나왔다, 17일 새벽 만기출소, 강씨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	'대량구속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 재일인권단체, 재일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 서명운동 본격화, 13일 학문·사상·표현공대위/전해투 하계수련회, 8월 18-20일/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폐강/인터뷰 : '유서대필 사건'으로 만기출소한 강기훈씨
8/18	229	1	경상대교수, 강좌폐지에 발생항의농성, 충북대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2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임종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 위배/여성의 전화, 민우회등 상담교육 시작/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
8/19	230	1	이창복·황인성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18일 연이어 입장 발표, 국보법, 표현·결사의 권리등 국제기준 어긋난다
		2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 총장에 항의서한/법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일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왕석영씨 환송심 첫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이창복, 황인성씨 18일 검찰송치
8/20	231	1	민교협, "반지성적, 반양심적 박흥총장 사퇴", "경상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중단"도/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불교인권위, 철도·지하철 노동자 돕기 모금, "불교계의 사회적 약자 등한시 반성"/노동법 교실 개편
		2	단체탐방 29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8/23	232	1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감절, 22일 민주당 집계통계, 국보법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 "한국국적 획득은 생계유지 위한 부득이한 것"/폐강항의 경상대 방문/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련협 등 3개 민간단체
		2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8/24	233	1	민간위로금 철회·전쟁범죄 인정·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안에 강력 반발, '유엔 공식 조사활동에 협조해야/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
		2/3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위해 아시아국가 방문/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중/성모육 사건 항소심 공판
8/25	234	1	검찰, 경상대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신공안정국 돌파 논의, 민가협 수련회
		2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기청동 기소, 1명 석방/경상대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교수 90인 성명(전문)
8/26	235	1	"문국진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씨 제4차 손해소송/외국인노동자 증계실 개설, 8월 29일, YMCA/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8월 29일 공대위/강좌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재우고 수사
		2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여성, 노동, 장애인, 노인, 아동단체등 적극 참가
8/27	236	1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 몰아 9명 구속, 사민청 85년 결성, 25일 새벽1시경 압수수색, 유초하 교수3등 수배/경상대교수 "구인응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공무원 임용탈락 장애인 정강용씨 구제 공대위 결성
		2	단체탐방 30 /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8/30	237	1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통일정책 추진 방해되는 진보학문 탄압 전초전'/YMCA, 외국인 노동자 증계실 열어, '법률구조, 상담, 의료활동등 사업계획'
		2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민정련간부 긴급구속/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것/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 수배해제 촉구
8/31	238	1	권력야합 정치관사, 헌재재판관 자격없다, 대한변협·민변, '정치관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등 예정
		2/3	<인권하루소식> 8월분 총목차(218호-238호)

인권하루소식

94년 9월

(제239호 - 제255호)